

근대 전북 120년

전주학총서 37

근대 전북 120년

초판 1쇄 인쇄 _ 2016년 8월 23일

초판 1쇄 발행 _ 2016년 8월 30일

발행처 _ 전주역사박물관

주 소 _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9

전 화 _ 063-228-6485~6

전 송 _ 063-228-6484

만든곳 _ 흐름출판사

ISBN 979-11-5522-104-4 94900

978-89-93003-88-8 (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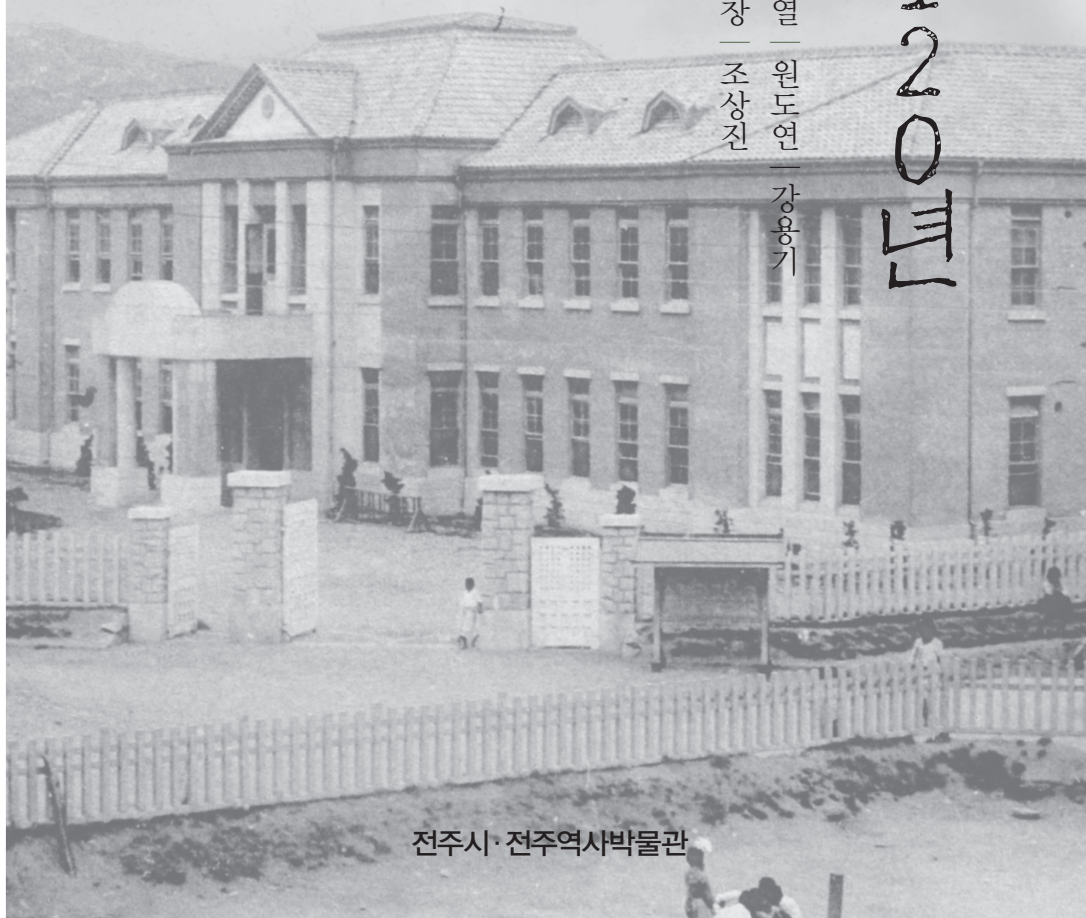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近代全北 120年

근대 전북 120년

김남규 — 소순열 — 원도연 — 강용기
문윤걸 — 광병창 — 조상진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전북의 정체성과 전주

주제 : 전북의 정체성과 전주

일정 : 2016년 9월 3일~10월 29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문의 :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6)

강좌 내용

구분	강의일	주제	강사
1강	9월 3일	전북의 정치행정과 전주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2강	9월 10일	전북의 사회구조와 전주	원도연(원광대학교 교수)
3강	9월 24일	전북의 경제활동과 전주	소순열(전북대학교 교수)
4강	10월 1일	현장 답사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5강	10월 8일	전북의 행정구역과 전주	강용기(서남대학교 교수)
6강	10월 15일	전북의 문화 창달과 전주	문윤걸(예원대학교 교수)
7강	10월 22일	전북의 예술 진흥과 전주	곽병창(우석대학교 교수)
8강	10월 29일	전북 출신 인물과 전주	조상진(前 전북일보 논설위원)

지역사회 관점에서 본 전북 정치 현상 _ 김남규 9

1. 서론
2. 지역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3. 전라도 그리고 지역 정치
4. 지역 정치에 대한 자각
5. 지역독점정치, 행정관료정치 심화
6. 다시 지역 정치
7. 결론

전북의 경제활동과 전주 _ 소순열 33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 전북 경제활동의 변화
3. 경제개발과 전북 경제
4. 맺음말

근대 이후 전북의 사회변동과 전주 _ 원도연 69

1.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2.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구조
3. 근대화 시기 농업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변화
4. 근대화 이후 전북의 인구 변화
5.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전주

전라북도와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_ 강용기 93

1. 서론
2.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3.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4.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인구 규모 변천
5. 요약 및 결론

사회사로 본 전라북도 문화지형의 변화 _ 문윤걸 127

1. 시작하는 말
2. 197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3. 198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4. 1990년대 전라북도 문화지형
5. 2000년대 이후 전라북도 문화지형
6. 글을 나오면서

20세기 전북 공연예술의 흐름과 특징 _ 광병창 149

1. 20세기 전북 공연예술의 범주와 그 뿌리
2. 전통 연희의 계승과 발전 ‘소리’를 중심으로
3. 창극의 흐름과 특징
4. 연극의 흐름과 특징
5. 나가며-전북 공연예술의 특징과 과제

인물로 살펴본 전북 120년 _ 조상진	183
-----------------------------	-----

1. 선정 기준
2. 정치·행정 분야
3. 애국 항쟁 분야
4. 사회 분야
5. 경제·산업 분야
6. 학문·교육 분야
7. 문화·예술 분야
8. 종교 및 체육 분야

[부록] 전북 인물 120년

지역사회 관점에서 본 전북 정치 현상

김 남 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서론
2. 지역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3. 전라도 그리고 지역 정치
4. 지역 정치에 대한 자각
5. 지역 독점정치, 행정관료정치 심화
6. 다시 지역 정치
7. 결론

1. 서론

이번 강좌 취지는 전라도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된 지 120주년을 맞아 전라도와 함께 전북의 정체성과 역사를 돌아보는 데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행위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지역 정치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도 아닌 현장 활동가인 필자가 지역 정치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론적 체계로 정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운동가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가 혹은 전략가의 역할을 주로 하지 학술적 혹은 이론적 연구가 주 역할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 역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리, 더욱이 전주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문제는 다른 전문 연구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선거가 치러진 1990년대 이후 기간 동안 지역 정치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 인식의 단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지역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 정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정치의 주체를 시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과 같은 제도권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치적 해석과 의미가 달라진다. 전자는 ‘민중운동사’ 혹은 ‘시민운동사’와 같이 제도정치권 밖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후자는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 혹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여기에서는 정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지역 선거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 정치의 공간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전북, 전주 정치는 지

리·행정적 공간 범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¹⁾는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구성원 서로가 영향을 받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관심과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에서도 공동의 협력관계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북, 전주 정치 어떤 범주의 지역사회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가?’라는 점에서 즉, 지역사회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전라도’의 범주에서 해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1018) 때로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했다. 천 년을 이어 온 지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고려와 조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으로 보면 전라도를 정치·행정적 영역에서 하나의 지역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지역사회는 지리·행정적 영역을 넘어 정서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을 떠나 타지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언어, 문화, 사람관계 등을 재구성해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향우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인연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거 때는 그 지역의 후보에 대한 관심보다 고향의 후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한다. 타지에 있으면서도 지역 정치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상을 고려해 본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지역사회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과연 지방 정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

1)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 세계로 인식하는 문화공간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위 토박이의 정의에 의해 규정된다. 지역사회란 행정적 단위를 넘어선 사회 및 문화공동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김광역, 『문화의 정치와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음에 답이 가능해야 한다.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와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²⁾ 정치의 거의 존재감이 없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라는 명칭 대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2할 자치에 머무르는 현실로 볼 때 지방자치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원론적 의미로서 지방 정치라고 규정 짓기 힘들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 결과가 보여 주듯이 각각의 지역에서 특징적인 정치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를 개념화 할 수 있다고 본다.

3. 전라도 그리고 지역 정치

전라도를 넓은 의미의 지역 정치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전라도’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느냐이다. 오늘날 전라도는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역감정은 단순히 영·호남 간의 대립 차원이 아니라 전체 비호남 지역이 호남민에 대해 갖는 부정적 관념 형태’라고 규정한다.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를 전라도 차별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훈요십조가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지 일반 백성이나 비호남 지역의 대립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비호남 일반인들의 호남에 대한 편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4년 ‘남양공업’이 채용 공고에 ‘외국인과 전라도인은 지원 불가’를 낸 사건이 있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넘어 일반 현실에서도 전라도에 대한

2)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 서울 이외의 지역.

편견과 배제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외부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은 지역 정치의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공격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정책은 광주항쟁에서 집단 학살과 억압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라도를 반국가 폭력세력으로 고립시켰다. 전라도는 ‘빨갱이 새끼들’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란 단어는 단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빨갱이’란 말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이르는 말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를 폄하하는 용어는 존재한다.(중략) 하지만 한국의 ‘빨갱이’처럼 죽어야 하는 대상, 비인간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전라도 차별의 다른 말은 ‘영남 패권주의’이다. 박정희 정권은 7대 대통령 선거 이후 김대중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영남 패권주의를 강화했다. 경제개발에서 전라도를 배제했고 이념적 공세를 강화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에 반대편에는 영남 패권주의가 자리했다. 이를 지역감정이나 지역 차별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북, 전주 정치의 역사와 정체성은 전라도와 분리할 수 없다.

〈표 1〉 역대 대통령 선거 전북 표심 추이

선거	선거일	당선자	전 국	전 북	비 고
초대	1948. 7.20	이승만			제헌국회
2대	1952. 8.5	이승만	523만8369명(74.6%)	46만8220명(65.9%)	

3대	1956. 5.15	이승만	504만6437명(70%)	42만4674명(60.1%)	
4대	1960. 3.15	이승만	963만3376명(88.7%)	91만9529명(89%)	3.15부정선거
4대	1960. 8.12	윤보선	민의원 참의원 259명 중 205표 획득, 당선		제2공화국
5대	1963. 10.15	박정희	470만2640명(46.6%)	40만명8556(49.4%)	제3공화국
6대	1967. 5.3	박정희	568만8666명(51.5%)	39만2037명(48.8%)	
7대	1971. 4.27	박정희	621만1170명(40.9%)	30만8850명(33.8%)	
		김대중	530만6511명(35%)	53만5519명(58.7%)	
8대	1971. 12.23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 2359명 중 2357명 찬성		통대간선 임기 6년
9대	1978. 7.6	박정희	2778명 중 2577명 찬성		통대간선 임기 6년
10대	1979. 12.6	최규하	2560명 중 2465명 찬성		통대간선
11대	1980. 8.27	전두환	2525명 중 2524명 찬성		통대간선
12대	1981. 2.11	전두환	선거인단 4755표(90.2%) 찬성		제5공화국 선거인단 에 의한 첫 대선. 임기 7년
13대	1987. 12.16	노태우	828만2738명(36.6%)	15만7397명(13.5%)	제6공화국
		김영삼	633만7000명(28%)	1만6424명(1.4%)	
		김대중	611만3000명(27%)	92만4499명(78.8%)	
14대	1992. 12.18	김영삼	997만7332명(42%)	6만3175명(5.6%)	문민정부
		김대중	804만1284명(33.8%)	99만1483명(88%)	
		정주영	388만67명(16%)	3만5923명(3.1%)	
		박찬종	151만6047명(6%)	9320명(0.8%)	
15대	1997. 12.18	김대중	1032만6275명(40.3%)	107만8957명(90.6%)	국민의 정부
		이회창	993만5718명(38.7%)	5만3114명(4.5%)	
		이인제	492만5591명(19.2%)	2만5037명(2.1%)	

16대	2002. 12.19	노무현	1201만4277명(48.9%)	96만6053명(90.7%)	참여정부
		이회창	1144만3297명(46.6%)	6만5334명(6.1%)	
17대	2007. 12.19	이명박	1149만2389명(48.7%)	8만4141명(9.01%)	이명박 정부
		정동영	617만4681명(26.1%)	76만1810명(81.65%)	실용정부
		이회창	355만9963명(15.1%)	3만3826명(3.62%)	
		권영길	71만2121명(3%)	1만8139명(1.90%)	
		이인제	16만708명(0.7%)	6550명(0.68%)	
18대	2012. 12.19	박근혜	1577만3128명(51.55%)	150,315명(13.22%)	
		문재인	1469만2632명(48.02%)	980,322명(86.25%)	
3선 개헌	1969. 10.17		755만3655명(65.1%)	56만8077명(63%)	국민투표 통과
유신 헌법	1972. 11.21		투표율 92.9%	101만5489명(94%)	국민투표 통과
			찬성율 91.5%		제4공화국

* 자료 출처 : 전복일보 기사 자료를 일부 보완함.

4. 지역 정치에 대한 자각

원론적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지역 정치는 없다. 지역 정치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치 행위’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비로소 지역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에서 군수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니 우리가 희생하자’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겠는가? 지역 정치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물안개 같은 것이며 중앙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은 항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소모품일 뿐이다.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상수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는 3김의 제왕적 총재 시절로 총재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의 전권

을 행사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확고해졌고, 너도 나도 공천 현금을 들고 YS와 DJ의 상도동과 동교동 사저에 줄을 서야 했다. 공천을 받은 후보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유력 정치인과 인연을 맺거나 성공한 관료, 교수, 언론인, 민주화운동 경력자들로 지역민과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밀실 공천은 2000년 총선까지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는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의 대리 전장이었고 영·호남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물이 되었다. 13대 총선에서 20대 총선까지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던 후보는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당선 후 입당을 했거나 야당의 당 대 당 통합 과정에서 입당함으로써 큰 흐름으로 보면 결국 전북 지역은 정당 1개가 독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독점은 지역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표 2〉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의석수(13대 총선~20대 총선, 전북 의석수)

13대 (1988.4.26)	민주정의당 125	평화민주당 70(14/14)	통일민주당 59	공화당 39	기타 10
14대 (1992.3.24)	민주자유당 149(2/14) ³⁾	민주당 97 (12/14)	통일국민당 31	기타 21	
15대 (1996.4.11)	신한국당 139(1/14) ⁴⁾	새정치국민회의 79(13/14)	자유민주연합 50	통합민주당 15	기타 16
16대 (2000.4.13)	한나라당 133	새천년민주당 115(9/10)	자유민주연합 17	기타 8(1/10) ⁵⁾	
17대 (2004.4.15)	열린우리당 152(11/11)	한나라당 121	민주노동당 10	새천년민주당 9	자유민주연합 4, 기타 3
18대 (2008.4.9)	한나라당 153	통합민주당 81(9/11)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	민주노동당 5 기타 28(2/11) ⁶⁾
19대 (2012.4.11)	새누리당 152	민주통합당 127(9/11)	통합진보당 13(1/11) ⁷⁾	자유선진당 5	무소속 3 (1/11) ⁸⁾
20대 (2016.4.13)	더불어민주당 123(2/10)	새누리당 122(1/10) ⁹⁾	국민의당 38 (7/10)	정의당 6	무소속 11

제왕적 총재 시절의 밀실 공천은 16대 총선을 거치면서 변화를 맞는다. 2000년 총선을 ‘공천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계기’로 보는 이유는 바로 ‘총선시민연대’ 활동에서 나타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 때문이다. 전국의 460여 개 시민단체가 ‘부패 정치 청산’ 구호를 앞세우고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민주 헌정 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등의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다.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을 낙선시켰다. 낙선자 중에는 이종찬(종로), 이사철(부천 원미읍), 김중위(서울 강동) 등 여·야 중진 의원 다수가 포함되었다.

낙선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97년 IMF’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 이러한 정치인을 양산하고 있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 직접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17일자 『내일신문』은 낙선운동으로 정당의 공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공천의 결정 공간이 안가-사가-호텔-당사-광장”으로 바뀌었고, “공천 결정 주체가 1인-당 지도부-핵심 당원-유권자”의 순서로 공천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천 방식의 변화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치의 변화를 만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2000년에 이어 2004년에도 계속되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으로 이어졌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계기

-
- 3) 민주자유당 양창식(남원), 황인성(진무장).
 - 4) 신한국당 강현욱(군산읍).
 - 5) 무소속 이강래(남원 순창).
 - 6) 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신건(전주 완산갑).
 - 7) 통합진보당 강동원(남원 순창).
 - 8) 무소속 유성엽(정읍).
 - 9)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읍).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 전력이 있거나 파렴치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당 스스로 걸러내는 ‘후보 자격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천 방식 역시 전화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수십 대의 전화를 후보 조직원이 한꺼번에 착신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 방식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퇴보했다.

경선 방식의 변화는 전북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2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도민참여경선제’¹⁰⁾로 치러진 것이다. 당원 50%와 도민참여경선단 50%로 도지사 경선을 치른 것이다. 강현욱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35표 차로 이겨 도청에 입성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과 금품 살포, 선거인 명부 바뀌치기 등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 강현욱 지사는 이후 밝혀진 경선 비리 사건¹¹⁾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경선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경선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곧바로 전체 선거인단 수의 50%에 달하는 공모 당원 확보를 위한 동원 경쟁으로 변했다. 공모 당원이 곧 경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양측이 시활을 걸고 공모 경쟁에 돌입한 것. 이 과정에서 공모에 응하는 당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민주당 도지부 선관위가 동원 경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본인이 자구당을 방문, 입당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4만 명이 넘는 동원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그리고 완주군 소양과 김제시 백구 지역에서 돈 봉투가 확인됐고, 선관위는

10)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료를 놓고 강현욱, 정세균 두 후보 측에서 유불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대의원 및 당원 50%(지구당별 동수 배정)와 공모 당원 50%(도민참여경선인단, 인구비례 배정)로 합의했다.

11) 경선 당시 전주덕진지구당에서 강현욱 후보의 선거 참모가 관련된 ‘경선인 명부 바뀌치기’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제의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전북일보』 2002.05.08.)

이 시기 공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인물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한 충성스런 중앙당의 낙하산식 인물’보다 ‘지역 문제를 잘 알고 지역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지역 인물’을 필요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철새 정치인’이 상징하는 ‘소신 없는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반대가 주요했다면 ‘낙하산 공천’, ‘무늬만 지역 정치인’인 ‘서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주요하게 형성되었다.

과거와 같이 ‘누구를 공천해도 된다는 식의 자만에서 벗어나 철저히 민의가 반영되고 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밀실에서 계파 보스 간 나눠먹기식이나 낙하산식 공천 등의 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밝고 깨끗한 정치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선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자나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대상자 등도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전북일보』 2000.02.11.)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2일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며 무늬만 지역인인 ‘선거·정치 철새’ 공천도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과거 정치 유산인 몇몇 지도부에 의한 밀실 낙하산 공천은 지역 유권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파 간 나눠먹기로 귀결됐다”며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의 입장이 반영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예비 후보자의 인지도 중심의 여론조사를 지역 민심인 양 반영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진성 당원과 지역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개혁, 참여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조사는 직접투표 방식이든 50대 50의 당원과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시민 참여 경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중앙 정치 무대의 유력한 정치인의 전략 공천도 반대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출신을 강조하는 선거 철새와, 무늬만 지역인인 정치

철새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배제하여 진정한 지역 대표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민일보』 2009.02.12.)

전북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서울에서 활동해 온 유력 인사들이 중앙 정치인 인맥을 배경 삼아 공천을 받아 온 지난 30년 인연을 끊어야 한다. 무늬만 지역 정치를 외치는 사람 말고, 지역의 문제, 도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과 감성이 통하는 후보가 필요하다. 후임 정치, 낙하산 정치를 끝내고 지역 발전과 혁신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 도민은 구태 정치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2012.02.14.)

전북 도민들의 공천에 대한 불만은 19대 총선에서 대거 표출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물갈이 여론이 70%를 넘었다. 특히 중진 의원들에 불만은 통합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신건, 강봉균, 조배숙, 이강래 등 현역 의원들이 당의 후보 심사에서 컷오프를 당했다. 현역 의원 중 장제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동작을’에 출마함에 따라 인물 교체의 폭이 더욱 커졌다.

18대 총선 결과 11명 중 초선이 7명(김윤덕, 이상직, 김관영, 전정희, 강동원, 박민수)이나 당선되었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중 당선된 사람은 이춘석(익산갑), 유성엽(정읍), 김관영(군산)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의 교체 주기가 매우 빨라진 것이다. 1당의 지역 독점에 대한 불만과 인물(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전조 현상이 이미 있었다. 2009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전주 완산을 이광철 후보와 전주 덕진 김근식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선 신건, 정동영 후보에게 패배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는 정당 공천의 영향력이 큰 선거구이다. 물론 정동영이라는 인물의 영향이 크기도 했지만, 전주권에서 지역 패권 정당의 공천을 받고도

패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5. 지역독점정치, 행정관료정치 심화

지역 정치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선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를 직접 뽑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보면 턱없다.

지난 30년 동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같은 당 인물로 채워졌다. 2010년까지 1당 독점체제의 이변은 없었다.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뀜) 2012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10석 중 7석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이 1석을 얻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석에 그쳐 지역독점정치 30년 만에 대 이변이 일어났다.

〈표 3〉 역대 전북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 현황(정당별)

구분	1995년 (민주당)	1998년 (새정치 국민회의)	2002년 (새천년 민주당)	2006년 (열린 우리당)	2010년 (민주당)	2012년 (새정치 민주연합)
도지사	유종근(민)	유종근(새)	강현욱 (새민)	김완주(우)	김완주(민)	송하진 (새정연)
전주시장	이창승(민)	김완주(새)	김완주 (새민)	송하진(우)	송하진(민)	김승수 (새정연)
군산시장	김길준(민)	김길준 (무소속)	강근호 (무소속)	문동신 (민주당)	문동신(민)	문동신 (새정연)
익산시장	조한용(민)	조한용(새)	채규정 (새민)	이한수(우)	이한수(민)	박정철 (무소속)

정읍시장	국승록(민)	강광(새)	유성엽 (새민)	강광(우)	김생기(민)	김생기 (새정연)
남원시장	이정규(민)	최진영(새)	최진영 (무소속)	최충근 (민주당)	윤승호(민)	이환주 (새정연)
김제시장	곽인희(민)	곽인희 (무소속)	곽인희 (새민)	이건식 (무소속)	이건식 (무소속)	이건식 (무소속)
완주군수	임명환(민)	임명환(새)	최충일 (새민)	임정엽 (민주당)	임정엽(민)	박성일 (무소속)
진안군수	임수진(민)	임수진 (무소속)	임수진 (새민)	송영선(우)	송영선(민)	이항로 (무소속)
무주군수	김세웅(민)	김세웅 (무소속)	김세웅 (새민)	윤완병(우)	홍낙표(민)	황정수 (새정연)
장수군수	김상두(민)	김상두(새)	최용득 (새민)	최용득(우)	장재영(민)	최용득 (무소속)
임실군수	이형로(민)	이형로(새)	이철규 (무소속)	김진억 (무소속)	강완복(민)	심민 (무소속)
순창군수	임득춘(민)	임득춘(새)	강인형 (무소속)	강인형(우)	강인형(민)	황숙주 (새정연)
고창군수	이호종 (무소속)	이호종(새)	이강수 (새민)	이강수 (민주당)	이강수(민)	박우정 (새정연)
부안군수	강수원 (무소속)	최규환(새)	김종규 (무소속)	이병학 (민주당)	김호수(민)	김종규 (무소속)
지역 1당 국회의원 의석 수	민주당 (1992년 12석/14석)	새정치국민 회의(1996년 13석/14석)	새천년민주 당(2000년 9석/10석)	열린우리당 (2004년 11석/11석)	통합민주당 (2008년 9석/11석)	국민의당 (2016년 7석/10석)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치러진 전국 동시 선거(재·보궐선거 제외)에서 당선된 도내 단체장은 총 90명이다. 이중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보는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당선자가 23.3%에 이른다. 통계로만 보면 무소속 당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로서의 무소속, 제3 정치세력으로서의 무소속으로 볼 수 없다. 정당에 몸담았다가 공천에 탈락했거나 공천 가능성이 낮아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 이후에 입당하는 등 독자세력으로서 무소속이라고 볼 수 없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 이상 무소속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이견

식 김제시장과 김종규 부안군수뿐이다. 6번의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자가 모두 당선된 경우는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선거이다. 공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선거구라는 의미이다.

지역 정치 독점을 가능케 한 일차적 원인은 중앙 정치의 대결 구도에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전라도 차별 정책과 이태올로지 공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공동체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하고 내부적 협력관계를 높여 가기 마련이다. 선거에서 '줄 투표'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희생은 도민들이 당하고 먹고물은 정치권이 챙겼다. 지역 차별과 소외를 팔아 1당 독점, 기득권 정치의 튼튼한 성을 세운 것이다. 지역 정치, 지방자치의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중앙 정치 논리를 따라다닌 결과이고 낙하산 공천, 선거 때만 고향을 찾는 '무늬만 지역 정치인'의 공천을 용납한 결과가 바로 지역독점정치를 가능케 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역독점정치를 가능케 한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내부에도 있다고 본다.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중앙 정치에 줄 세우기 바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고 경쟁이 불가능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난 30년간 지역 정치를 독점해 온 세력들은 정치 환경에 따라 모양을 바꿔 가며 진화했다. '지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창출되고 유지되는가'라는 지역의 정치적 역학적인 관계로 볼 때 그 핵심에 관료 집단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언론, 건설업자를 비롯한 지역 토호, 국회의원 등을 포함 교묘한 정치적 연대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본다.

지역에서 1당 독점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에서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 구도에서 본선은 그저 형식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대한다.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 업체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민간위

탁기관의 직원,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에 이르기까지 당 경선 물에 대해 교육하고 전화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각각의 후보 캠프에 있는 전화 대기 조원들은 광역단체장 후보부터 기초단체장 후보, 지방 의원 후보를 특정하여 전화 대기를 하는 조직 융합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화 여론조사로 시작해서 전화 여론조사로 끝나는 선거가 어떻게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의 장이 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된 이들에 의해 지역 선거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1당 독점체제가 낳은 결과이다.

지역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역 단체장이다. 최근 행정 관료 출신들의 단체장 진출이 더욱 많아졌다. 수요가 많은 것보다 공급(출마자)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민선 6기 단체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도지사를 포함한 도내 15곳 단체장 중 8명(53.3%)이 행정 관료 출신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경력이 있으나 행정에 처음부터 입문한 것이 아니므로 관료 출신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자들은 관료 경력자에 포함하였다.

〈표 4〉 민선 6기 단체장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주요 경력		행정 관료 경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고려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실장, 전주시장	1선	○
전주시장	김승수	전북대,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1선	△
군산시장	문동신	단국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농업기반공사 사장	3선	○
익산시장	정현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1선	○
정읍시장	김생기	전북대학교, 통합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	2선	
김제시장	이건식	육군사관학교, 민주정의당 조직부장	3선	
남원시장	이환주	한양대학교, 전라북도청 전략산업국 국장	2선	○

완주군수	박성일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1선	○
진안군수	이항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안읍 읍장	1선	○
무주군수	황정수	중부대학교, 제8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1선	
장수군수	최용득	1대, 3대 장수군의회 의원	2선	
임실군수	심 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실군 부군수	1선	○
순창군수	황숙주	전북대학교, 감사원 국장	2선	○
고창군수	박우정	건국대학교, 민주당 전라북도당 부위원장	1선	
부안군수	김종규	전주대학교, 전라중학교 교사	2선	

*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전라북도지사는 중앙행정 관료 출신인 강현욱 지사와 지방행정 관료 출신인 김완주, 송하진 지사의 재임 기간을 합하면 민선자치 21년 중 14년, 전주시장의 경우 12년이다. 더욱이 김완주 전주시장이 도지사로 가고, 송하진 전주시장이 다시 도지사로 갔다. 김승수 시장은 김완주 전 도지사의 핵심 인물이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자리가 하나의 공식화된 룰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표 5〉 민선자치 부활 이후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재임 기간

구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도 지 사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1995.7.1 ~ 2002.6.30			2002.7.1 ~2006.6.30	2006.7.1 ~2014.6.30		2014.7.1 ~현재
전주 시장	이창승	양상렬	김완주		송하진		김승수
	1995.7.1 ~1996.5.31	1996.7.20 ~1998.6.30	1998.7.1. ~2006.3.10		2006.7.1. ~2014.3.3		2014.7.1 ~현재

선거 결과로 보면 전북 도민들이 행정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 경험이 있는 단체장이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것과 행정

과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잘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지역 차별과 소외라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와야 지역을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한다. 지역 문제의 해법을 여전히 중앙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 관료 출신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관리’가 몸에 배어 있다. 때문에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

6. 다시 지역 정치

전북 지역 정치는 두 가지 측면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중앙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고 있는 ‘영·호남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청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 역량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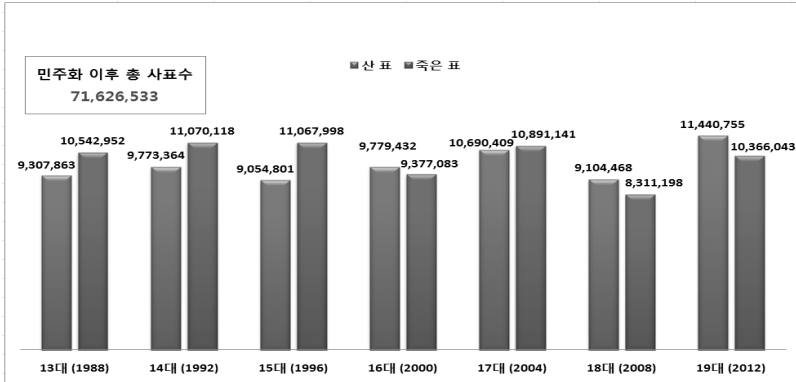
첫 번째, 영·호남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의 본질을 아래 영·호남 시민단체 정치 개혁 공동성명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영·호남 시민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을 담아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는 지역에 견고한 정치적 이익집단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중앙 정치에 줄 세우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의 대결구도를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 와 영·호남으로 편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왔다. 지역분할정치는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의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것이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의 본질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개혁이라 할

수 없다.(「영·호남 시민단체 정치 개혁 공동성명 중에서」, 2015.03.31.)

2015년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정치 개혁의 우선 과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는 투표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영·호남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유지시키고 있는 선거제도이다. 이른바 ‘텃밭’은 정치적 기득권 중 가장 큰 기득권이다. ‘여당의 표는 여당에게’ ‘야당의 표는 야당’에게 돌아가게 하지는 것,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비례대표제 포럼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3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발생한 사표는 총 71,626,533표이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만 10,366,043개의 사표가 발생했다.

〈그림 1〉 13대 - 19대 총선, 산표와 죽은표 비교



* 자료 출처 : 비례대표제 포럼, <http://www.prforum.kr/>

지역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의 다양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정당법’이다. 거대 정당, 전국 정당만 만들 수 있고 그들만 만들 수 있는 정당만 법으

로 허용하고 있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소수의 시민들도 정당을 만들어 지방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지역당들이 전국적 연대를 통해 기득권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을 고쳐서 정당 설립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정’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승자독식 정치 풍토가 빚어낸 갑·을 관계 등의 불평등한 관행과 인식을 청산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지역독점정치와 거대 전국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에 각각 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고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도한 정당 설립 규제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다양성 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당 설립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당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당설립 기준을 낮추어 다양한 지역 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정치로부터, 비교 가능하고 경쟁과 변화가 가능한 지역 정치, 주민들과 호흡하는 풀뿌리 지역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 정치의 폐해가 지역까지 연결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호남 시민단체 정치 개혁 공동성명』 중에서, 2015.03.31.)

두 번째로 최근 전북 지역 선거에서 살펴보았듯이 1당 독점, 공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이 공급한 것을 소비하거나 선거 때 심판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 정치조직이나 정당의 출현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치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기존 정당에 변화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전국 총 당원수¹²⁾가 260만 명에 이르고 전북 46만 명, 광주 24만 명, 전남 3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북과 광주·전남 당원이 절반에 가깝다. 전북과 대구의 당원수가 다르고 당에 대한 참여도, 정서가 모두 다른데 전국의 모든 지역의 공천 물이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경선 물이 다르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 방식을 각 주의 당원이 결정한다. 중앙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 지역 정당 이야기만 하면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당의 난립, 지역주의 정치 활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지역주의 정치에는 침묵하면서 지역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는 철저히 지역 투표로 진행된다. 영·호남은 물론이고 자신의 출신 지역에 따라 여·야로 나뉘어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인 것은 ‘텃밭’이라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것이고 그것은 보수 여당의 속내와 같다.

지역주의 정치가 판치는 상황에서 호남만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김대중은 DJP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영남 출신인 노무현은 호남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프레임이 영남 대통령 후보-호남의 선택이다. 또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음에도 ‘호남당’이라는 말에 절대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12) 2015년 2월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의 당비 내는 당원(관리당원) 약 25만 명, 이중 56%가 호남권이며 30%는 수도권이다.(최광웅, 「전국정당론은 만병통치약?」, 『미디어스 컬럼』, 2015.06.19.)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과반이 넘는 당원이 있으나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는 영남 인물을 선택해야 하고, 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도 ‘호남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지세력을 외면하는 ‘짜가지 없는 정당’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프레임, 야당의 잘못된 전국 정당 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7. 결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전북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와 결과와 지역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과 논리를 종합해서 볼 때, 현재 전북 정치의 핵심 현상은 ‘지역독점정치와 아전(衙前)¹³⁾정치’라고 본다. 아전정치는 지역독점정치가 낳은 사생아이다. 아전정치는 지역 정치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텃밭 기득권’을 공유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서로 공조한다. 대세를 관망하다가 뒤늦게 편승하고 ‘지역’을 외면하고 ‘중앙’을 동경(憧憬)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독점정치 구조에서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무대에 올라가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물로 채워졌다. 공천 경쟁은 잘 훈련된 선수(전화 여론 대기)들에 의해 민심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고 중앙 정치에 적극적인 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행정 관료 출신

13) 아전이라는 말은 군수·현령 등 지방 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중앙의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서리)와 지방의 하급 관리(향리)를 합하여 부르는 말임. 오늘날 행정 관료로 해석할 수 있음.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함.

단체장들의 ‘보신주의’, ‘관리적 리더십’은 이러한 기득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아전정치에는 지역 정치가 없다. 30년 동안 지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호남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뿐이다. ‘짜가지 없는 정당’에 호된 소리도 못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그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러한 아전정치에 반발한 민심이 20대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렇다고 아전정치 현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내년 대선의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정치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누어졌을 뿐 정치세력 교체나 인물 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전정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정치적 현상은 지역사회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이지 그 지역의 본질이나 정체성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때문에 아전정치를 곧 전북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 정치에 대한 성찰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주정신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은근과 끈기’에 대한 의견이다. 전주 사람이라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 ‘은근과 끈기’는 정치적 승자에게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역사의 변방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해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은근과 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동학정신’, ‘저항정신’을 전주정신이라고 덧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은근과 끈기’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역동성을 가지려면 “...으로 부터의 은근과 끈기”, “...를 향한 은근과 끈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무엇을 인내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한다.

전북의 경제활동과 전주

소 순 열 | 전북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 전북 경제활동의 변화
3. 경제개발과 전북 경제
4. 맺음말

1. 머리말

전북의 발전에 대해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의 보고라고 불리는 전라북도의 부는 모든 범위에 걸쳐 있다. 바다에 육지에 땅 밑에 포용하고 있는 산물은 실로 무진장하다. 전라북도는 근래 현저하게 행정, 경제가 발달하였고, 상공업, 산업, 교통, 위생 등 모든 기관이 정연하게 완성되어 신진의 전라북도라고 부를 만큼 일 구획을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현재의 전북과 20년 전의 전북을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금치 못한다.(宇津木 初三郎,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1928)

전주에 공업단지가 생길 때 전주의 인구는 30만 명가량 되었다. 그때 전주 토박이들은 대체로 공단 조성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사람이 늘어나면 환경이 오염되고 살기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었고 전원도시 전주가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유지들의 바람이었지만, 당시 필자는 ‘무슨 망발이냐며 목살하거나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라고까지 들먹이며 공단 조성의 필요성을 대서특필했다. 신문기자의 정년이 55세로 못 박혀도 멀고 먼 얘기라며 나이 든 선배를 전혀 의식치 않았던 시절의 얘기지만 얼마나 단견이었는지 후회만 남을 뿐이다.(문치상 칼럼, 『새전북신문』, 2001.11.16.)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놀랄 만한 전북의 발전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준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¹⁾ 지난 시기 동안 전북의 경제활동이

1) 이 글은 줄고, 1998, 2003, 2013, 2015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주와의 관련하에 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북의 경제활동은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하고 무엇인가를 써야 된다. 단순히 먹고사는 일 외에도 공장에서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제1차 산업보다 제2차 산업 그리고 제3차 산업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계는 어느 국민경제에서든지 공통되고 보편적인 것이며 하나의 통계법칙 또는 경험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한 17세기 영국의 학자 윌리엄 페티의 이름을 따서 ‘페티의 법칙’ 또는 ‘페티-클라크 법칙’이라고 부른다.

전주는 조선 시대 3대 도시로 이름났다. 전주는 호남 제일의 곡창지대로 물산이 풍요롭기가 한양, 평양이라는 구시대 수도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전주에 있어 지금의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및 제주도를 관할하다가, 1896년(고종33) 전국이 13개 도로 개편되면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이후 전북으로 약함)가 분리되었다. 1906년 전북은 구례군을 전라남도에 떼어 준 대신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했던 무장면과 흥덕면을 전북 고창군에 편입시켰다. 일제강점기 전북은 1부 14군으로 되었고, 1935년에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완주군과 분리되었다. 1963년에는 금산군과 익산군 황하면이 충남으로 옮겨 갔고, 전남 영광군의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등 몇 차례의 행정 개편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북의 경제활동은 유위전환(有爲轉換), 많고 다양한 사건과 사태를 경험하였다. 한일합방과 8·15 해방, 농지개혁, 한국전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오일쇼크, IMF 위기, 반도체 특수와 정보혁명 등등. 우리나라는 지난 시기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처럼 많고 다양한 사건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내우외환의 개방화 시대를 맞았다. 전북 경제의 장래에 불안감을 느끼며 도시로 이농·탈농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전북 경제활동의 지위가 저하하는 것을 당연한 현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돌이켜 보면 지난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는 우리나라 공업 우선적 경제 발전 전략이 구현된 결과이며 격동해 왔던 지난 반세기의 도달점이다. 이제 전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정 해결해 나갈 수 있는나의 관건은 전북의 사회경제 및 농업의 진정한 발전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시기 동안 전북 경제활동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북의 경제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선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근대적 통계를 현재의 국민 계정의 체계로 맞추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경제활동을 가능한 한 수량적으로 활용하여 파악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경제활동을 상대화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시기별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 다른 하나는 전북이라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자원의 중앙적 집중과 지역적 분포는 경제발전의 상징적 표징이지만 여기서는 전북 지역이 중앙(혹은 중심)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시기를 일제강점기, 경제개발기로 구분하여 전북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 저성장, 청년 실업과 조기 퇴직, 경기 침체, 양극화 등 여러 경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전북의 경제활동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에 의거하여 전북 경제가 가진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요한 쟁점은 전북 경제활동의 낙후성이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정책에 의한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 행위주체의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2. 일제강점기 전북 경제활동의 변화

1) 전북의 인구 및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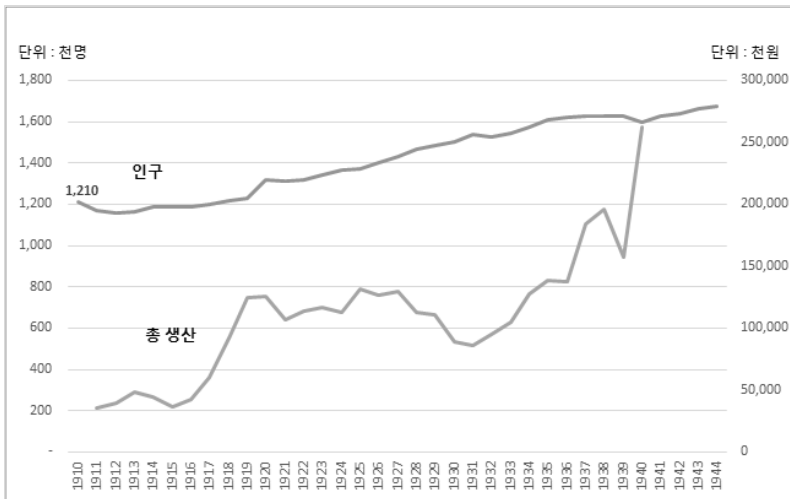
경제활동의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는 전북 지역 총생산이다. 전북 총생산은 전북 인구수와 1인당 생산액으로 나뉜다.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인구수가 1인당 생산보다 전북 총생산을 훨씬 더 많이 규정한다. 전라도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라 나누어지게 될 때 정확한 인구수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점과 가장 근접한 자료는 1909~191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민적 조사이다.²⁾ 이 조사에 의하면 한일합방 직전 1909년 전북 관내 당시 전북의 조선인 호수는 211,149호이다. 그 가운데 농업이 175,693호로 전체 가구의 83.2%를 차지하여 가장 주된 직업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상업이 18,857호(8.9%)이며, 날품팔이 4,923호(2.3%), 무직 2,379호(1.1%) 등의 순이다. 전주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총 18,794호 가운데 86.0%(16,161호)가 농업으로 가장 많고, 상업이 8.1%(1,518호)로 그 다음이며 날품팔이 2.1%(402호), 광공업 1.2%(225호)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양반이 직업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양반 호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1.9%(54,217호)로 역시 충남이 전체 가구의 1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전북은 1.0%(2,113호), 전주는 0.3%(49호)에 불과하였다.

최근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역사적 통계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비교적 소상하게 전북의 인구와 총생산, 산업별 경제활동에 대해서 파악 가능하게 해 준다.(〈그림 1〉, 〈그림 2〉) 1910년 전북 인구는 1,210천 명에서 1920년에는 1,319천 명을 거쳐 1930년에는 1,504천명으로 증가하여 1944년에는 1,673천 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북의 지역총생산

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09. 이 조사는 실제 인구의 70~80%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도 보인다. 1939년 대흉년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특히 1910년대 후반 증가하여 1920년대에 유지하다가 193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1〉 일제강점기 전북의 인구 및 지역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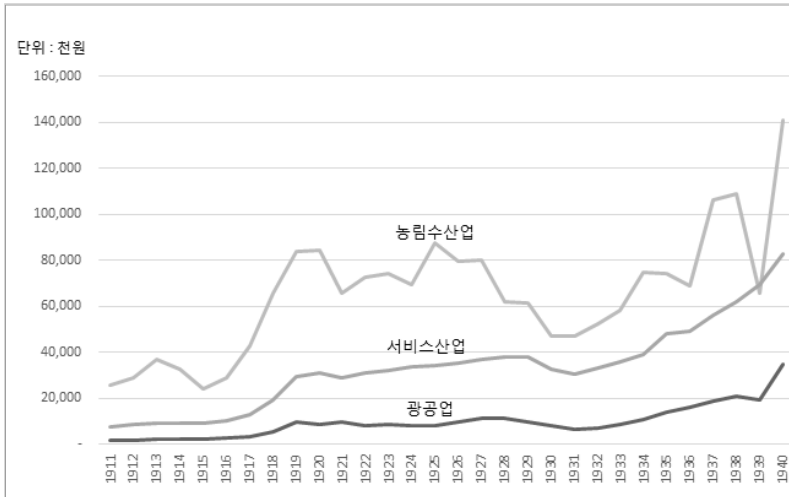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http://www.naksung.re.kr>

이러한 추세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을 식량 및 원료의 공급 기지로 삼고 일본 상품의 판매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데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는 값싼 지가,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임금, 값싼 식량 및 원료, 경쟁 자본의 부재 등 유리한 조건이 있어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일본 공업화를 위한 식량 공급 기지였다. 30년대 후반 대륙 전진의 군수공업화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진전되었지만, 전북 경제의 기초는 일제강점기 내내 농업이었다. 1940년의 경우 전북 10명 중 8명이 농업에 종사하여 총생산의 약 60%인 농산물(그 가운데 64%는 쌀)을 생산하였다. 10명 가운데 채 1명도 되지 않는 공업종사자가 총생산의 32%의 공산물(조선 전체는 35%)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반 이상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류, 장류 등의 식료품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농림수산업이 가장 우위의 생산액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일제강점기 전북의 산업별 인구 추이



* 자료 출처 : <그림 1>과 같음

1932년경 각 부군의 주요 공업 상황(全北日報社, 『全北案内』, 1933)에 의하면 전북의 공업은 식품공업, 공장은 정미공장이 중심이었다. 시군별로 보면 군산은 주로 정미, 양조, 철공, 조선, 전기, 고무, 인쇄, 농구, 연화 등 30여 개의 공장이 있었다. 이들 공장의 자본금은 천만 원, 종업원은 1,500명 정도로 연 생산액은 천만 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정미를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은 주류 약 40만 원, 금속 제품·고무제품 11만 원, 비료 및 과자류가 각각 8~9만 원 정도, 그리고 비누, 선박, 목제품, 기계류, 장유 등이 각각 4~5만 원 정도이다.

전주는 삼례, 전주, 동산 세 곳이 공업 중심지이다. 이 세 곳에 22개의 정미공장이 있으며 공장 생산액은 15만 석, 3백만 원 정도, 전주의 두 개의

제사공장은 약 10만 근, 백만 원, 이외에도 주류 50만 원을 비롯하여 봉제품, 고제품(藁製品), 직물, 종이류, 주물 및 금속제품, 과자 등 약 5백 41만 원 정도이다. 그 가운데 전주의 종이우산, 부채 등은 지방색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서 조선 안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애호되고 있었다.

익산의 공업은 특산물로서 유명하였다. 생산액은 주류가 약 18만 원으로 가장 많고 마포, 부채가 각각 3만여 원, 그 다음에 금은세공, 조선한지, 목기, 도예, 죽제품 등이다.

2) 전북 경제에서의 전주의 위치

〈표 1〉은 전북에서의 전주 경제를 농업, 공업, 금융, 시장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북 대비 전주의 인구 비율 기준을 3.7%로 한다면 전주의 농업 및 공업 생산은 각각 2.2%, 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10.3% 이상(은행회사 기준)을, 시장은 13.1%(거래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한 대비이지만 전주는 농업·제조업보다는 금융·시장, 제1·2차 산업보다는 제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전주는 관청 소재지·교육의 도시로 발달해 왔다. 최근에는 각종 공장의 유치·가내공업의 보급과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주는 여전히 소비 도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는 상품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지이기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취업 인구나 생산액(또는 부가가치)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1938년 전북의 산업구조를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농업 비중이 63.5%로 농업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공업 비중은 34.5%를 차지하지만 농업 생산액의 약 30%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31.1%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단순 식료품 가공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³⁾

〈표 1〉 1930년대 후반 전북과 전주

	전주(A)	전북(B)	A/B(%)
총인구(1940) 인구(명)	55,978	1,557,190	3.6
농업(1935)			
농가호수(호)	8,373	241,435	3.5
생산액(천원)	1,529	70,223	2.2
구성비(%)			
미곡	2.4	63.1	-
맥류	71.7	13.1	-
채소 및 과수	2.8	7.7	-
축산	22.7	3.5	-
기타			
공업(1940)			
생산액(천원)	993	51,916	1.9
방직	13	5,130	0.3
금속	5	434	1.2
기계기구	20	2,545	0.8
요업	108	963	11.2
화학	11	8,458	0.1
제재 및 목제품	167	739	22.6
인쇄 및 제분업	-	338	0.0
식료품	430	12,113	3.5
기타	241	21,196	1.1
금융(1937)			
은행회사 수	3	29	10.3
금융조합 수	4	54	7.4
시장(1937)			
시장 수	3	66	4.5

3)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215쪽.

개시회 수	480	6,224	7.7
매매액(천원)	1,484	11,314	13.1
농산물	765	2,601	29.4
수산물	171	3,187	5.4
직물	33	1,061	3.1
축류	392	2,793	14.0
기타	123	4,506	2.7

* 자료 출처 : 졸고, 2013에서 재인용(원 자료는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도;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소순열·주봉규, 『근대 지역농업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이러한 전북의 식민지적 경제구조는 식량 공급이라는 일본의 요구와 토지 경영 소득 증대라는 지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의 강권적 농정과 지주적 강제가 유착한 합작품인 셈이다.

전북 경제의 구조는 군산 개항(1899)부터 식민지 경제 지배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어느 정도 구조 틀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러일전쟁(1904)을 획기로 식민지적 경제구조는 가일층 완성을 보았다.

군산항을 통해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90%가 쌀이었다.(〈표 2〉) 그 대신 군산항에 들어온 수입품은 면제품, 잡화 등과 같은 일본 공산물이었다. 이른바 미면교환체제(米棉交換體制)이다. 쌀은 주로 오사키를 중심으로 한신(阪神) 지방의 하층 노동자, 도시 잡업층이 주로 소비하였다. 군산에 들어온 수입 면제품 및 잡화품의 주요 생산지는 일본 한신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북 경제는 전북의 농촌지대와 한신 공업지대가 구조적으로 연관된 식민지적 분업체제이었다.

근대적인 수리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여 관개 용수가 확보되고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곡 생산도 확대되었다. 1910~14년 전북 쌀 생산량은 연평균 1,126천 석이었던 것이 1930~40년은 연평균 2,047천 석으로 82%나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했지만 일본으로 실어 나른 이출쌀은 4배

로 늘어났다. 실제로 전북에서 생산된 쌀은 군산항을 통해 1916년 234천 석이었던 것이 1926년 980천 석, 그리고 1929년에는 894천 석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표 2〉 일제강점기 전북의 무역 추이(1900~1935)

(단위 : 원, %)

	1900	1910	1915	1921	1926	1930	1935
수이출 (총액)	82,272	2,210,156	7,288,737	20,159,165	47,328,364	24,330,444	63,302,996
1위	米 60.1	米 82.1	米 93.5	米 97.7	米 98.3	米 97.1	米 97.1
2위	대두 27.4	우피 6.0	우피 2.8	대두 0.9	대두 0.3	우피 0.1	대두 0.9
3위	대맥 4.5	대두 5.1	대두 1.4	繰綿 0.7	금광 0.2	대두 0.04	糠(비료) 0.3
4위	우피 2.8	荳 · 胡麻 2.9	荳 · 胡麻 0.5	비료 0.3	우피 0.1		금광 0.23
5위		소맥 1.9	우지 · 비료 0.2	우피 0.1	糠 0.1		우피 0.22
수이입 (총액)	13,305	1,186,481	2,292,919	6,328,128	19,284,876	15,167,713	24,088,067
1위	성냥 19.5	生金巾 · 시팅 28.2	生金巾 26.9	生金巾 및 日西金巾 29.2	米 및 벼 19.5	화학비료 20.2	비료 17.4
2위	원판 9.9	가마니 11.2	日西金巾 6.2	소맥분 25.3	비료 10.9	米 및 벼 12.7	면직물 4.9
3위	목재 6.4	방적사 5.0	면직사 4.0	철조竿板 10.7	生金巾 · 시팅 9.5	기타면모 5.9	소맥분 3.9
4위		精糖 3.5	철류 3.5	砂糖 9.8	조 3.7	生金巾 및 生시팅 5.4	엽연초 3.6
5위		술 3.3	砂糖 3.4	綾金巾 및 雲蓴布 5.0	소맥분 3.2	소맥분 3.4	기계류 3.3

*자료 출처 : 졸저, 2013에서 재인용(원전은 「통상회관」, 「명치43년 조선무역요람」, 「군산부세요람」, 「군산안내」).

3) 지주 · 소작 관계와 전북 농업

1909년 말 금강, 만경강, 동진강 3대 유역 30여 만 정보의 10분의 1을 일본이 소유하였다. 50정보 이상 경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는 38명이며,

1,000정보 이상 거대 지주는 오오꾸라(2,500정보), 후지이(1,042정보), 구마모토(1,700정보), 이와자키(1,135정보) 4인이나 되었다. 1910년 일본인의 토지 소유는 전북 경지의 18.9%를 차지하여 조선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 가운데 김제·옥구·익산의 3군은 전체 경지의 70%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주로 전북의 서부 평야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일본을 위한 식량 공급 기지를 구축해 갔던 것이다. 전북을 러일전쟁 이후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식량 공급을 위한 전초 기지화하였다. 일본의 1/10에 불과한 지가에 많은 토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일본인의 지주화가 이루어졌다. 1935년 전북의 24만 농가 중 1만 2천 농가가 자작을 하고 있었고, 열 농가 중 아홉 농가는 소작 농가이었다. 일본인 지주에 속한 농가는 열 농가 중 세 농가로 김제, 옥구, 익산과 같은 군은 다섯 농가 이상이 일본인 지주에게 속한 소작농이었다.

일본인 지주는 중세의 봉건영주를 방불케 하였다. 구 구마모토번(舊熊本藩) 번주(藩主)의 4남이었던 호소가와 후작(細川護立)은 1904년 집사 쓰다(津田靜一)의 진언에 따라 전주평야 3개 군의 100개 촌락에 걸치는 약 1,000정보의 대농장을 설립하였다. 이 농장에 관리사무소, 사택 등을 건립하고 넓은 땅이라 해서 대장(大場)농장이라고 불렀다. 더구나 농장 사무소가 있었던 대장농장 근처에는 구마모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장촌(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은 일본의 지명을 따 비후촌(肥後村)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대장촌은 한 일본인이 2,100여 명의 촌락인 소작인을 지배하는 마치 일국의 왕국과 같았다.

일본인 지주가 기술을 발전시킨 노하우는 특유의 농장 경영 방법에 있었다. 농장에 시험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험 연구를 하였다.가와자키 농장은 80여 종의 품종 수량 시험을 하였으며, 구마모토 농장은 10정보나 되는 시험답을 설치하여 품종 비교, 시비 배양, 토양 조사 등을 하였다. 어떤 일본인 농장에서는 총독부 농정 당국보다 농업기술 개발이 10년 정도 앞섰

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소작농에 대한 지도는 농장 직원이 담당하였다. 종래 중간 착취자로 악명이 높았던 마름을 직원의 보좌역으로 낮추고, 농장 직원이 소작인 관리를 담당하였다. 구마모토 농장 직원은 경도제대, 구주제대, 가고시마농고 등 명문고 출신이었으며, 조선인 직원은 이리농고, 정읍농고 출신이 많았다. 해방 전후 초등학교 출신이 면서기가 된 것을 생각하면, 지주의 에이전트 격인 직원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셈이다.

직원-마름-소작인이라는 중층적인 소작인 지배하에 일본인 지주는 매년 2월에 소작인과 5인의 연대 보증인이 날인하는 소작 계약을 맺는다. 소작증서의 내용은 품종의 지정, 경운, 파종, 식부, 비료 사용, 제초, 예취, 탈곡 등 생산 과정, 수확물의 품질, 처분 등의 유통·분배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소작료는 대개 수확량의 50~80%를 지불하고, 내지 못할 때는 연 20%의 연체율을 지불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지주는 일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양질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작인 품평회를 열었다. 조선농회보에 의하면 “매년 3, 4월이 되면 소작미의 품질, 건조, 형상, 색깔을 심사하여 소작인이 출품한 미곡에 등급을 매겨 1등 탈곡기, 2등 대두, 3등 삼, 4등 호미를 각각 수여하고 우수한 소작인 단체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했다. 품평회 후 향응에서는 소작인의 우열에 따라 좌석 배치를 하여 우승자에게는 우월심을 열등자에게는 분투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즉 소작인들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양질미를 확보하는 전근대적 대인보상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작미 품평회는 바로 소작인 품평회였다.

일본인 지주는 이 같은 농업 내 시험 연구, 유능한 농사 전문가, 엄격한 소작 계약, 전근대적 보상 방식 등에 의해 전북 농업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선 전체의 농업기술을 선도하였다. 우량 품종 보급률이 약 80%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조선 전체의 평균은 20년이 걸린 것에 비해 전북

은 절반밖에 안 되는 10년이 걸릴 정도로 농업기술은 발전하였다.

4) 저변의 생활 세계

쌀 생산은 벼 품종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경종법과 수리 개선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쌀 생산력도 전복 10a당 1석에 비해 1.5석 내지 2.0석이나 높아졌다. 쌀 생산은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주민 쌀 소비량은 0.77석에서 0.44석으로 격감하였다.

농업 선진지인 전북 지역의 빈곤화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심했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4-5월의 춘궁기 때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 즉 춘궁 농가는 전체 농가의 48% 정도였으나 동진강 유역의 김제는 66%나 되었다. 김제 지방에서 절량농가는 전체 농가의 70%, 농자(農資)가 없어진 농가는 전체의 92%나 되었다.([『조선일보』, 1931.03.25) 우리나라 제일의 곡창지대에서 전체 농가 절반 이상이 3월에 이미 양식이 떨어졌고 보릿고개를 그나마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농가가 20%, 가을 추수기까지 견딜 수 있는 농가가 10%에 불과하였다. 동진강 유역에 정읍이나 부안의 빈곤화 현상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였다. 정읍과 부안의 춘궁 농가율은 각각 59%, 52%여서 반 이상 농가가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식량이 절대 부족하여 버티기 힘든 농가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지역 주민은 쌀 소비량의 감소를 잡곡으로도 보충하지 못하고 야산에서 채취한 나물,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927년 김제에 신임 군수가 부임함에 따라 군청회의실에서 면장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두 면장의 발언은 당시 김제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보여 준다.

관내 총면적은 약 2,400정보에 달하고 있지만 일본인 소유가 80%이며 조선인 소유가 20%에 불과합니다. 농가 호수는 대략 1,000호이지만 자작농은 4농가 뿐이어서 대부분 소작 농가로 생활은 실로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작년은 소작료가 고올이어서 초근목피 상태에 있는 농가가 허다합니다.

경지면적 2천여 정보 가운데 70% 이상이 다키(多木)농장의 소유입니다. 게다가 소작료가 아주 높기 때문에 소작인은 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동아일보』, 1927.02.23.)

1932년 1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북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자살하거나 굶어 죽은 이가 56명이라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 주민 생활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으로 농민은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든가, 산이나 도시로 가서 빈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거나 만주로 이주해야 했다. 1938년 한 해 동안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한 마을의 경우 180호 농가 중 13호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소작쟁의나 노동쟁의에서 더 나아가 항일운동으로 전개될 역사적 조건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당시 전라북도 경찰부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정읍군 내장면 교암리 김인동 당 16세는 어려서 부모를 사별하고 누이 2인을 데리고 조부모에 양육되고 있으나 일가의 생계를 담당하여 매일 이른 아침부터 소나무 낙엽을 긁어모아 20리 길 정주읍까지 지고 가서 20전 내외의 돈을 받아 겨우 일가 5명의 가냘픈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4월 27일 평일과 같이 소나무 낙엽을 지고 정주읍에 나갔으나 이를 사는 사람이 없어서 밤 11시가 넘어도 팔지 못하고 읍내를 방황하다가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읍군 입암면 천원리 쓰쓰이 모리스케(筒井盛之助)는 뽕나무밭에 비료로서 콩깻묵을 시비했는데 그 대부분을 파서 훔쳐 갔다. 누군가가 식량이 궁해서 한 행위이다. 세민의 생활고는 동정해 마지않을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다.(전라북도 경찰부, 1932)

1932년 1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북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자살하거나 굶어 죽은 이가 56명이라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 주민 생활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으로 농민은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든가, 산이나 도시로 가서 빈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거나 만주로 이주해야 했다. 1938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개 마을에는 179호가 있었는데 한 해 동안 13호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이들을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곤란으로 일본 노동자로	3호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10호
만주 이민으로	2호
범죄자	1호

전북 농업 개발의 결과, 확실히 농업기술은 향상되고 쌀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곡창지대에서 농민들의 가난은 상품경제의 진전 속에서 농사의 풍·흉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이는 농업 개발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아니고 지주와 조선총독부, 더 나아가서 일본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개발의 시대이자 수난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조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민족에 의한 지배가 본질인 식민지 사회에서 민족을 빼고 식민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타민족을 배타하고 전쟁의 정신적인 기초를 이루는 ‘독’과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전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어 전혀 다른 별개의 전통이 유입될 때 독자적인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다. 이른바 전통에 기초한 근대화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개성이 있듯이 지역이나 민족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의 발휘를 보장하는 입장이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문화적 기술적 개성
(전통)을 경시 내지 무시해 왔다.

조선의 미작농업의 개발은 팽창하는 내지 인구에 대한 식량 공급이라는
국방 경제적인 자급정책의 필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개시되어야 할 것이었
다. 그러나 지도의 대상인 농민은 기술 면에서나 자력 면에서나 아무것도 소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권력적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
권력적 개발은 일본 특유의 성급함을 갖고 시행됐던 것이므로 농민의 이해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고, 뒤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했다. 농민은 오직 관청의
지도에 따라 배급받은 종자를 배운 모내기법으로 뿌리고, 전식승(田植繩)에
의해 정조식(正條式)을 하고, 정해진 날에 비료를 뿌리고 제초를 하고, 명령받
은 날에 기장을 뽑고 풀을 베고, 보인 대로 건조를 할 뿐이었다. 거기에는
오직 감시와 명령만 있었다. 농민의 창의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久
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成美堂書店, 1943)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이전까지 해 왔던 농업기술 체계를 무시한 채
일본 농업기술을 보급시키기 급급했다. 이러한 기술 보급은 전통의 단절과
기술 개발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과정이었다. 대다수 조선 농민이 새로운
기술 개발의 노력은 없고 단지 총독부 시책에 순응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
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전북은 간접 통치를 포함해서 40년 동안 줄곧 일본의 식량 보급 기지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북 경제에서 농업의 지위는 식민지적 성격
에 규정되어 의연하게 높고, 농업 생산의 확대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
본질은 전북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과 시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 경제와 미곡시장의 발전에 두고 있었다.

전북 경제활동의 전개는 점점 전북 대 일본 미국을 위한 모노컬처 무역구조를 강화하고 식민지적 종속 경제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지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의 향상은 미국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고, 곧바로 그것이 대(對)일본 식량 공급에 의하여 전북 농민의 궁핍화라는 메커니즘이었다. 일본인 지주와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대량의 전북미를 항상 공급받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해 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즉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으며, 외국 쌀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완화하였던 것이다.

3. 경제개발과 전북 경제

1) 농지개혁과 전북

해방 이후 농업은 전 국민의 80%가 종사할 정도로 주된 산업이었다. 식민지 체제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하나 아직도 전체 농가 가운데 자립 농가는 1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소작(49%), 자작 겸 소작(24%)이었다. 전북 농업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전체 농가 가운데 5.4%가 자작농, 나머지는 소작 67.7%, 자작 겸 소작농 26.9%이었기 때문에 지주 소작 관계를 기초로 하던 식민지 경제구조 청산과 일제의 실물적 유산인 귀속재산 처리는 향후 전북 경제활동의 전개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농지개혁은 새로운 국민경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와 농촌 사회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사회

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나 정치조직들에 의해 대립적인 안까지 대안이 속출하였다.⁴⁾ 결국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기초한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 의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개혁 방법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분배 내용이 결정되었다. 미군정은 전체 일본인 귀속농지의 91.4%에 해당하는 약 25만 정보를 분배하였으며, 전북은 귀속농지의 98.5%인 65.4천 정보를 분배하였다. 5·10 총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선인 지주를 제외한 일본인 지주의 토지 불하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귀속농지 분배는 미군정이 의도한 바처럼 공산주의의 진출을 저지하고 한국 정부에 의한 농지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정부는 농지개혁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고 동 시행령(1950.3), 동 시행규칙(1950.4)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1949년 6월 농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분배농지 면적이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농민이 분배받게 될 분배 면적은 60여만 정보(소작지와 자작으로서 3정보 이상 초과분)와 귀속농지 약 23정보(이미 분배가 진행되고 있는 구 일본인 소유 농지)로 총 83만 정보이었다. 전북의 분배 면적은 전체 경지의 약 60%로 전국 평균에 비해 20%나 많은 면적이었다.

본래 195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농지개혁사업은 6·25전쟁이 일어나 일시 중단되었다가 수복 후 재착수하게 되었다. 1957년 말 당시 농림부가 농지개혁이 일단락되었다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배 전체 호수와 면

4) 해방 이후 3년간 미군정을 거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농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농림부안, 기획처안, 수원농대교수단안, 대한독립총연맹안, 이훈구 의원 등 31명이 제출한 안까지 합쳐 무려 45개 안 정도가 제출되었다.

적은 각각 155만 호(일반농지 매수 호수 약 95만 호, 귀속농지 매수 호수 약 50만 호), 47만 정보(일반농지 27만 정보, 귀속농지 20만여 정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전북의 수배 농가 호수는 28만여 호(일반농지 매수 호수 15만 호, 귀속농지 매수 호수 13만 호)이었으며 분배 면적은 총 11만 정보(일반농지 5만 정보, 귀속농지 6만여 정보)이었다.

이를 <표 3>에서 1949년 6월 현재 분배 대상 면적과 비교하면 그 실적은 귀속농지 분배분을 포함하여 56.4%, 일반농지의 경우 44.6%이었다. 소작지 면적은 1945년 말 32.5%, 1947년 말 35.5%, 그리고 1949년 6월 소작지의 56.6%가 분배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북의 농지개혁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1949년 6월까지 전북의 분배 일반농지는 65.3%, 귀속농지를 포함하면 무려 81.8%의 소작지가 분배된 것이었다. 농지개혁 이전 1947~49년간 무려 4만 정보 이상의 소작지가 자작지화되었던 것이다. 순소작의 감소는 농지개혁을 의식한 지주에 의한 임의 처분, 지목 변경 등의 음성 소작지의 잔존, 분배농지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계급으로서 타파된 반면, 소작농들은 농지개혁을 통해 다소간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작농이 되었다. 1945년 전체 농가의 14.3%이었던 자작농이 1960년에는 73.6%로 급증한 반면 순소작농은 50.0%에서 6.8%로 급감하였다. 같은 기간 전북의 경우 자작농은 5.4%에서 76.8%로 급증하였으며, 순소작농은 67.7%에서 5.9%로 급감하여 자작농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표 3〉 농지개혁 전후 소작지 면적과 분배 면적

(단위 : 정보)

	소작지 면적			분배 대상면적 1949년 6월 ²⁾ (D)	분배 면적 1957년 12월 (E)	비율(%)			
	1945년말 (A)	1947년말 (B)	1949년말 (C)			E/A	E/B	E/C	E/D
전북	190,315 ¹⁾	176,704	135,243	135,411 (73,789)	110,709 (48,207)	58.2	62.7	81.9	81.8 (65.3)

전국	1,447,359	1,324,806	830,263	833,882 (601,049)	470,022 (267,878)	32.5	35.5	56.6	56.4 (44.6)
----	-----------	-----------	---------	----------------------	----------------------	------	------	------	----------------

* 주 1) 1943년 말 전북의 소작지 면적임.

2) ()는 1949년 6월 21일 현재 귀속농지를 제외한 분배 대상 농지(소작지와 자작지로서 3정보 이상 초과분)와 분배 농지(일반 농지)임.

* 자료 출처 : 줄고, 1989, 112쪽에서 재인용.

농지개혁이 철저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지개혁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목적인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 증진에 의한 농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개혁 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과중한 토지수득세 부과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농가 경제는 계속 위축되었다. 그 결과 개혁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작재생현상이 나타나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 재분배 효과를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불완전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이라는 매우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지주는 농지개혁에 의한 자산 재분배의 결과 가장 피해가 큰 계급이었다. 농지대가를 지가증권으로 보상 받았지만 인플레이션 등 여러 상황이 크게 지주에게 불리하였고 대다수가 전쟁 중에 할인 판매함으로써 계급으로서의 지주가 해체되었다. 지주세력의 해체는 전북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정부는 농지개혁에 이어 귀속재산 몰하, 원조물자 배분에서 지주계급의 부가 신흥 자본가 층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부는 농지개혁, 귀속재산 몰하, 원조물자 배분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다졌으며, 원조자금의 배분을 독점함으로써 신흥 자본가의 육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산업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후 전북 경제활동은 농지개혁에 의한 사회계급·계층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2) 공업화와 전북의 경제구조

1962년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발하였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이 공업화 우선의 불균형 개발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한층 심화되어 갔다. 경제활동의 성과인 지역총생산(GRDP)을 보면, 1963~1978년 전국은 15년간 평균 10.0%라는 높은 평균성장을 가져왔으나 전북의 지역총생산은 7.0%의 성장률을 보이는 저성장 지역이었다.⁵⁾ 지역총생산 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기가스·수도 위생, 교통·창고·통신 등의 부문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상대적 저성장 지역이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성장률은 각각 -8.2%, -7.7%, -7.5%로 크게 낮았다.(〈표 4〉)

〈표 4〉 전북의 지역총생산 성장 추이(1963~1978)

(단위 : %)

	총 산업	농림수산업	광업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위생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전북 GRDP(A)	7.0	3.6	7.7	10.8	23.5	12.3	12.2	6.7
전국 GDP(B)	10.0	4.1	6.9	19.0	16.5	20.0	13.2	6.8
A-B	-3.0	-0.5	0.8	-8.2	7.0	-7.7	-1.0	-0.1

* 주 : 1975년 불변가격임.

자료 출처 : www.kostat.go.kr, 『전북통계연보』에서 작성.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전북의 산업구조 역시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전체 산업 비중

5) 이를 주민소득 측면에서 확인하면 1971년 전국 수준에 비하면 79.9%에서 1977년 75.3%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의 소득 편차는 24.7%이었다.(전라북도, 『78 주요기본통계』, 1978)

에서 1963년 64.0%를 차지하는 농림어업이 1975년에는 49.1%로 감소한 반면, 광공업은 같은 기간 12.3%에서 16.3%,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은 23.7%에서 34.6%로 증가하였다.(<표 5>) 이러한 경향은 전북의 취업구조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표 6>)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비중 감소와 광공업 및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라는 정도는 내용적으로 매우 상이하다. 이 때문에 전북의 낙후성은 지역 상공업자의 위기감으로 집약되어 중앙의 정책적 투자로부터 배제된 소위 ‘전북 푸대접론’으로 나타났다. ‘전북 푸대접론’은 1966년 공업화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역 상공업자의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이 시기부터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지역 내의 각 경제단체와 언론이 참여하여 공업화 위주의 전라북도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5〉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1963~1975)

(단위 :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1963	64.0	42.2	12.3	16.6	23.7	41.2
1966	60.3	35.3	11.6	20.1	28.1	44.6
1969	54.6	28.7	12.4	21.8	33.0	49.5
1972	54.5	28.3	14.5	24.4	31.0	47.3
1975	49.1	25.4	16.3	29.7	34.6	44.9

* 자료 출처 : 『전북통계연감』, 1977; 『한국 경제연감』 1977.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전북은 종업원 수, 생산액 등 제조업의 각종 지표에서 전국 대비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2% 경제론’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0년대의 ‘전북 푸대접론’의 연장선상으로 전북 경제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서는 공업화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전북 지역 내 자생적 산업화에서 외부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화로 개발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전북

경제의 위기의식이 언론을 거쳐 지역 주민 전체에게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격차의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가 정책적 쟁점보다 후보들의 지역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표현이었다. 전북의 낙후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전북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6〉 전북의 취업 구조 변화 추이(1970~1985)

(단위 : 천명, %)

연도별	전체 취업자	농림어업 비중	광공업 비중	SOC 및 기타 서비스업 비중
1970	723(100.0)	471(65.2)	67(9.3)	185(25.5)
1975	999(100.0)	689(69.0)	70(7.0)	240(24.0)
1980	861(100.0)	464(54.0)	131(15.1)	266(30.9)
1985	819(100.0)	443(54.0)	94(11.5)	282(34.5)

* 주 : 본 표의 전북 취업자 수는 14세 이상 인구임.

() 내는 %임.

* 자료 출처 : 〈표 4〉와 같음.

이와 같이 1960년대 국가적 종속적 개발 전략을 유지하면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내재적 발전에 의한 자생적 산업화로부터 외부 기업 유치의 개발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지역 내 자본이 영세하였기 때문에 자생적 산업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외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로 전략적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⁶⁾ 1980년대에 들어서도

6) 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제지공장 유치추진위원회'의 결함이다. 이 위원회는 1964년 전라북도 출신 사업가인 김광수가 제지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전북의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이 제지공장을 전주에 유치하지는 움직임이 일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차관 도입이 승인되어 1965년 새한제지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자금난에 봉착하여

전북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85년 공업화 추진만이 주요 과제라는 ‘생산도시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1980년대 후반 세계화, 개방화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공간 전략도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중국과의 수교관계가 맺어지면서 서해안개발사업은 그동안 공업화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에서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1980년대까지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추가되어 ‘2% 경제론’과 함께 전북 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발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북 농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70년대 통일벼의 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녹색혁명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쌀 생산은 1966년 392만 톤에서 1976년 521만 톤, 같은 기간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각각 287kg에서 429kg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977년에는 쌀 생산 4,000만 석을 돌파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494kg에 달해 세계 쌀 생산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쌀을 자급하는 녹색혁명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통일품종의 개발, 벼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의 개발이 있었지만 그 중심은 강력한 증산 시책의 추진에 있었다. 농림부 등 계통 기관에 식량 증산 상황실을 두고 쌀 다수확 시상 등 농민의 증산 의욕 고취, 적기적 작업(適期適作業)을 위한 시한영농, 지역별 책임생산제 등을 마치 군사작전같이 추진하였다. 전북 농업 지역에서는 1971년 통일벼 재배부터 이의 한계를 개선한 유신, 밀양, 이리 등 통일계 품종을 재배하여 쌀 증산을 달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과거 일반 물 못자리에서 탈피하여 비닐 피복 보온 절충 못자리 설치 등 새로운 농업기술

1965년 10월 새한제지는 삼성 측에 인수되었으며 1968년 회사명을 ‘전주제지’(현재는 한솔제지)로 바꾸어 1969년 완공을 보게 되었다. 결국 전북 지역 내부에서 자본이 미약하였던 관계로 지역성장 전략은 외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벼 기술의 선진 지대로서 쌀 자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되는 쌀의 1/20,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1/3이 동진강 유역 평야에서 나왔다. 동진강 유역 평야는 벼농사의 선진지로서 쌀 증산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혁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쌀 자급을 이루고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인력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출과 중공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당시 부안군 동진면 신금마을 한 농가의 사정이 대변해주고 있다. 팔목할 만한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뒷모습이다.

건국 30년 농어촌의 변모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영농구조의 변화가 팔목할 만하다. '기적의 벼씨' 통일벼가 나오면서 농촌의 '녹색혁명'은 시작된 것이다. 으레 5월이 되면 적당히 못자리를 만들어 벼씨를 뿌리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당국의 불 같은 성화도 없지 않지만 요즘의 농민들은 당연히 이른 봄 보온 못자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밭이에 소가 주역을 맡았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영농기계화의 기수 경운기가 등장했기 때문.

“30년 전 개펄을 막아 논을 일구었던 이 마을 농토에서는 단보다 쌀 한 가마 수확하기가 어려웠지요. 뒤로는 동진강이 배수진을 치고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아 농토를 더 이상 넓힐 수 없다고 체념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동아일보』, 1978.01.04.)

1980년대에 들어와서 밥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통일계 품종은 급격히 퇴조하였다. 1978년의 도열병, 1980년의 냉해 피해를 겪으면서 병에 강하고 다수확 품종인 일반계 품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통일계를 이용한 수량증대정책을 수정하여 통일계 품종을 쌀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북 쌀은 옛날 보릿고개를 없애고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

하였으나 전북 경제에는 그다지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3) 경제 여건의 변화와 전북 경제

광복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경공업의 대명사인 섬유산업부터 시작하여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생산 및 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환·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도는 겨우 면했지만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합병·폐지되고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으며 많은 이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전북 경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면, 전국 대비 전북의 지역총생산은 3%대에 머물고 있다.(<표 7>) 전국 대비 1인당 소득은 1985년 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국 대비 70% 수준을 넘어 2014년에는 82.4% 수준에 이르렀으나 전국 평균 수준에 가까이 가기는 아직 어렵다. 이를 산업구조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구조 양상과 유사하지만 전북 경제는 농·어업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4년 전북 농어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인 8.6%이었다. 취업 구조 면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더 명백하다. 농어업 취업 인구 비중이 전국에 비해 약 3배 정도 이상 많은 것이다.(<표 8>)

〈표 7〉 지역총생산 및 산업구조 추이(1985~2014)

구분		1985	1995	2005	2014
지역총생산 (경상가격10억원)	전북(A)	3,427	14,772	26,570	44,242
	전국(B)	90,350	437,585	920,027	1,485,505
	A/B(%)	3.8	3.4	2.9	3.0

1인당 소득(천원)	전북		1,428	6,749	13,462	23,431
	전국		2,234	9,794	18,963	28,421
	전국 대비(%)		63.9	68.9	71.0	82.4
산업구조(%)	농림 어업	전북	35.4	18.0	11.2	8.6
		전국	13.0	6.2	3.2	2.3
	광공업	전북	19.2	21.8	24.6	27.9
		전국	27.4	27.7	28.5	30.3
	SOC 및 기타	전북	45.4	60.2	64.2	63.5
		전국	59.6	66.1	68.3	67.4

* 자료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지역소득: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생산」, 각 연도.

〈표 8〉 취업구조 변화 추이

(연평균 기준, 천명, %)

연도별	전체 취업자 수		농림어업 비중		광공업 비중		SOC 및 기타 서비스업 비중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1985	- ¹⁾	14,970	-	24.9	-	24.4	-	50.6
1995	854	20,432	29.7	13.4	13.9	23.6	56.3	64.0
2005	827	22,856	20.1	7.9	13.1	18.1	66.8	74.0
2015	894	25,936	15.7	5.2	13.1	17.4	71.2	77.4

* 주 1) 전북 취업자 수는 1989년부터 조사됨.

* 자료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각 연도.

다음은 전북의 공업화 기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을 살펴본다. (〈표 9〉) 전북의 제조업 구조를 보면 2014년 기준(경상가격) 업체 수로는 기계 장비가 3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석유화학이 17.6%, 음식료품 15.0%, 1차 금속 8.0% 등 순이다. 이의 변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계 장비, 석유화학, 1차 금속 등 중화학공업이 증가한 반면에 섬유 의복, 나무 제품 등의 경공업 소비재 산업이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의 경향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전국 대비

비중이 낮게 나타나 나름대로 전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9〉 전북의 제조업 구조 변화(1995~2014)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	업종별 업체 수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액					
	1995		2005		2014		1995		2005		2014	
	개소	%	개소	%	개소	%	억원	%	억원	%	억원	%
음식료품	366	17.2	240	18.9	327	17.8	7,359	17.6	13,123	18.1	21,077	15.0
섬유의복	495	26.7	209	16.5	174	9.5	5,269	12.6	3,123	4.3	3,280	2.3
나무제품	182	10.9	36	2.8	46	2.5	763	1.8	1,094	1.5	1,488	1.1
종이인쇄	123	6.3	58	4.6	61	3.3	4,682	11.2	4,645	6.4	4,354	3.1
석유화학	177	7.6	58	4.6	120	6.5	7,099	17	9,869	13.6	24,758	17.6
비금속	371	13.7	148	11.7	160	8.7	4,295	10.3	4,939	6.8	6,757	4.8
1차금속	21	1.0	29	2.3	76	4.1	1,244	3.0	2,969	4.1	11,189	8.0
기계장비	216	10.9	279	22.0	526	28.7	1,678	400	25,485	35.2	55,496	39.6
기타	343	5.7	213	16.8	345	18.8	9,417	22.5	7,253	10.0	11,904	8.5
계	1,906	100	1,270	100	1,835	100	41,086	100	72,500	100	140,303	100

* 자료 출처 : 통계청, 「 시도/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부가가치액 », 각 연도.

2014년 한국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1,000개 기업을 조사한 바가 있다.⁷⁾ 이에 의하면 2013년 전북 지역 본사 기업은 총 11개사(전국 대비 1.1%)에 불과하고 100대 기업은 단 1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0대 기업 가운데 전국에 대한 전북 기업의 매출액은 0.3%, 종업원 수는 0.4%에 불과하여 전국 대비 면적이나 인구에 크게 못미치는 영세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북 경제의 구조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의 결과물

7) <http://jcci.korchan.net>

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북의 노동자는 10%도 미치지 않았으며 농민층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농민층 비중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반면 노동자의 비중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공업단지 조성을 통한 외부 대자본의 지역 내 투자가 증가한 탓이다. 결국 전북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집적의 장소가 아니라 단순한 노동력 공급의 배후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론’으로 집약되는 전북 경제의 성장 전략은 기대만큼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전북은 공업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해 강한 요구를 지니게 되었다. 공업화를 통하여 경제개발이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기대는 무산되었다. 이어 1980년대 후반부터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장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공장을 유치하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당시 발표된 서해안개발사업 계획은 중국과의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하나의 희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전북에 보편화된 ‘2% 경제론’과 어울려 소위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는 전북 경제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해안 시대라는 새로운 경제적 발전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역의식이 ‘민간주도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적 개발 전략, 지역특화 전략 등이 나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기존 성장 전략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식의 준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북 경제에서 전주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 발견된다.(<표 10>) 2014년 전주는 205km²의 면적에 인구 6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의 3%의 면적도 채 안 되는 전주에서 전북 전체의 30% 넘는 인구가 산다. 전북 대비 전주의 예금 비중은 반절 정도 되고 국제 비중은 60% 이상이다. 사업체나 출하액 등이 전북 대비 10% 내외이면서 전북 총생산의 1/4 정도를 가지고 있다. 낙후된 전북 경제 속에서도 굴지의 지역 몫이 전주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다.

도시란 원래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급자족을 영위했던 농촌으로부터 상업 및 공업을 분리하고 인구를 흡수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전주 경제는 다른 지역과 분리해서 파악할 수 없다.

전주 시민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소비하지 않으며 전주에 있는 시장 역시 전주시민만을 위해 기능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전주는 전북 전체에 대해 많은 빛을 졌다. 전주가 '맛과 멋의 예향'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배후지 전북 농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표 10〉 전북 경제와 전주 경제

구분		단위	전국	전북	전주	대비(%)		비고
						전북/전국	전주/전북	
인구		천명	50,801	1,869	652	3.7	34.9	2014년 12월 말
면적		km ²	100,295	8,067	205	8.0	2.5	2014년 12월 말
무역	수출	백만\$	526,756	7,952	1,036	1.5	13.0	2014년 실적
	수입	백만\$	436,498	4,281	528	1.0	12.3	2015년 실적
금융	예금 ¹⁾	10억원	1,163,727.4	18,907	9,059	1.7	48.0	전국 및 전북, 전주는 2014년 12월 말 기준
	대출금	10억원	1,346,815.8	24,625	11,103	2.0	45.1	
	어음 교환액	10억원	2,774,317.5	11,439	5,901	0.4	52.0	
	부도율	%	0.17	0.52	0.49	3.1	94.2	

국세수입		억원	1,957,271	17,794	10,698	0.9	60.1	2014년 실적
지역내 총생산		10억원	1,485,504	44,242	11,104	3.0	25.0	2014년 실적
1인당 GRDP		천원	29,460	24,620	17,014	83.6	69.0	2014년 실적
광 공 업 2)	사업체	개	65,742	1,857	221	2.8	11.9	2013년 실적
	종사자	천명	2,824	92	8.2	3.3	8.9	
	출하액	10억원	1,494,752	43,990	3,513	2.9	8.0	
	부가가치	10억원	481,386	12,367	1,014	2.6	8.2	

* 주 1)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2) 종사자 10인 이상 업체(광업·제조업)

* 자료 출처 : 전주상공회의소, 「2015 전주권 경제 현황」, 2016.

전주는 농업·농촌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도시이다. 1980년대 후반 효자동을 시작으로 한 외연적 도시개발은 그 많은 논, 밭, 과수원을 주택용지, 상업용지, 도로 등으로 바꾸어 놓았다. 평화동의 미나리밭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완산동 용머리고개 너머 그 많던 복숭아밭이 사라졌다. 재배 면적의 반 이상이 없어졌고, 아파트와 아스팔트 도로로 기온이 상승해 무엇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다. 현재 전주가 안고 있는 모든 도시문제는 시장경제와 농업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전주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소외된 인간관계를 재통합하고 힘을 모으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 전북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전북 경제는 줄곧 일본 제국주의의 식량 보급 기지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전체 중에서 농업기술은 높고 그 성과물 또한 많았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전북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과 시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 경제와 미곡시장에 두고 있었다. 전북 경제구조의 전개는 점점 전북 대(對) 일본 미곡을 위한 식민지적 무역구조를 강화하고 종속 경제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지주를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의 향상 → 미곡 생산의 확대 → 대(對)일본 식량 공급 → 농민의 궁핍화’라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인 지주와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대량의 전북미를 항상 공급받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저임금 유지를 위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가격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외국 쌀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완화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식민지 전북 주민의 생활은 더 심각한 상대적인 빈곤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경제의 메커니즘은 해방과 농지개혁(1949)에 의해 해체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값싼 식량,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1970년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성장 전략은 자생적 산업화에서 외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로 전환하게 되었다. 1985년의 ‘생산도시화 선언’이 성장 전략의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는 건의 활동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전북의 공업화에 의한 지역 개발이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 완화되면서 민영화는 진전되었다. 이에 전북은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 외부 기업의 유치에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다. 핵심 사업 영역도 중화학공업에서 첨단산업 유치로 전환되어 전북은

국내외적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의 성장은 배후지 전북이 낳은 기본적인 힘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전주는 첨단 탄소산업 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탄소산업은 향후 전주의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장 부지 마련, 인력 양성, R&D, 기업 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이 취약한 지역에 큰 공장이 들어서면 경제구조가 변한다.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생산 및 수출구조도 변하며, 관련 산업도 발달한다. 이런 사업들이 전북 지역 내 지역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상호 활성화 되는 직접적인 전환기가 되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 박정근·박임구·정지영, 「전북 경제의 현황과 과제」, 『논문집』 제22집,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2.
- 소순열, 「전북 경제의 구조와 문제점」, 호남사회연구회 제1회 심포지엄, 『한국 사회변동과 전북사회』, 전북대학교, 1988.6.
- _____, 「전북 토지문제의 역사적 전개」, 『남민 3』, 1989.
- _____, 「전북의 경제와 농업」, 『옛사진 속의 전북(1894~1945)』, 국립전주박물관, 1998.
- _____, 「근대 전주경제의 구조와 변화」, 『전주학연구』 제7집, 전주역사박물관, 2013.
-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 2003.
- 송해안, 「전북 지역경제의 성장요인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02.
- 심상선, 「전북 지역경제의 발전방향」, 『지역개발논총』 제2권,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4.
- 이승우, 「전북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동에 관한 연구」, 『산업개발연구』 제6권,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87.
- 최원철, 「산업구조상의 특성으로 본 전북 경제의 낙후성과 개선방향」, 『산경논총』 제19권 제1호,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 최염규, 「80년대 전북 지역산업의 발전문제」, 『전대논문집』 제10집, 전북대학교, 1980.
- 久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成美堂書店, 1943.
- 宇津木初三郎, 『全羅北道發展史』, 文化商會, 1928.
- 全北日報社, 「全北案内」, 1933.
- 福島士朗 編, 『李朝の全州』, 1909.
- 全州府, 『全州府勢一斑』, 1941.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일보』

근대 이후 전북의 사회변동과 전주

원도연 | 원광대학교 교수

1.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2.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구조
3. 근대화 시기 농업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변화
4. 근대화 이후 전북의 인구 변화
5.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전주

1.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전북과 전주는 조선 시대로부터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다. 전북의 풍요로움은 호남이 가진 넓은 평야와 좋은 기후, 많은 인구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의 풍요로움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상과 운동을 배태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멀리는 후백제의 건국이 완산에 도읍을 정했고 조선왕조의 본향을 자처했으며, 근대기에는 천주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하기도 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로서뿐만 아니라 전주가 갖는 문화적 아우라는 매우 크고 깊었다. 전주는 조선 시대 전체를 통해 선비들의 유희와 농민들의 흥이 살아 숨 쉬는 도시였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전라도의 풍요로움이 있었다. 일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된 농경문화의 전통이 거기에 있었고, 전주는 온갖 문화예술의 기예와 장인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중심이었다.

전북의 근대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전북의 풍요는 곧 수탈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의미했다. 국가가 무능하고 관료가 부패할수록 이 지역의 풍요로움은 늘 수탈의 핵심 대상이었고 전주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전라감영은 조선 시대 대시습놀이를 주관하는 문예의 중심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 수탈의 거점이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전주는 기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군현에서 수령들의 탐학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전라감영이었다. 전라감사는 왕을 대리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지도자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은 그 본질적인 의무를 완전히 방기했고 오히려 고부민란을 부채질한 주범이 되었다. 농민들의 분노는 전주를 향했고 전주성 점령은 혁명의 첫 번째 목표였다.

결과적으로 전라감영과 전주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의

하나가 되었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정치적, 군사적 성과였고, 새로운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라감영에서 맺은 집강안은 한국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관민상화의 정치체제를 일시적으로나마 만들어 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전유할 수 없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비록 1차 농민혁명이 전라도 일대에서 일어났지만 시기와 정도를 달리했을 뿐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 당시의 정치적 무능과 부패가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타났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전주의 도시성이 한국의 역사에서 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설가 최명희는 ‘저항과 풍류’라고 해설했고, 사회학자 박명규는 ‘저항과 순응의 동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20년 전북의 역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작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여진은 길고 깊게 남았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사회적 변화를 상징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가 외세의 침탈과 상업자본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고,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은 공동체의 유대가 깨졌다. 전북의 곳곳에서 혁명과 반혁명으로 맞선 이들이 피어린 투쟁을 벌였고, 그 투쟁은 해방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2. 해방 전후 전북의 사회구조

1) 해방 전후 전북의 농업경제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 전북은 전형적인 농업 지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해방 직후 전북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 주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938년의 자료를 통해 보면 전북은 전체 인구의 82%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조선을 일본의 공업화를 위한 식량 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대륙 진출의 병참기지 또는 일본 공업 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품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토지 침투는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특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의 평야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전북의 금강, 동진강, 만경강 일대에는 웅본(熊本)농장, 세천(細川)농장, 석천(石川)농장, 등본(藤本)농장 등의 거대 지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토지 침투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전라북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10년에 이미 전체 경지면적의 약 19%가 일본인 지주에 의해 소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토지 침투는 필연적으로 전북 농업의 극심한 수탈로 이어졌다. 1928년 전북 지역은 전체 미곡 생산량의 84.0%가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었고, 그 비율은 전국 반출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주제에 의한 식량 수탈은 무엇보다도 농업 생산지로서의 전북 지역에 지주-소작관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농민층은 극도의 궁핍을 겪어야 했다. 일제시대 말기인 1940년 전북 지역의 소작지 비율은 전체의 77.1%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3/4 이상이 소작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결국 전북의 농민들은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지주들에 의한 고율의 소작료와 일제의 가혹한 착취로 인해 급격하게 빈곤화하면서 상당한 수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화전민 생활로 빠져 나가거나 도시 빈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극도로 피폐화되었던 전북의 농업과 농민들에게 해방은 곧 그동안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종식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2) 해방 이후 토지개혁과 전북의 농민운동

해방과 함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한국 사회는 하루아침에 국가권력의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해방 직후 남북한이 분단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단일경제 체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이른바 남농북공(南農北工)으로 표현되었던 한국 경제의 지역적 구조는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각기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 당시 한국 사회에 주어졌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동안의 식민지적·기형적 산업구조를 해소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경제적 과제의 첫 번째 해결 고리는 토지문제에 있었다.

1945년 해방 당시의 농업 상황은 전 국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 경지면적의 63%가 소작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농업의 지주-소작관계는 이미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식민지 지주제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지주-소작관계를 청산하고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탈을 해소시키는 농업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해방 이후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9월부터 남한 내에서 시작되었던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가 남긴 통치기구와 제도를 유지시키고 민중의 개혁 요구를 억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미군정이 취하고 있었던 점령정책은 이른바 반혁명주의와 반공주의로 집약되었고, 그것은 일제 식민지의 유산을 온존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전북 지방의 경우 농민운동의 형태를 보여 주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일제하 농민운동의 맥을 잇고 있던 농민활동가들과 건준에 의해 석방되었던 정치사상범들이 건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농민의 조직화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전북의 농민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 주었던 조직은 전북 지방 농민위원회였다. 전북 지방 농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토지의 분배, 세금 불납, 농민을 위한 정권 수립'이라는 자체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으며, 이 같은 방침은 농민운동을 기존의 사회경제적 제관계의 변혁을 요구하는 선상에서 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국가권력의 수립을 지향하는 변혁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전북 지방 농민위원회의 주장은 해방 직후 중앙 건준이 농민의 토지문제를 비롯한 민중세력의 사회경제적 변혁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렴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자발적인 요구를 집약한 선진적인 형태를 띤 운동이었다.

한편 미군정이 일제가 남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뒤를 이어 적산 관리와 식량 공출을 위해 설립한 신한공사의 양곡 수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신한공사가 접수한 일본인 소유의 토지 규모 면에서 전북 지역은 약 5만 정보로 거의 절반 이상인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북 지역의 농민들이 미군정 3년 동안 신한공사의 지배하에서 지주-소작관계의 속박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토지개혁의 요구가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신한공사에 의해 강제된 양곡 수집은 1946년의 경우 전체 계획량의 약 60%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것이어서 전북 지방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신한공사의 장악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47년 전북의 쌀 수집 실적은 계획량의 80% 수준으로 상승하고 특히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에서는 전체 계획량의 97.6%가 수집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토지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미군정은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저항이 각지에서 잇따르고 북한이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토지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개혁에 대한 전농의 입장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은 일체의 지주의 토지 소유와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을 농민이 가지게 함으로써 토지가 지주에게 지배되지 않고 농민의 개인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었다.

〈표 1〉 농지개혁 전후 전북 지역 농민층의 구성비

(단위 : %)

	농지개혁전(1947)		농지개혁후(1960)	
	농가수	경지면적	농가수	경지면적
자작	7.0	40.7	73.6	90.0
자소작	30.3		19.6	
소작	62.7	59.3	6.8	1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자료 출처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

대한민국 농림부, 『농업국제조사』

전북예향운동본부, 『광복 50년 전북발달사』, 탐진, 1996, 161쪽에서 재인용.

1947년 과도입법의원에서 농지개혁 법안이 검토되기 시작한 이후 4년여가 지난 1950년 농지개혁법이 공포됨으로써 유상몰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비로소 실시될 수 있었던 농지개혁은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토지개혁 실시가 지연되면서 지주들의 토지 방매가 성행하였다는 점은 농지개혁의 의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소작지의 면적은 해방 직후 전체 농경지의 65%에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이후인 1951년에는 8.1%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작지 면적의 감소는 지주들의 토지 방매에 따른 것이었으며, 지주들의 토지 방매는 실질적으로 1946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그 불철저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서의 지주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지개혁 당시 토지 가격 보상은 지가증권으로 지불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지주의 몰락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보상금이 연체되어 지주들은 제때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은 전쟁 등의 요인과 겹치면서 지주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몰락과 자작농 체제로의 전환은 전북의 농업에 실로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소작농

비율을 보이고 있던 전북의 농민층 구성이 자작농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위의 <표 1>에서 전라북도 농민층의 자·소작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1947년 62.7%에 달하던 소작농층은 1960년 6.8%로 격감했으며, 소작지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농지의 59.3%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반면 자작농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7.0%에서 7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작농지도 같은 전체 농지의 40.7%에서 90%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지개혁은 비록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소작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한국의 농업은 영세 소농 중심의 영농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전북의 경우도 역시 영세소농 중심의 영농체제를 확립하게 되었고, 이 같은 기초는 이후 전북 지역의 급격한 쇠퇴 및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농지개혁의 결과는 이미 전북 지역의 대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세력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전북 지역의 농업자본에 기반하여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던 많은 지주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3) 해방 직후 전북의 산업과 노동운동

1930년대 일본의 독점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고 특히 30년대 말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급속한 공업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일본은 식민지 초과이익의 확보를 위해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그 결과 조선에도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다. 1917년 2.0%에 불과하던 공업인구는 1940년에는 7.3%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농업인구는 86.4%에서 74.2%로 감소했다.

식민지 시대의 전북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쌀 수탈을 위한 농업 지역으로 특화되었다. 다음의 <표 2>에서 1938년 전북의 취업인구 구성비를 보면

농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업 부문 취업 인구의 비율이 2.3%에 머물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전라북도 취업인구 구성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
1918	90.8	1.9	4.9	1.2	1.3
1938	82.0	2.3	5.9	3.2	6.5

* 자료 출처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식민지 시대 전북의 공업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전북이 쌀 수탈을 위한 농업 지역으로 특화되면서 농산물 가공산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과, 둘째는 지역적으로 군산을 중심으로 공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전북에서는 공업 부문의 성장이 매우 지체되고 있었지만, 농산물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성장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단순히 공업 부문 생산액의 증가 추세만을 살펴봐도 1918년 8,196천 원에 불과하던 지역 내 공산품 생산액이 1937년에는 32,581천 원으로 증가하여 20년 동안 약 4배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문별로 보면 지역의 공업이 농업생산물의 수탈을 보조하는 방편으로 편성되어 전체 공산품 생산액의 40% 이상이 식료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군산항을 통하여 반출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군산은 전북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해방과 함께 일본 자본에 의해 경영되던 국내의 제조업은 거의 궤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국내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미군정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48년 귀속재산의 불하를 시작할 당시 미군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기업체는 총 822개 공장으로 전체 기업체의 21.6%, 전체 종업원의 59.9%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 귀속업체의 불하는

연고주의에 입각하여 주로 식민지 시대의 연고자와 미군정기의 관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하 가격은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장기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귀속재산은 미군정에 우호적인 한국인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귀속재산의 불하 과정은 이후 한국 자본 축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북은 식민지 시대 농업 수탈의 주요 대상 지역이었던 만큼 제조업의 성장은 매우 지체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사업체의 전국 비중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전라북도 내 사업체의 종업원 수가 전국의 7.1%에 달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총 1,903명으로 전국 비중의 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식민지 시대를 통해 전북의 제조업 성장이 매우 지체되어 있었다는 점은 귀속재산의 특혜적인 불하 과정에서 전북의 자본 형성이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전북 내 귀속업체의 불하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는 1948년에서 1959년까지 총 220개의 사업체가 불하되었으며, 이는 전국 불하 사업체 2,061개 업체의 약 10.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체 불하를 규모 별로 보면 전북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불하 업체는 전혀 없으며, 50만 원 미만이 전체 불하 업체의 47.5%를 차지하고 500만 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3.2%를 차지하여 지역 내 사업체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국 해방 후 전북 지방의 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이후 근대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의 식량 반출을 목표로 세워져 전북 내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무역의 중심 항구로 기능했던 군산항은 해방 이후 급속하게 쇠퇴하고 말았다.

3. 근대화 시기 농업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변화

1) 전북의 산업구조 및 GRDP 변화

〈표 3〉 전북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전국		전북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수	농가인구	전국비중
1970	2,483,318	14,421,730	281,515	1,658,324	11.5
1980	2,155,073	10,826,748	235,441	1,214,493	11.2
1990	1,767,033	6,661,322	188,160	708,079	10.6
2000	1,383,468	4,031,065	137,417	388,907	9.6
2005	1,272,908	3,433,573	121,749	318,998	9.3
2010	1,177,318	3,062,956	109,433	277,611	9.1
2014	1,120,776	2,751,792	104,036	250,581	9.1

*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재구성.

농업의 중심지였던 전북은 1970년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농업의 하락을 겪었다. 1970년 당시 전체 농가인구는 165만 8천 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67.9%를 차지했고 이 수치는 전국의 농가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전북의 농가인구는 급속하게 줄기 시작하여 1980년 121만 명이었던 농가인구가 1990년 70만으로 줄고 2014년에는 25만 명으로 줄었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약 13.5%에 불과한 인구 비중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전국 비중은 여전히 9.1%를 차지하여 전북이 전국적으로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전북의 핵심 산업과 인구가 농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군단위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침체를 보여

주는 지표이고, 국가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4〉 전라북도 산업구조 연도별 변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985	12.2	31.1	30.8	22.7	57.0	46.2
1990	8.4	24.6	31.6	21.5	60.0	53.9
1995	6.4	16.8	30.6	25.1	63.0	58.0
2000	4.5	13.5	34.9	28.1	60.6	58.1
2004	3.5	12.1	31.1	26.7	65.4	61.2

* 자료 출처 : 통계청 전북사무소.

〈표 5〉 전라북도 산업구조 취업자 수 연도별 변화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SOC/서비스업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05	7.9	20.1	18.1	13.2	73.9	66.7
2010	6.6	19.1	17.0	12.4	76.4	68.5
2015	5.2	15.7	17.4	13.2	77.5	71.0

* 자료 출처 : 통계청 산업구조 통계에서 재구성.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전북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매우 후진적이었다. 1985년 전북의 사업구조는 여전히 농업 비중이 31.1%로 높았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3차 서비스산업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줄고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한 반면 제조업의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달라진 통계 방식으로 보면 전북의 농업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광공업과 제조업 비중은 정체, 서비스산업은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광공업/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 이하이며, 서비스산업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70년대 전북의 산업구조는 노동집약형 경공업 중심의 구조였다. 섬유, 제지, 식품 등이 주력 산업이었고 이는 전북의 고용과 가구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공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1995년 전주 현대차 공장의 설립은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신호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산업구조는 섬유, 제지, 목재, 식품 등 고용력은 높았으나 저임금이었던 산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중화학산업이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제조업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전북의 제조업은 전국 비중에서 3%대에 머물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인 제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지만 전북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표 6〉 전라북도 제조업의 전국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963	1973	1983	1988	1993	2003	2009**	2014**
업체수	7.4	5.3	3.1	2.8	2.4	2.1	2.3	2.7
종업원수	6.0	3.2	2.6	2.5	2.6	2.6	2.7	3.2
부가가치	6.2	2.9	2.7	2.5	2.4	2.8	-	-

* 자료 출처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각 연도), 『한국통계연감』(1994)
2009, 2014년 자료는 통계청 산업통계에서 정리.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전북의 GRDP 역시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은 1985년 3.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3.1%를 기록했고, 2014년은 3.0%로 더욱 하락했다. 역시 2004년 전북의 GRDP는 24조 1천6백억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13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11위로 올라섰으나 내용은 크게 변하지 못했다.

1986~2002년 GRDP 성장률은 경기의 11.4%에 비해 전북은 4.4%를 기록,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¹⁾ 1985~2014년 기간 경기 지역은 GRDP 전국 비중이 18.4%에서 26.9%로 상승했고, 충청권도 10.0%에서 12.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영남 전체는 1985년 30.5%의 비중에서 2014년 25.6%로 감소, 서울은 24.9%에서 22.1%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라북도 연도별 GRDP 현황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1985	1995	2000	2004	2010	2014
전국 GRDP	87,975,945	410,130,587	577,970,942	787,795,655	1,265,146,117	1,485,504,665
전북 GRDP (전국 비중)	3,396,225 (3.9)	14,112,203 (3.4)	18,977,807 (3.3)	24,161,628 (3.1)	36,632,462 (2.9)	44,242,680 (3.0)
■ 권역별						
호남권	9,950,793 (11.3)	44,507,229 (10.9)	58,514,172 (10.1)	78,921,510 (10.0)	122,934,272 (9.7)	137,994,072 (9.3)
영남권	26,838,860 (30.5)	112,633,983 (27.5)	130,790,159 (22.6)	180,056,403 (22.9)	333,427,920 (26.4)	380,941,014 (25.6)
경기권	16,165,799 (18.4)	93,633,114 (22.8)	138,024,115 (23.9)	193,828,823 (24.6)	327,270,165 (25.9)	399,059,602 (26.9)
충청권	8,765,554 (10.0)	40,927,935 (10.0)	62,043,232 (10.7)	85,663,729 (10.9)	150,268,037 (11.9)	187,591,909 (12.6)
서울	21,943,929 (24.9)	102,171,454 (24.9)	138,492,266 (24.0)	182,046,380 (23.1)	289,718,721 (22.9)	328,660,905 (22.1)

* 자료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행정구역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통계청 홈페이지).

1) 한국은행, 「GRDP로 본 지역경제의 현황 및 주요특징」 2004.12.

반면, 호남권 전체의 GRDP는 1985년 11.3%에서 2014년 9.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 전북의 GRDP 비중은 3.9%에서 3.0%로 떨어졌다. 통계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으나 지역별 GRDP를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GRDP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하위 광역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전라북도 연도별 1인당 GRDP 현황 비교표

(단위 : 원)

	1989	1995	2000	2004	2010	2014
전국 GRDP	3,807,000	9,095,000	12,295,000	16,384,000	26,362,2850	28,941,457
전북 GRDP (광역 시도 순위)	2,639,000 (15위/15개 시도)	7,343,000 (14위/15개 시도)	9,848,000 (12위/16개 시도)	13,120,000 (12위/16개 시도)	20,742,667 (12위/16개 시도)	23,639,467 (11위/16개 시도)
전남 GRDP	3,230,000	10,010,000	13,223,000	20,176,000	34,649,932	32,772,260
서울 GRDP	3,940,000	9,879,000	13,741,000	18,162,000	30,080,389	32,530,271

* 주 : 1인당 지역내총생산=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해당지역추계인구.

*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통계분석과(통계청 홈페이지).

전북의 1인당 GRDP는 현재 16개 광역 시도 중 11위로 인구과밀 지역인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충남이 울산에 이어 2위로 1인당 GRDP가 50,915,856원으로 나타나 충남 지역이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체계(RIS)

전북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 불균등 발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지속적인 침체와 하락을 딛고

어떤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가가 핵심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전북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구성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야기했다. 그 결과 호남은 전반적인 상대적 저발전을 겪었고, 그 중에서 전북은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침체를 겪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0여 년간 지역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인구분포, 지역총생산(GRP) 등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으로의 총체적인 초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관리기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당시 통계로 중앙행정기관의 83.6%, 중앙소속기관의 75.2%, 정부투자기관의 61.9%, 정부출연기관의 75.5%, 정부출자기업의 84.0%, 개별공공법인의 92.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지식기반산업(연구소, 정보통신 관련업체, 벤처기업 등)의 서울 집중도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대 정부는 지방 문제의 해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초집중현상이 극복되지는 못했다. 특히 박정희 정부 당시 수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했던 대기업 진출 업종제한정책이나 유통업 진출 억제정책 등도 1990년대 이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이었던 골목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의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방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부터였다. 1990년대 ‘지역 균형 발전’ 담론은 중앙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지방 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통한 균형 성장 달성’으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의 지방화, 각 지역 활동가들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열망 등이 모아진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대학을 사업 주체로 하여 기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추진했다. 핵심은 ‘탈공업화 산업’으로 주된 내용은 테크노파크의 조성, 창업보육, 과학기술 증진, 정보통신 지원사업 등의 육성이었다. 또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지역 안배,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의 이익 극대화,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익 제공 등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 주도한 특화전략도 수행되었다. 이른바 Intelligence Polis로 표현된 신산업, 테크노파크, 생물 및 환경벤처단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조성, 교육사업 등과 Art Polis로 구분된 지역축제, 전통문화특구, 영상만화도시, 판타지 산업 유치 등, Eco Polis로 표현된 환경테마 축제, 자전거 도로, 하천 공원화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이후 국가혁신체제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하위개념으로서 지역혁신체계로서 RIS가 등장했다. NIS가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현대 산업기술의 시스템적 성격 강화,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RIS는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산 및 첨단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지역 발전(및 국가 발전)을 가능케 해 줄 지역 나름의 혁신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RIS는 지역에 첨단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가능케 해 주는 잠재적 기반 여건(세계적인 대학, 첨단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갖추어진 선진국의 경우 바로 정책 개념으로 채택이 가능한 정책이었다. RIS를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는 산업클러스터 개념이었다. 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전문화된 공급자,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산업, 관련 기관(대학, 상의, 중개 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일종의 산업공동체를 의미했다.

2002년 참여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된 지

역혁신전략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최대 과제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은 반쪽이 되었고, 혁신도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RIS의 핵심 전략이었던 특화산업 발전전략은 결과적으로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첨단산업은 과거의 전통 산업과 같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고, 전통산업은 인건비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전하면서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4. 근대화 이후 전북의 인구 변화

인구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인구구성이 어떤 성격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그 사회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 전북의 인구 특성은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요약된다.

2015년 전북 인구는 186만 9천 명이다. 이 통계는 센서스 통계이므로 주민등록상 인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센서스 결과만 놓고 봐도 2005년 178만 1천 명, 2010년 176만 6천 명에서 2015년은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보여 준다.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2만 명씩 줄던 인구가 201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히 고무적이다. 1995~2000년 기간 동안 1만 1천 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무려 10배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전라북도가 최고의 인구를 자랑했던 시기는 1965년 265만이었다. 그 인구가 40여 년 만에 87만 명이 줄었고, 다시 그 이후 5년 만에 180만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더 기막힌 반전이다. 1960년 무려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했던 전북이 점점 비중이 줄어서 1990년에는 4.77%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3.63%가 되었다.

〈표 9〉 전북의 인구 특성 변화

	전국 인구	전북 인구 (전국비중)	20세 이하	65세 이상(%)			전주 인구
				전국	전북	전주	
1925	19,020,030	1,340,430 (7.05)	657,985 (49.09)	3.89	43,439 (3.24)	-	-
1940	23,547,465	1,564,041 (6.64)	808,668 (51.70)	3.32	45,299 (2.90)	-	-
1960	24,989,241	2,395,224 (9.56)	1,229,268 (51.32)	3.74	95,632 (3.99)	-	124,352 ¹⁾
1970	31,435,252	2,431,892 (7.74)	1,315,837 (54.11)	3.31	95,911 (3.94)	7,005 (2.67)	262,300
1980	37,406,815	2,286,720 (6.11)	1,104,725 (48.31)	3.87	111,849 (4.89)	11,421 (3.11)	367,037
1990	43,390,374	2,069,378 (4.77)	779,363 (37.66)	4.98	149,310 (7.22)	22,191 (4.29)	516,965
2000	45,985,289	1,887,239 (4.10)	541,168 (28.68)	7.33	211,579 (11.21)	36,683 (5.96)	615,804
2010	47,990,761	1,766,044 (3.68)	419,573 (23.76)	11.30	289,584 (16.40)	63,176 (9.77)	646,512
2015 ²⁾	51,529,338	1,869,711 (3.63)	377,637 (20.20)	13.15	333,524 (17.84)	78,948 (12.10)	652,282

* 주 1) 1957년 전주시 『도세일람』(『전북일보』, 2000.06.01.)

2) 2015년 자료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로 작성.

*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재구성.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20대 이하 청년의 급격한 감소는 전북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한다. 1970년 전북의 전체 인구 중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4.1%였다. 전북의 곳곳에 힘들지만 젊고 발랄한 미래의 기운이 넘쳐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1990년 37.6%, 2000년 28.6%로 점점 낮아지더니 2015년에는 20.2%를 기록하고 있다. 과연 전북

에 미래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해방 전 3.24%에 불과했던 고령인구는 2000년에 11.2%를 넘기고 2015년에는 무려 17.9%가 되었다. 그나마 도시의 고령화율이 비교적 낮았으나 전주시가 12.1%를 기록하면서 도시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평균 고령화율이 13%대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의 고령화 현상도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7월에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인구 통계에서도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 가운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적게는 0.1%(경북)에서 많게는 2.8%(제주)까지 증가했다. 세종시는 35.1%의 인구 폭증 지역으로 꼽혔다. 도민들의 평균연령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연령은 40.3세. 하지만 전북은 42.3세에 이른다. 전남(43.8세), 경북(43세), 강원(42.7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고령 지역으로 꼽혔다.

〈표 10〉 2000년대 이후 1인 가구 비율의 변화

	2000	2005	2010	2015	
				가구수	1인가구 비율
전국	2,224,433	3,170,675	4,142,165	5,110,000	27.2
전북	104,780	136,754	175,026	215,000	30.6

* 자료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인구지표가 중요한 까닭은 인구 변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요소이자 사회 변화의 방향을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전북의 사회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복지비용의 증가 등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에너지의 형태를 바꿀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변화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1인 가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15년 전북의 1인 가구수는 21만 5천 가구로 집계되었다. 전체 가구수의 30%를 넘는 수치이다.

반면에 귀농귀촌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사회가 좋은 에너지로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귀농귀촌 인구를 지역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귀농귀촌은 앞으로도 국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도시와 도시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표 11〉 귀촌 가구 및 귀농인 수 변화 추이

		2013	2014	2015
전국	귀촌가구	280,838	299,357	317,409
	귀농가구원수	17,318	17,976	19,860
	귀농인수	10,312	10,904	12,114
	동반가구원수	7,006	7,072	7,746
전국	귀촌가구	14,413	16,494	16,183
	귀농가구원수	1,994	2,044	2,039
	귀농인수 (전국 대비 비중)	1,140 (11.1)	1,170 (10.7)	1,181 (9.7)
	동반가구원수	854	874	858

5.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전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지금, 미래 사회의 발전은 기술혁신이나 노동의 유연성이 아닌 협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비용을 낮추고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만 세상이 다 돈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사랑하는 친구가 상을 당했을 때 상가에서 3일간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슬퍼해 주는 행위는 절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행위이다. 노인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유익할까.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역할(일거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져 있다.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역할에 주목한다.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양보하게끔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엄마놀이를 시키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의 장난감을 기꺼이 양보한다. 집에서 엄마가 나에게 했던 양보와 헌신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선하고 사회적인 자아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순환경제의 회복이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양복한 벌을 사면 그 돈은 그 지역의 양복점으로 흘러가고, 그 양복점은 다시 그 집의 쌀값과 구뚝방과 두부가게로 혹은 동네의 다방 커피값으로 흘러다니면서 그 돈으로 온 지역이 같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구조를 말한다. 양복한 벌 값을 2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돈은 지역사회를 몇 바퀴를 돌고 돌아 200~300만 원 어치의 값을 해내고 은행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바로 이 구조가 지역순환경제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

한 지역순환경제의 모델이 완전히 사라졌다. 동네 양복점과 쌀집, 두부가게, 동네 빵집, 다방은 몽땅 한꺼번에 망했다. 동네마다 들어서는 대형 마트 하나면 동네 경제는 6개월 안에 모두 망가졌다. 친구네 엄마가 하던 양장점은 일찍이 문을 닫았고 손맬시 곱던 친구 어머니는 결국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대형마트에서 소비된 지역 경제의 자원들은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지불한 즉시 서울의 본사로 입금되는 빨대경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형 마트를 물리치고 지역순환경제를 살려 보자는 이야기도 공허하다. 동네 마트에서 정성껏 손으로 만든 두부가 없기도 하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대형 마트와 가격 차가 상당하니, 대형 마트를 안 갈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대형마트와 동네 가게의 가격 차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지역공동체가 '우리라는 의식과 사고를 갖고 공급자는 질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서로의 살림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 전북과 전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구조는 바로 이 지역순환경제의 모델이다. 사회적 경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GRDP의 상승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자신이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선순환이다.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만 누구나 쓰지 않고 남아도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다. 바로 그 자원을 시장에 내놓고 내가 필요한 어떤 것과 교환하는 시스템이 공유경제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요구와 필요를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과 공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 속에

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유경제는 개인의 소득을 높여 주지는 않지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왔던 전주가 이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순환경제의 생태적 모델을 향해 나가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강 용 기 | 서남대학교 교수

1. 서론
2.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3.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4.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인구 규모 변천
5. 요약 및 결론

1. 서론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한 것은 조선 시대 말기 고종 임금 시대인 1896년 8월이다. 전라북도 지역은 고려 시대 초반 현종 때부터 조선 시대 중반기까지 현재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방을 합하여 전라도라는 단일 지명으로 불리었다. 전라도는 조선 말기 고종 임금 때 갑오개혁(1894)을 추진하던 김홍집 내각에 의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구분된 것이다. 이 당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도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경상도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분리되었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당시 조선은 격동의 시기였다. 고종이 즉위(1863)한 후 대원군은 왕권 회복과 세도정치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 속에 끼인 조선의 운명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물러났으나(1873),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 미국과의 조약(1882)을 시작으로 조선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국내 정치세력은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임오군란(1882)은 민비의 요청에 의해 청에 의해 제압되었고, 청과 민씨 일파의 득세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적 개화세력은 일본에 의지해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지만 다시 청이 개입하여 개화파 세력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혁명(1894)이 일어났고,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군은 패퇴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1894)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일본이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갑오개혁(1894)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도 명성왕후의 시해사건인 을미사변(1895)이 일어났고,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1896, 아관파천)하였다. 이후 고종은 환궁하고 1897년 황제로 즉위해 연호를 광무(光武)로 하였지만, 국가의 자주권은 지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갔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은

이런 혼란스러운 조선 말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여(1896)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인 전주는 백제 시대 완산주(完山主)에서 시작하여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에 전주(全州)로 개칭하여(경덕왕 16년, 757)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전주는 건원이 건국(900)한 후백제의 수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라도의 수도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현재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인구구조 변천 과정을 통해 지역 위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산악, 호수, 강과 같은 자연 지리적 조건, 국가와 부족의 형성과 같은 정치적 조건, 주민과 자원의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건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여기서는 먼저 전라북도 행정구역 변천의 자연 지리적 조건을 먼저 검토한 후 전라북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라북도의 지형과 지세

(1) 강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① 금강

전라북도는 호남(湖南) 지방의 북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호남 지방이라는 말은 호수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충청도 지역을 의미하는 호서(湖西)라는 명칭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남과 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호수는 어느 곳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국에도 호남성(湖南省, 후난성)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여기는 거대한 호수인 동정호(洞庭湖, 동팅호)가 북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의 남쪽 지방이라고 부르는 데 의문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는 국토를 남과 서로 구분할 만한 그렇게 큰 자연호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호남은 전북 김제의 벽골제의 남쪽 지방이고, 호서는 충북 제천의 의림지 서쪽 지방이라는 견해가 있다.¹⁾ 그러나 호남·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호수는 한 개의 호수일 것이라는 점, 벽골제와 의림지가 아주 소규모의 저수지라는 점, 김제 벽골제의 남쪽은 전주나 익산, 군산, 부안 등의 호남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남·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호수가 벽골제와 의림지인지는 강한 의문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남과 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호수는 금강(錦江)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 금강은 전북 진안 지역에서 발원하여 충청의 공주(웅진강), 부여(백마강), 강경을 지나 군산 앞바다로 빠지는 강이다. 금강은 과거 호강(湖江)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하나²⁾ 호남 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금강이라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호남 지방은 금강의 이남 지방, 호서 지방을 금강의 서쪽 지방을 의미한다. 유사한 명칭으로 고려 시대 초기에 전라북도 지역이 강남도(江南道)로 불린 적이 있는데, 호수와 강의 이미지가 물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남과 강남의 의미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강남이 호남이 된 것은 중국에 있는 호남이라는 지명을 모방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신라와 고려 시대에

1) 네이버, 두산백과, 호남 지방, 호서 지방.

2)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금강.

는 각 지방의 고유한 이름을 중국식으로 많이 고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 행정적으로 호남 지방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자연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호남 지방은 금강 이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금강 이남 지역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백제 초기에 온조왕 시절 한강 주변에서 나라를 건국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백제의 수도는 차령산맥 이남과 금강 유역인 공주, 부여 지역이었고, 배후의 주 활동 무대는 논산, 익산 등이었다. 견훤이 전주를 중심으로 형성한 후백제의 영토는 차령산맥 이남 금강 이남의 영토였다. 후백제의 영토는 충남의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 지역이었던 것이며, 공주·부여, 논산·익산·전주·정읍 등 호남 지방이 중심 지역이었다.

② 섬진강

금강이 호남의 북쪽 지방(기호 지방 : 경기+호서)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라면 섬진강은 호남의 동쪽 지방(영남)과의 경계를 이루어 주는 강이다.

섬진강은 노령산맥의 동쪽 경사면과 소백산맥의 서쪽 경사면인 진안군 백운면의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임실군 운암면에서 갈담저수지로 흘러든다. 또한 남쪽으로는 순창군 적성면에서 오수천(獐樹川)과, 남원시 금지면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의 경계에서 요천(蓼川)과, 곡성군 오곡면 압록(鴨綠)에서 보성강(寶城江)과 합류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답리에서부터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도 경계를 이루며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³⁾

③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과 섬진강은 호남 지방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는 중요한 하천이지만,

3) 네이버, 두산백과, 섬진강.

실질적으로 전북의 중심을 흐르는 강은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이라고 할 수 있다. 만경강은 완주군 원정산(遠燈山)에서 발원하여 전주천(全州川) 등의 지류를 합하고 그 연안에 좁은 충적지를 형성한다. 유역에는 전주·익산·김제시 등이 위치하고 전라선, 호남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가 만경강을 가로질러 지나간다.⁴⁾ 동진강은 정읍시 산외면(山外面) 상두산(象頭山)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을 가로지르고 신태인읍을 북서류하다가 서해로 흘러든다. 하운(河運)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으나 호남평야의 남부를 관개한다. 특히 유역변경식 섬진강댐에 의해 역류되는 섬진강의 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용수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다. 주위에는 정읍시·김제시·부안읍 등 농산물의 집산지가 있다. 호남선, 서울·순천 간 고속도로가 이 강을 가로지른다.⁵⁾

(2) 산맥과 평야 :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호남평야

① 차령산맥

호서 지방과 호남 지방을 가르는 강이 금강이라면 호서와 호남을 구분하는 산맥을 차령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천안과 수원, 경기도 지역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공주, 부여, 익산, 논산, 익산, 전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차령산맥은 충청남도의 중부를 가로질러 충남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경계를 이루지만, 자연 지리적으로는 호남과 기호(경기+호서)를 구분하는 경계 산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백제 시대나 후백제 시대에는 차령 이남의 충청 이남 지역과 노령 이북의 전북 북부 지역은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행정체제였다. 고려 왕건의 훈요 십조는 차현과 공주강 이남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여

4) 네이버, 두산백과, 만경강.

5) 네이버, 두산백과, 동진강.

기서 말하는 차현은 차령산맥, 공주강은 금강으로 과거 후백제 지역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구분되고 있지만, 자연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지역과 충청남도 북부의 천안 아산 지역은 기호 지방(경기+호서), 충남의 차령산맥 이남과 금강 유역의 부근인 부여, 공주, 논산 등의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소백산맥, 노령산맥

호남과 영남을 구분하는 강이 섬진강이라면 호남과 영남을 구분하는 산맥은 소백산맥(小白山脈)이다. 소백산맥은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비교적 작은 산맥이라하여 소백산맥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소백산맥은 연속된 산맥이어서 영남 지방과 중부·호남 지방간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소백산맥은 현재 영남과 호남을 구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었다.

차령산맥과 소백은 호남과 영남을 구분하는 경계 지역의 산맥이지만, 전북 지역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산맥은 노령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노령의 줄기와 기슭 혹은 노령의 분지에 터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령산맥은 전주의 남부 지역과 전주시와 순창군의 중간을 지나 웅령(熊嶺)·모악산(母岳山, 794m)·내장산(內藏山, 655m) 등으로 이어진다. 노령산맥의 서부에는 드넓은 호남평야가 전개되고, 산맥 북쪽에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무주 구천동 계곡이 있으며, 내장산 일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③ 호남평야

전북평야 또는 전주평야라고도 한다. 국내 최대의 평야로서, 주로 만경강(萬頃江)·동진강(東津江) 유역에 펼쳐져 있으며 전주·익산·정읍·군산·김제 5개 시를 비롯하여 완주·부안·고창 등의 군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임실군 운암(雲岩)에는 댐이 조성되어 그 물이 호남평야의 남부를

관개하고, 만경강의 지류 고산천(高山川)의 상류에도 대아리(大雅里)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이 물이 북부권의 관개를 원활하게 한다. 농산물은 벼가 주종이며 보리·감자·채소·생강·잎담배 등의 밭작물도 많이 나고, 닥나무·모시풀 등이 산출되며, 복숭아·배·감 등의 과수 원예도 활발하다.⁶⁾

2) 전라북도 행정구역의 역사

(1) 마한과 백제 시대

전라북도는 삼한 중 마한국의 중심지로서 마한국 총 54개 부족국가 중 15개가 위치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마한국과 병합한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백제는 지방에 5방 체제를 유지하였다. 중방(中方)은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 전북 고부), 동방(東方)은 득안성(충남 은진), 남방(南方)은 구지하성(전남 장성), 서방(西方)은 도선성(미상), 북방(北方)은 웅진성(충남 공주)을 두었다.

여기서 중방이 설치된 고사부리성이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마한·백제 시대 전북 지역의 중심은 전주가 아니고 중방이 있었던 고부와, 미륵사와 왕궁이 설치되었던 익산·금마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 시대 전주 지역은 완산(完山)이라고 불리었고 전북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⁷⁾

(2)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시대) : 9주 5소경 - 완산주에서 전주로

신라는 지증왕대(500~514) 이래 영토 확장에 따라 주·군·현(州·郡·縣)을 설치하여 갔고, 또 새로운 점령지로서 정치상, 군사상 중요한 곳에는 소경(小京)을 두었다.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체제는 기본적으로 9주와 5소

6) 네이버, 두산백과, 호남평야.

7) 이동희,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

경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 9주가 최초로 완비된 것은 신문왕(681~692) 때이다. 원래 고구려 남부지역에 한산주(漢山州)·수약주(首若州)·하서주(河西州)를, 백제 지역에는 웅천주(熊川州)·완산주(完山州)·무진주(武珍州)를 신라와 가야 지역에는 사벌주(沙伐州)·청주(靑州)·삼랑주(歆良州)를 설치하였다. 5개의 소경은 현 김해 지역에 금관경(金官京), 남원 지역에 남원경(南原京), 청주에 서원경(西原京), 충주에 중원경(中原京), 원주에 북원경(北原京)을 두었다.(685년, 신문왕5) 9주의 명칭은 757년(경덕왕16)에 다시 중국식으로 고쳤는데, 고구려 지역 3개 주는 한주(漢州), 삭주(朔州), 명주(溟州)로, 백제 지역 3주는 웅주(熊州), 전주(全州), 무주(武州), 신라 지역 3주는 상주(尙州), 강주(康州), 양주(良州)로 정해졌다.⁸⁾

현재 전북 지역에 완산주, 전남 지역에 무진주가 설치되었고, 남원 지역에 남원경이 설치되었다. 이후 경덕왕 16년(757) 지금까지의 고유한 고을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때 완산주는 전주, 무진주는 무주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졌다.⁹⁾

〈표 1〉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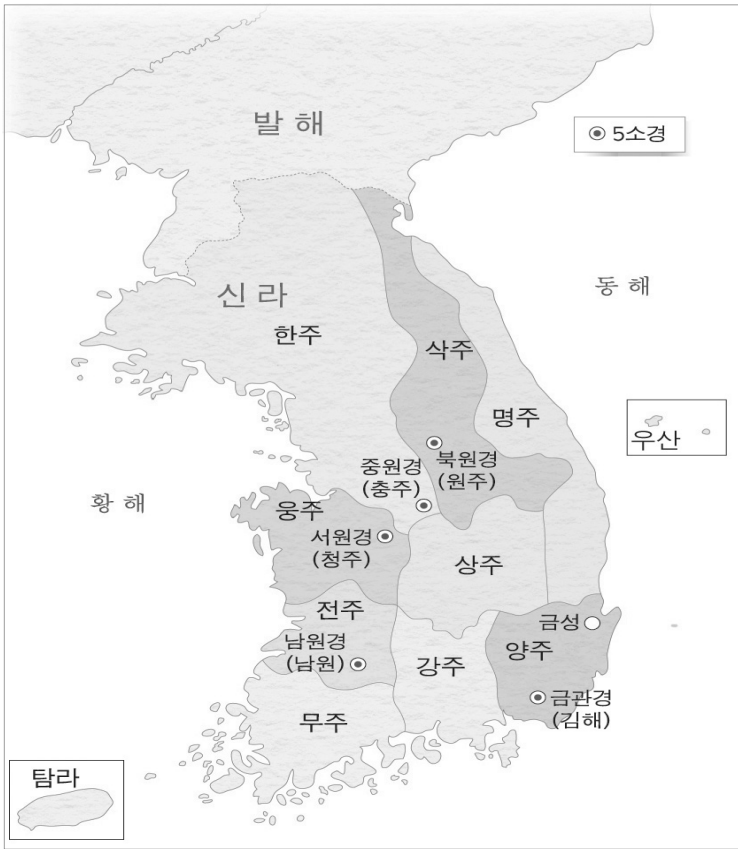
9주				5소경
최종지명 (757년)	초기 지명 (685년)	군의 수	현의 수	
한주(漢州)	한산주(漢山州)	27	46	중원경(中原京: 충주) 북원경(北原京: 원주) 서원경(西原京: 청주) 남원경(南原京: 남원) 금관경(金官京: 김해)
삭주(朔州)	수약주(首若州)	11	27	
명주(溟州)	하서주(河西州)	9	25	
웅주(熊州)	웅천주(熊川州)	13	29	
전주(全州)	완산주(完山州)	10	31	
무주(武州)	무진주(武珍州)	14	44	

8) 위키백과, 9주 5소경.

9) 전영래, 『전주시사』, 1986년, 176쪽.

상주(尙州)	사벌주(沙伐州)	10	30	
강주(康州)	청주(靑州)	11	27	
양주(良州)	삼랑주(歆良州)	12	34	
계		117	293	

〈그림 1〉 통일신라 시대 행정구역 : 9주 5소경



(3) 고려 시대 : 10도와 5도 2계 - 강남도와 전라도

① 성종의 십도제(十道制)

우리나라에서 도(道)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성종 때부터

(981~997)였다. 성종 14년(996년) 전국에 10도(十道)를 설치하였다.

10도는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강남도(江南道)·해양도(海陽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溟西道)이다. 당시 도는 수장관(首長官)없이 중앙의 안찰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돌아오는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와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때 전북 지역은 강남도(江南道)라고 불렀다. 여기서 강은 금강을 의미한다. 현재 전남 지역은 해양도(海陽道)라고 불렀다. 현종 때 강남도와 해양도는 합하여 전라도(全羅道)가 된다.

〈표 2〉 고려 성종의 10도제(996)

10도 구분	내용
관내도 (關內道)	양주(楊州, 서울), 광주(廣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등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 예종 원년(1106)에 양주, 광주 등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에 합병되었고, 황주, 해주 등은 서해도가 되었다.
중원도 (中原道)	충주(忠州), 청주(淸州) 등 지금의 충청북도 및 경기도 남부 일대. 예종 원년(1106)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에 합병되었다.
하남도 (河南道)	공주(公州), 운주(運州, 홍성) 등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 예종 원년에 양광충청주도에 합병되었다.
영남도 (嶺南道)	상주(尙州) 등 지금의 경상북도 북부 및 충청북도 일부. 예종 원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에 합병되었다.
영동도 (嶺東道)	경주(慶州), 김주(金州, 김해)가 관할하던 지금의 경상북도 남동부 및 경상남도 동부. 예종 원년에 경상진주도에 합병되었다.
산남도 (山南道)	진주(晉州)가 관할하던 지금의 경상남도 대부분. 예종 원년에 경상진주도에 합병되었다.
강남도 (江南道)	전주(全州), 영주(瀛州, 고부), 순주(淳州, 순창), 마주(馬州, 익산) 등 지금의 전라북도 일대 및 충청남도 일부. 현종 9년(1018)에 전라주도(全羅州道)에 합병되었다.

해양도 (海陽道)	나주(羅州), 광주(光州), 정주(靜州, 영광), 승주(昇州, 순천), 패주(貝州, 보성), 담주(潭州, 담양), 낭주(朗州, 영암) 등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 현종 9년에 전라주도에 합병되었다.
삭방도 (朔方道)	춘주(春州), 화주(和州), 명주(溟州) 등 지금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 정종 2년(1036)에 동계가 되었다. 명종 8년(1178)에 춘주(春州, 춘천), 동주(東州, 철원), 교주(交州, 회양) 등이 춘주도가 되었다가, 동주도(東州道), 원종 4년(1263)에 교주도가 되었다.
패서도 (溍西道)	서경(西京, 평양) 등 지금의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 후에 북계로 개칭되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 자료 출처 : 위키백과, 고려 시대 행정구역.

② 현종의 5도 2계

고려 시대 지방제도는 이후 몇 번의 개편 과정을 거쳐 중기 이후에 정비되었는데 11세기 초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5도제와 2계 제도가 성립되어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도와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5도 2계 외에 3경 8목 체제를 유지하였다.

5도는 현 황해도 지역에 서海道(西海道), 강원도 서부와 경기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주도(交州道), 현재의 개성과 서울·충주·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광도(揚廣道),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全羅道), 경주·상주·진주 등이 중심이 된 경상도(慶尙道)가 설치되었다. 양계는 북계(北界)와 동계(東界)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여진족과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변방 지역을 관리하였다. 더불어 3경과 8목(성종의 12목을 8목으로 정비)을 설치했는데 이때 설치된 3경은 남경(서울)·동경(경주)·서경(평양), 8목(牧)은 광주·충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의 8목으로 정비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은 996년(성종14)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강남도(江南道)라 칭하고 4주(전주-전주 지방, 영주-고부 지방, 순주-순창 지방, 마주-익산 지방)를 설치하였다. 1018년에 전국을 5도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면서

강남도(전북)와 해양도(전남)를 합하여 전라도라 칭했다. 전주에는 전주목을 설치하고 안찰사를 두었다.

〈그림 2〉 고려 현종의 5도 2계 3경 8목(1018년)



(4) 조선 시대 : 8도와 13도 - 전라도와 전라북도

① 조선 초기 8도 : 전라도

조선 시대 초기에는 건국(1392) 후 전국을 8도제로 나누어 행정구역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조선조 초기인 1413년(태종13)에 전국을 8도제로 정비하였는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영안도(永

安道 : 뒤에 咸鏡道), 평안도가 그것이다. 각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어 부·목·군·현(府·牧·郡·縣)을 총괄하였다. 전라도는 전주에 관찰사를 두고 현재의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제주도에 걸친 1부(府) 4목(牧), 4도호부(都護府), 12군(郡), 31현(縣)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림 3〉 조선 초기 8도제(1413)



② 조선 후기 13도 : 전라북도

조선 시대 말기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1895년 당시 김홍집 내각의 홍범(洪範) 14조에 따라 지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었고, 1895년 5월 26일 기존의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도입되었다. 8도제가 너무 행정구역을 광역화한 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

정체제를 갖추고자 23부제한성부, 인천부, 충주부, 홍주부, 공주부,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 강릉부, 춘천부, 개성부, 해주부, 평양부, 의주부, 강계부, 함흥부, 갑산부, 경성부(鏡城府)로 재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23부제는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만 시행되고, 1896년 8월 4일 다시 13도제로 개편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에 바탕을 두고 경기, 강원, 황해의 3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남북 양도로 분할하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와 같은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와 구분되었고,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지로 그 기능이 축소되기에 이르고 말았다.

(5) 일제시대 : 13도제 - 전라북도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13도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제시대에는 도-부-군-면제로 지방행정 계층이 정비되었다. 광역 행정구역은 도이며, 도 소속하에 부와 군이 존재하였고, 군 소속하에 면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서울 지역에는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京城府)와 인천부(仁川府)가 설치되었다. 이외에 전라북도에 군산부(群山府), 전라남도에 목포부(木浦府), 경상북도에 대구부(大邱府), 경상남도에 부산부(釜山府)와 마산부(馬山府)가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이북 지역까지 포함하여 10개 지역이 부가 되었다. 대체적으로 일본과의 연계가 가능하거나,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국내 곡물의 운송기지가 부로 승격되었다. 부 이외 지역은 군(郡)으로 존재하였고, 군 아래에는 면(面)제도가 도입되었다. 1930년 12월 총독부령으로 면이 분리되어 ‘읍·면제’가 실시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10년 전국을 13도 12부 317군으로 개편할 때 옥구군 일원이 군산부로 되면서 1부(군산부) 27군(전주군, 남원군,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고부군, 김제군, 태인군, 무장군, 금산군, 익산군, 무주군, 장수군,

여산군, 임피군, 금구군, 진안군, 만경군, 고산군, 흥덕군, 함열군, 진산군, 정읍군, 용담군, 운봉군, 고창군, 용안군)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1부(군산부) 14군(전주군, 익산군, 옥구군, 김제군, 정읍군, 고창군, 남원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금산군)으로 되었다.

이후 1930년 읍·면제 시행으로 전주군 전주면이 전주군 전주읍이 되었고, 1935년에 8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었다. 이때 과거 전주군 지역 중 전주부 이외의 지역은 완주군으로 부르게 되었다.

(6) 해방과 근현대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와 6시 8군 체제

해방 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45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뀌었고, 1946년 전라남도 관할하에 있던 제주도가 분리되어 남한 지역에 8개 도에서 9개 도가 되었다.

이후 194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1963년부터 부산시를 시작으로 직할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계속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는 1995년 다시 광역시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1997년에는 울산시가 다시 광역시로 승격되어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됨에 따라 2016년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의 17개 광역체제와, 75시, 82군, 69자치구의 226개의 기초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군산부(1910), 전주부(1935), 이리부(1947)가 각각 시로 승격되고, 1963년에는 금산군이 충남으로, 전남 위도면이 전북으로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1981년 정주읍, 남원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고, 1989년

에는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전주시에는 완산구, 덕진구가 설치되었다. 1995년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 설치로 옥구·정읍·남원·김제·익산 군과 군산·정주·남원·김제·이리시가 각각 통합되어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로 변경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거듭하여 2016년 현재는 6시 8군의 기초자치단체와 2개의 행정구, 15읍, 144면, 82동,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3.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와 발전

1) 전주시의 지형과 지세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군이 그 주변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형세로 서쪽 일부와 서남쪽 일부만 김제군과 접하고 있다.

전라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산악 지대와 해안평야 지대로 나뉘는데 전주는 그 접경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시의 동·남·북동쪽은 모두 노령산맥에 속하는 산지로 북동쪽에 종남산(終南山), 동남동쪽에 만덕산(萬德山), 남동쪽에 고덕산(古德山), 남남서쪽에 모악산(母嶽散) 등이 시 외곽 완주군에 자리하고 있다. 시내에는 동쪽에 승암산(僧巖山, 306m), 남쪽에 남고산(南固山, 273m)·완산칠봉(完山七峰, 163m), 북북서쪽에 건지산(乾止山) 등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 밖에 서쪽에 홍산(洪山, 216m), 천잠산(天蠶山, 153m), 전주천변에 다佳山) 등이 있다.¹⁰⁾

하천은 만경강의 상류가 되는 전주천(全州川), 삼천천(三川川)이 있다. 삼천천은 정읍군·임실군 등 노령산맥 서사면에서 발원하여 전주시의 남서

10) 이동희,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

부를 흘려서 전주천과 합류한다.¹¹⁾

2) 전주시 행정구역의 역사

(1) 백제 시대 : 완산주

한자어로 완산(完山)이란 의미는 온전한 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와 발음의 유사성을 토대로 추정하여 마한 시대 전주 부근 지역에는 원지국(爰池國)이라는 소국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다.¹²⁾

백제 시대 전주 지역은 완산주(完山州)라고 불리었다. 백제 시대에는 익산·금마·고부 등이 현재 전북의 중심 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 전주 지역은 변방 지역이었다.¹³⁾

(2) 통일신라와 후백제 : 전주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 체제를 정립하면서 백제지역에는 지금의 충청도 지역에 웅천주, 전북 지역에 완산주, 전남 광주 지역에 무진주를 설치하고, 남원에 남원경을 두었다.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 체제에서 전북의 중심 지역은 백제 시대 익산 중심에서 전주로 이동하게 된다. 익산은 과거 이 지역 백제의 중심 지역이었고 구백제의 구심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주를 이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관리했다고 한다.¹⁴⁾

이후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6년(757)에 모든 지명을 한자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이 때 완산주(完山州)를 전주(全州)로 개명하였다. 이때부터 역사

11) 위의 책.

12) 전영래, 『전주사』, 1986, 235쪽.

13) 이동희,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

14) 위의 책.

상에 전주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892년(신라 진성왕6)에 견훤이 무진주를 공격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고 900년에는 전주를 후백제의 도읍지로 선정하고 백제의 왕을 칭하고 나선다. 이로서 전주는 왕도로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이후 견훤은 고려 왕건과 패권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으나 936년 왕건의 양위 과정에서의 분열로 왕건에게 패하고 후백제는 멸망한다.

(3) 고려 시대 : 안남도호부와 전주목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고려 시대의 행정기관으로 고려 초기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지방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관이었으나, 지방제도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점차 군사적 성격을 잃고 일반적인 행정구역이 되어갔다.

고려 시대 최초로 설치된 도호부는 태조 원년(918년)에 설치된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인데, 곧 서경으로 승격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도호부는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가 존재하였다.¹⁵⁾

이중 안남도호부는 후백제가 멸망한 직후 그 수도였던 전주에 처음 설치되어 군사를 주둔시켜 다스리다가 태조 23년(940)에 폐지되었다. 이후 광종 2년(951) 고부에 설치되었다가,¹⁶⁾ 성종 14년(995)에 낭주(朗州, 지금의 영암군)에 다시 설치되고, 현종 9년(1018)에 전주로 옮겼다가 13년(1022)에 폐지되었다. 의종 4년(1150)에 수주(樹州, 지금의 부평)에 다시 설치되었고,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로 개칭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길주

15) 위키백과, 고려 시대 행정구역.

16) 이동희,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

목(吉州牧)이 되어 폐지되었다.¹⁷⁾

후백제가 멸망한 뒤 고려는 후백제의 본거지인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켜 다스리다가 태조 23년(940)에는 다시 전주로 환원하였다.

성종 때 10도제를 실시하면서 전주는 강남도에 속하였고, 12목 중의 하나인 전주목(全州牧)이 되었다. 성종 때의 12목은 양주(楊州)·광주(廣州)·해주(海州)·황주(黃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상주(尙州)·진주(晉州)였다. 12목은 이후 현종 때 광주·충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의 8목으로 재정비하였다.

성종 14년(995) 십도제(十道制)의 실시로 전라북도 지역은 강남도(江南道)로 불리었다. 여기서 강은 금강(호강)을 의미한다. 현 전라남도 지역은 해양도(海陽道)로 불리었다. 현종 때 지금의 호남 지역은 전주와 나주의 지명을 따라 전라도(1018, 현종9)라고 명명하게 된다.

(4) 조선 시대 : 전라도의 수도로서 전주

전주가 역사 시대에서 가장 긍정적인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전주는 성도(聖都)의 의미를 지닌다. 조선 개국 시에는 왕조의 본향이라 하여 전주에 완산유수부(1392, 태조1)를 두었다. 당시 유수부(留守部)는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과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간주되는 전주 단 두 곳이었다. 이후 태종 3년(1403)에는 다시 전주부로 불렀다가 1895년 전주군으로 변경되었다.

전주를 풍패지관(豐沛之官)이라는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왕실의 본향

17) 위키백과, 고려 시대 행정구역.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풍패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풍패라는 말은 왕실의 본향을 상징하는 의미로 쓴다.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남문은 풍패지관의 풍 자를 남문에 덧붙인 지명이며, 서문은 패서문(沛西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전주는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조선 시대의 전주는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는 지역으로 56개의 군현을 다스렸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전북 지역은 정여립의 역모사건, 동학혁명(1894)을 거치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전주는 1896년 이후 전라남도과 구분된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부분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4〉 조선 시대 전주부성 지도(1872)



* 자료 출처 : 네이버 전주 부성 지도, 『한국지명유래집』

〈그림 5〉 전주 시가지도에 그려 본 전주부성



* 자료 출처 : 구글 지도(www.google.co.kr/maps).

(5) 일제시대와 근현대 :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전주

일제가 지배하기 시작한 1914년 19월 전주군에 전주면을 설치하였고, 1931년 4월에는 전주면을 전주읍으로 개편하였다. 1935년 10월 1일에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과 분리되었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전주부는 해방 후 1949년 시로 승격되었고,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그 기능을 이어 가고 있다. 1989년 5월에는 덕진구와 완산구의 2개 행정구가 설치되었다.

정부 수립 후 전주시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

-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전주시로 개칭.
- 1957년 11월 6일 완주군 초포면, 우전면의 일원, 조촌 용진 상관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
- 1973년 7월 1일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중 일부를 우이동에 편입.
- 1983년 2월 15일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색장리 일원과 용진면 산정리중 815필지를 전주시에 편입.
- 1987년 1월 1일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
- 1988년 7월 1일 전주시에 출장소 설치(완산, 덕진).
- 1989년 1월 1일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금상리 및 구이면 중인리, 용복리, 석구리, 원당리를 전주시에 편입.
- 1989년 5월 1일 완산구, 덕진구 설치.
- 1990년 7월 1일 효자동을 효자1동과 효자2동으로 행정동 분동(39개 동).
- 1990년 8월 1일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 중리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중동으로 편입.
- 1992년 5월 1일 효자2동을 효자2동과 효자3동으로 행정동 분동(40개 동).
- 1994년 8월 8일 삼천동을 삼천1동과 삼천2동으로 행정동 분동(41개 동).
- 1994년 12월 1일 덕진구 서노송동, 덕진동 일부를 완산구 경원동, 서신동, 남노송동 일부를 경원동, 중화산동 일부를 서신동, 서신동 일부를 덕진동, 동산동, 고랑동, 송천동 일부를 팔복동 4가, 고랑동 일부를 전미동으로 구·동 간 경계 조정.
- 1995년 4월 12일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를 효자동, 덕진구 전미동·호성동 동 간 경계 조정.
- 1995년 4월 20일 완산구 서신동·삼천1, 2동, 효자1, 2, 3동을 관할하는 효자출장소 설치.
- 1996년 2월 26일 완산구 평화동을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행정동 분동(42개 동).
- 1996년 3월 4일 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중노송2동, 태평2동 일부를

다가동, 동완산동 일부를 서서학동으로 편입, 동 간 경계 조정.

- 1996년 9월 1일 완산구 중앙동·다가동·고사동을 중앙동, 경원동·풍남동·전동을 풍남동, 태평1동·태평2동을 태평동으로 통합. 완산구 중화산동을 중화산1동·중화산2동, 덕진구 우아동을 우아1동·우아2동, 송천동을 송천1동·송천2동으로 효자출장소 효자3동을 효자3동·효자4동, 삼천2동을 삼천2동·삼천3동으로 행정동 분동.
- 1996년 9월 2일 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풍남동, 평화동(흑석골) 일부를 서서학동, 덕진구 진북1동 일부를 금암2동, 금암1동 일부를 덕진동, 우아동 일부를 인후3동으로 동 간 경계 조정.
- 1997년 10월 4일 완산구 서완산동, 삼천1동 일부를 완산구 효자1동으로 완산구 효자1동 일부를 완산구 삼천1동으로 동 간 경계 조정.
- 1998년 7월 1일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를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일부를 효자1동으로, 완산구 중화산2동 일부를 서신동으로, 완산구 서신동 일부를 중화산2동으로,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부를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1가 일부를 우아2동 2가로, 덕진구 우아2동 2가 일부를 산정동으로, 덕진구 산정동 일부를 우아동 2가로, 완산구 평화동 1가 일부를 평화동 2가로, 완산구 평화동 2가 일부를 평화동 1가로 동 간 경계 조정.
- 1998년 8월 1일 효자출장소 폐지.
- 1998. 8. 1 행정동 통합.
 -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동 → 동서학동
 - 덕진구 전미동, 송천2동 → 송천2동
- 2000년 2월 21일 완산구 효자동 1가 일부를 완산구 삼천동 1가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일부를 완산구 효자동 1가로, 완산구 중동일부를 완산구 상림동으로 경계 조정.
- 2005년 8월 1일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덕진구 진북동 일부를 완산구 태평동으로, 덕진구 인후동 1가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완산구 전동 일부를 완산구 중앙동 4가로, 완산구 중노

- 송동 일부를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를 완산구 평화동 2가로, 덕진구 인후동 2가 일부를 덕진구 금암동으로, 덕진구 우아동 3가 일부를 덕진구 인후동 1가로, 덕진구 송천동 2가를 덕진구 송천동 1가로, 덕진구 도도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구·동 간 경계 조정.
- 2005년 8월 1일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조정.
 - 2005년 8월 1일 행정동 통합.
 - 완산구 중앙동 + 완산구 태평동 → 중앙동
 - 완산구 풍남동 + 완산구 교동 → 풍남동
 - 완산구 중노송1동 + 중노송2동 + 남노송동 + 서노송동 → 노송동
 - 완산구 동완산동 + 서완산동 → 완산동
 - 덕진구 진북1동 + 진북2동 → 진북동
 - 2007년 5월 31일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일부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로, 덕진구 덕진동 1가 일부를 진북동으로, 덕진구 송천동 2가 일부를
덕진구 송천동 1가로 경계 조정.
 - 2010년 11월 18일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를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평화2동 1가 일부를 완산구 평화1동 1가로, 완산구 효자동 3가 일부를
효자동 2가로, 효자동 2가 일부를 효자동 3가로 경계 조정.

* 자료 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전주의 역사.

4.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인구 규모 변천

1) 전라북도 인구 추세

(1) 전라북도 인구 규모 변화

〈표 3〉 전라북도 인구 추세(1925~2010)

일제시대(전국은 남북한 전체 인구)

연도	1925	1930	1935	1940	1944
전국(명)	19,020,030	20,438,108	22,208,102	23,547,465	25,120,174
전라북도	1,340,430	1,467,604	1,515,823	1,564,041	1,639,213
구성비	7.0%	7.2%	6.8%	6.6%	6.5%

대한민국 시대(전국은 남한 인구)

연도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전국	20,166,756	21,502,386	24,989,241	29,159,640	31,435,252	34,678,972
전라북도	2,048,951	2,124,521	2,395,224	2,521,207	2,431,892	2,455,093
구성비	10.1%	9.9%	9.6%	8.6%	7.7%	7.1%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5	2010
전국	37,406,815	40,419,652	43,390,374	44,553,710	45,985,289	47,990,761
전라북도	2,286,720	2,201,265	2,069,378	1,900,558	1,778,879	1,766,044
구성비	6.1%	5.4%	4.8%	4.3%	3.9%	3.7%

* 주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전북 인구는 2005년 1,885,335명, 2010년 1,868,963명
2015년 1,869,711명으로 통계청 인구 총조사 수치와 차이가 있음.

*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1935년 전북 인구는 추정치임.

전라북도 인구는 일제시대에는 약 130만(1915)에서 165만(1944) 정도를 유지했고 남북한 인구를 합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했다. 해방과 정부 수립 후에도 꾸준한 인구 증가를 보였고, 1966년에는 252만이라는 최고의 인구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과 경부축의 산업 개발로 인한 농촌 지역 인구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나게 되었고, 농업 지역이던 전북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1960년대 250만의 인구는 1970년 말에는 230만대로, 1980년 말에는 200만대, 1990년 말에는 180만대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170만 명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전북 인구는 2015년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어디까지 줄어들지 최저점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인구 추세 지역 간 비교 : 전북, 전남·광주, 서울 지역의 인구 추세 비교

〈표 4〉 전북과 전남·광주, 서울특별시 인구 추세 비교(1960~2010)

(단위 : 명)

연도	1960	1966	1970	1980	1990	2000	2010
전북	2,395,224	2,521,207	2,431,892	2,286,720	2,069,378	1,887,239	1,766,044
전남 광주	3,553,041	4,048,769	4,004,832	3,778,777	3,645,661	3,345,235	3,194,892
전 남	3,553,041	4,048,769	4,004,832	3,778,777	2,506,944	1,994,287	1,728,749
광 주					1,138,717	1,350,948	1,466,143
서울시	2,445,402	3,793,280	5,525,262	8,350,616	10,603,250	9,853,972	9,631,482

* 주 :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전북 인구는 2,050,485명, 전남 인구는 3,042,442명, 서울 인구는 1,446,019명.

* 자료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 추세, 광주시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함.

전북 인구 추세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전북 지역의 인구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수도 서울과 전남 광주 지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 광주 지역은 전라북

도와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966년 400만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다가 계속 떨어져 지금은 320만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인구에 비해 약 80만의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는 직할시(1986)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전주시 인구 추세

(1) 전주시 인구 규모 변화

〈표 5〉 전주시 인구 추세(1960~2014)

(단위 : 명)

연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인구수	188,726	216,908	262,816	311,432	366,997	426,498

연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수	517,104	570,570	622,238	623,804	646,535	658,570

※ 자료 출처 : 통계청 전주시 통계연보, 전주시청 홈페이지 전주 통계 DB

(2) 전주시 도시 인구 순위 변화 추세

〈표 6〉 일제시대, 한국전쟁 전후 도시 인구 순위 변화(1910~1955)

(단위 : 명)

순위	1910	1930	1940	1949	1955
1	경기 경성부	경기 경성부	경기 경성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78,958	355,429	930,547	1,446,019	1,574,868
2	경남 마산부	전남 제주도	경남 부산부	경남 부산시	경남 부산시
	125,324	199,577	240,033	473,619	1,049,363
3	경북 상주군	경기 고양군	경북 대구부	경북 대구시	경북 대구시
	102,531	186,168	193,414	313,705	488,960
4	경북 대구부	전남 무안군	경기 인천부	경기 인천시	경기 인천시
	98,559	185,306	180,216	265,767	321,072
5	경남 부산부	전북 전주군(5)	전남 목포부	전남 광주시	전남 광주시
	96,418	182,878	69,183	138,883	233,358

6	충남 공주군	충북 청주군	전남 광주부	충남 대전시	충남 대전시
	95,079	173,423	64,084	126,704	173,143
7	경북 경주군	경북 경주군	전북 전주부(7)	전남 목포시	경남 마산시
	93,523	170,326	55,978	111,128	129,986
8	경남 진주군	경북 상주군	충남 대전부	전북 전주시(8)	전북 전주시(8)
	91,988	168,120	55,249	100,624	124,352
9	충북 청주군	전북 정읍군	전북 군산부	경남 마산시	전남 목포시
	90,299	160,492	52,923	91,291	113,636
10	경북 안동군	경북 영일군	경남 진주부	경남 진주시	전북 군산시
	89,589	158,578	45,677	77,473	86,446
11	충북 충주군	경남 통영군	경남 마산부	전북 군산시	경기 수원시
	87,706	157,722	36,549	74,447	81,692
12	경기 양주군	전남 나주군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87,614	157,268		64,571	81,284
13	전북 전주군(13)	경북 안동군		강원 춘천시	경남 진주시
	83,551	154,040		54,539	78,295
14	경남 밀양군	경기 수원군		전북 이리시	강원 원주시
	83,473	152,690		46,674	76,414
15	경남 김해군	전북 익산군			전남 여수시
	83,201	148,221			73,081
16	전남 순천군	경북 달성군			강원 춘천시
	82,551	147,587			67,888
17	전남 광주군	충남 서산군			경남 진해시
	81,171	145,401			67,604
18	전남 제주군	경북 울산군			경북 경주시
	78,403	142,342			65,402
19	전남 목포부	전북 김제군			전북 이리시
	77,609	140,113			62,226
참고	부산부(96,428) 대구부(98,559) 광주군(81,171) 인천부(58,821) 목포부(77,609) 군산부(24,919)	부산부(130,397) 대구부(101,078) 광주군(131,138) 인천부(63,655) 목포부(31,817) 군산부(25,961)	1935년 10월 전주군이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분리됨	전체 도시 수가 14개임	부산은 1963년부터 직할시로 승격

* 자료 출처 : 1910 · 1930년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통해 부와 군을 통합하여 비교함. 1940년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통해 군을 제외하고 부만을 비교함. 1949 · 1955년은 『대한민국 통계연보』를 통해 군은 제외하고 시만 비교함.

〈표 7〉 전주시 도시 인구 순위 변화(1960~2016)

(단위 : 명)

순위	1960	1970	1981	1990	2000	2010	2016
1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2,444,883	5,536,377	8,676,037	10,627,790	10,373,234	10,208,302	10,022,181
2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1,162,614	1,880,710	3,249,643	3,797,566	3,812,392	3,543,030	3,513,777
3	대구시	대구시	대구시	대구시	인천시	인천시	인천시
	678,277	1,082,750	1,838,037	2,228,834	2,562,321	2,710,579	2,925,815
4	인천시	인천시	인천시	인천시	대구시	대구시	대구시
	402,077	646,013	1,141,705	1,818,293	2,538,212	2,489,781	2,487,829
5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대전시	대전시	대전시
	315,124	502,753	769,777	1,144,695	1,390,510	1,484,180	1,518,775
6	대전시	대전시	대전시	대전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229,393	414,598	668,212	1,063,084	1,301,540	1,433,640	1,472,199
7	전주시(7)	전주시(7)	울산시	울산시	울산시	울산시	수원시
	188,726	262,816	450,541	682,978	1,044,161	1,114,866	1,184,624
8	마산시	마산시	마산시	부천시	수원시	수원시	울산시
	157,547	190,992	400,501	667,777	951,253	1,073,149	1,173,534
9	목포시	목포시	성남시	수원시	성남시	성남시	창원시
	129,667	177,801	388,202	644,968	928,196	962,726	1,070,064
10	청주시	수원시	전주시(10)	성남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92,342	170,518	375,703	540,764	800,287	938,784	1,027,546
11	수원시	울산시	수원시	전주시(11)	부천시	부천시	용인시
	90,806	159,340	324,225	517,104	780,003	869,944	975,746
12	군산시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전주시(12)	용인시	성남시
	90,481	143,944	267,228	497,429	622,238	839,204	971,424
13	여주시	춘천시	안양시	마산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87,280	122,672	258,480	496,639	583,240	705,346	848,987
14	진주시	진주시	부천시	안양시	청주시	전주시(14)	청주시
	86,867	121,622	245,942	480,668	582,758	635,007	831,912
15	춘천시	여주시	목포시	광명시	안산시	청주시	안산시
	83,008	113,651	226,747	328,803	575,574	643,161	697,885
16	원주시	군산시	진주시	포항시	창원시	안양시	남양주시
	77,001	112,453	210,439	318,595	523,142	616,547	653,454
17	경주시	원주시	포항시	진주시	포항시	천안시	전주시(17)
	76,032	111,972	206,346	258,365	517,250	540,832	652,282

18	충주시	경주시	제주시	목포시	마산시	남양주시	천안시
	68,624	92,093	174,898	253,423	434,085	525,211	605,776
19	제주시	진해시	군산시	안산시	천안시	창원시	안양시
	68,090	91,947	168,545	252,157	425,135	502,727	597,789
20	진해시	순천시	여주시	군산시	용인시	김해시	화성시
	67,412	90,910	168,172	218,216	395,028	492,313	596,525

* 자료 출처 : 1960년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70 · 1981 · 1990 · 2000년은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10 · 2016년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참조하여 구성함.

전주시의 인구 추세를 보면 1950년대 15만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다가 점점 늘어나서 1960년대 말에는 25만 정도의 인구를 유지한다. 이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70년대 35만, 80년대 50만, 90대에는 약 60만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주 인구는 약 65만 정도에서 정체를 보여 주고 있다.

전주시 도시 인구 순위를 보면 일제시대인 1910년에는 13위, 1930년에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부로 승격한 1940년대에는 7위, 해방과 한국전쟁 후에는 8위를 유지한다.

1960년에는 전북의 중심 도시로서 7위를 유지하다가 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점 순위가 떨어져서 1980년 10위, 1990년 11위, 2000년 12위, 2010년 14위, 2016년 현재 17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

5. 요약 및 결론

행정구역은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자연지리적 환경이 변하면 변하게 된다. 또한 정치 · 경제 · 행정 등의 인문지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

기도 하며 변천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한다.

여기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라도는 고려 시대부터 있어 온 지명이며(1018, 현종9), 전라북도(조선후기 말기(1896, 고종33)부터 존재했던 지명이다. 그동안 전라북도 지역은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조선 시대 말 전라북도로 한정되면서 그 세력은 제한적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1966년 250만대의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170만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는 전라도나 전라북도보다도 훨씬 전인 통일신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지명이다.(757, 경덕왕16) 전주라는 지명의 역사는 1,200여 년의 역사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전주는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후백제의 발상지, 조선 왕조의 본향이며, 전라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랫동안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보면 일제시대 5위권 도시였던 전주는 해방 후 7~8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80년대 90년대에는 계속 떨어져 2010년에는 14위, 2016년 현재는 17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천년고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심려 있는 고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14.
- 이동희,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역사박물관, 2005.
- 전라북도, 『내 고장 전북의 뿌리』, 1984.
- 전주시, 『전주시사』, 1986.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감(1910~1944)』.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9.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1952~2015)』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19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77)』, 1999.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규모(2002~2016)』
-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1969~2011)』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한민족문화백과사전
- 위키대백과사전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전라북도의 역사
- 전주시청 홈페이지. 전주시의 역사
-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전주의 역사

사회사로 본 전라북도 문화지형의 변화

-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문 윤 결 |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2. 197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3. 198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4. 1990년대 전라북도 문화지형
5. 2000년대 이후 전라북도 문화지형
6. 글을 나오면서

1. 시작하는 말

한 사회의 문화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첫 번째 이유는 문화는 인간 생활양식의 다양한 면들이 중첩되면서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승되고 축적되고, 그리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세대나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역 문화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게 된 것이 1980년대 말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문화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문화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지도 사실 애매하다는 점이다. 즉 한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무엇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할지 난감하여 특별한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 있는데 우리 사회가 문화라는 개념에 주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전의 일들은 특별히 문화라는 항목으로 그 누구도 정리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료는 많이 존재하지만 문화적 사료는 충분하지가 않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변화도 이러할진대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를 전라북도로 한정하면 더더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통이나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구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원활 해지고, 매스미디어가 보급되면서부터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특성이 희미해 지고, 지역의 문화적 격변도 서울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향과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역만을 한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보려 한다.

첫째, 전라북도 예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문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의 문화적 흐름과 영향을 특징적인 요인과 그로 인해 생겨난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시기적으로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누어진 1896년부터 전라북도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지역의 특별한 사건이나 현상이 전라북도 문화적 흐름의 변화를 유발한 동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 온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문화적 흐름에 미친 영향도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겪은 사회사적 흐름에 따라 전라북도의 문화지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197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문화의 바람은 먼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전형적인 1차 산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여파로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 대거 노동력의 도시 이주를 부추기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농촌 젊은 이들의 도시 이주가 늘면서 급속히 농촌 사회는 붕괴되고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가 일어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규범이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혈연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집단 의식과 규범은 개인을 강하게 통제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지만 핵가족제도 하에서는 집단 의식과 공동체 규범보다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개인의 자기발언권과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도시로 이주한 개인들은 공동체적 규범을 벗어나면서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과 도덕,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들의 문화는 기성문화를 위협하는 반문화, 하위문화, 저항문화로 규정되면서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풍속도 중 하나는 바로 자유연애의 시작이다. 이른바 낭만적 사랑이 본격화된 것이다. 낭만적인 자유연애는 사랑에 기초하는데 사랑이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동체적 규범 하에서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공동체로부터 멀리 벗어난 개인들은 공동체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성 교제와 성적 결합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성세대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합, 또는 이성의 선택을 문란한 사생활로 규정해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세대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특별한 문화적 흐름은 대학에서 본격화되었다. 청바지, 통기타 등으로 대변되는 포크문화가 등장하면서 전북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포크음악을 하는 동아리가 등장하였다. 또 멀리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과 일제 치하에서 펼쳐진 농촌계몽운동의 뒤를 이어 방학이면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떠나는 농활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생의 문화가 농촌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 일부 민족의식이 강화되면서 우리 것 찾기 운동이 시작되어 탈춤 이라든지 우리 민요 가락이나 우리 전통 소리를 찾아가는 문화적 활동도 시작되었다.

또 이 시기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방문화이다. 다방은 일종의 사교클럽이나 동호인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특히 동문거리에 있는 다방과 중앙동 우체국 사거리에 있는 다방 등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문화활동을 모색하였다.

대학에서 축제문화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1967년 처음으로 대학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초기 대학축제는 간단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정도였으나 70년대 청년문화가 꽃피우면서 대학축제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3. 1980년대 전라북도의 문화지형

1980년대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다.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이 있었고, 오일쇼크의 해소 등 세계의 경제환경이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경제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지만, 군부독재의 연장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여파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대학 및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권을 형성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등장한 것이다.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의 시작이 그것이다.

민중문화운동은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과 80년 광주민주화항쟁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시민군의 대부분이 지식인이거나 명망가가 아니라 일반 기층 민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역사와 사회의 주인 공이 민중이라는 의식에서 시작된 민중을 주인으로 하는 문화운동이다.

민중문화운동은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문화운동은 그 자체로 반정부 반국가적 반문화로 낙인찍히면서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는 문화를 사이에 둔 정부와 시민단체 간 투쟁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는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초기는 민중문화운동이 싹트고 이른바 운동권 문화로서 자리 잡는 과정이었으며 정부와 극렬한 투쟁 속에 있었던 반면, 1987년 이후부터는 민중문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1986년 6월 민주화항쟁의 승리로 인해 정부의 탄압이 다소 약해졌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초기 대학에서 민중문화운동을 전개하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라북도에도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문화단체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극단 황토, 갯지쟁, 전북 문화저널, 민족미술인협의회(민미협), 전북민족문화작가회의 등이 등장하면서 대학에서의 문화운동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1980년대 문화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까지 논의된 바 없는 다양한 문화이론과 문화담론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민중문화운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등장은 문화운동의 관념적 차원에서가 아닌 민중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졌는데 문화와 예술이 엘리트 중심의 취향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며 생활양식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하는지까지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였던 것이다.

즉 80년대에는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간의 문화운동이 갖고 있던 깨어 있지만 나약한 지식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배세력의 이태올로지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적 대응과 투쟁의 수단으로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대항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을 우리의 민족문화로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문화운동 전반에 걸쳐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운동 단체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하기 시작해 지역문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4. 1990년대 전라북도 문화지형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으로 문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보다 폭넓은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문화지형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반은 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으로 대학에는 현실을 노래하는 노래패가 각 학과에 만들어질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학교 곳곳에서 풍물과 장구 등 우리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동구 사회

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화상품’ 등은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질서를 구성함에 있어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미 현대인의 생활이 민족국가나 국민국가 내에서의 정치경제 질서라는 범주를 넘어설 만큼 확장되어 있고, 환경·금융 등 여러 사례들에서 관찰되듯 개인적 운명이 세계체제라는 보다 큰 틀 내에서 결정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의 문제가 곧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문화상품’이란 문화가 이미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표현 등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문화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에서 이해하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90년대 초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과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시민사회운동론 등도 지금까지의 문화운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역문화운동을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지역문화운동이 다양한 방향으로 보다 분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문화예술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문화운동 대신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일상의 문화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나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등장은 더욱 시민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문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또다른 변화는 부정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90년대 말 문화경제, 문화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즉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문화에 대한 대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동안 민중문화의 반대편에서 이데올로

기 투쟁의 대상이던 대중문화가 시대의 총아로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대학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X세대, 신세대 논쟁과 과연 대학문화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학이 과거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집단으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자기 표현과 자기 발언이 금지되던 시절에 대학생 집단은 시대적 고민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발언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이들은 확실히 기존 사회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형성해 갔다. 이들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청량제였고, 우리 사회의 경보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얘기할 때 7~80년대 대학문화를 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90년대 말 이후 대학문화는 실종 상태라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다.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에서 문화예술, 사회봉사, 학술이념 관련 동아리들이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했고, 대학은 대중문화의 소비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대학문화는 그토록 혐오해 온 기존의 지배문화를 재생산하는 데 열중하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자본주의적 상품문화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학문화에서 저항과 도전의 정신은 사라졌고, 시대의 사명,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비판을 통한 창조의 정신 또한 사라졌으며 상품문화의 식민지, 상품문화의 복제품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활동이 있었다. 그것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 주년을 맞이하여 치러진 기념문화행사인 ‘역사맞이 굿’이라는 행사를 지역문화 단체들이 공동으로 치러낸 일이다. 동학백 주년을 맞아 지역의 민간문화 단체들이 연합하여 행사를 치르는 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은 이후 지역에서 추진된 대형 문화행사를 지역문화 전문 인력들이 상호 연대하여 치르는 계기로 이어졌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들의 연대는 새로운 문화 단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진보적인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만든 전북문화개혁회의와 시민행동 21의 문화센터가 바로 그것이었다. 두 단체는 지역문화 현안에 주목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나 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에 주력하였다.

90년대 후반 또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생겨났다. 1997년 ‘국민의 정부’의 등장과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예산 중 문화 예산을 1%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하였다. 그동안 서울과 지방으로 이분화되어 모든 문화가 서울로 집중되는 시대에 지역문화라는 개념은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지역문화의 해’가 선포되면서 이제 지방의 문화는 지역문화라는 개념으로 정의되었고, 서울과 지방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지역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이 힘이 되는 것이었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쳐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5. 2000년대 이후 전라북도 문화지형

알지 못할 불안과 새로운 세기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출발한 2000년대는 이른바 문화의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만큼 지역문화 현장이 숨 가쁘게 돌아갔다.

2000년대 초반은 이른바 축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2000)를 시작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2001), 세계에서전북비엔날레 등 매

며드급 축제가 개발되었으며 이어서 도내 각 지역에서 새로운 축제들이 연이어 탄생하였다. 하지만 축제의 효용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가 서로 달랐다. 모든 축제들에 대해서 신랄한 평가가 이어졌고, 축제의 정체성이나 축제의 산업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이는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으며, 또한 축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적용한 탓이기도 하였다. 축제를 만드는 것도 낯설었지만 축제를 평가하는 방법은 더욱 낯설었다.

또 2001년 도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은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들에 대한 민간 위탁 논쟁이었다. 전북도립국악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민간 위탁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는 뒤이은 전주시 전통문화특구 내 문화시설들과 도립미술관의 민간 위탁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 문화시설들만 민간 위탁이 이루어졌고, 국악원과 미술관은 전라북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축제와 문화시설의 민간 위탁 과정에서 영화제, 소리축제, 소리문화의전당 등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와 시설이 지역이 아닌 서울의 전문 기획자나 전문단체에 위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내 내홍을 겪는 것을 보며 도내 문화계에는 반성이 일었다. 도내 문화계에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문화 환경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가진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북문화저널에서는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최초로 문화기획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시행하여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영화제나 소리축제의 등장은 지역문화계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효과도 있었다. 시민영화제와 전주단편영화협회 등이 탄생하는 등 영화영

상 분야나 축제기획, 퓨전음악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문화 관련 영역의 인적 인프라가 더욱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에는 예술노조가 탄생하는 일도 있었다. 2001년 8월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노동조합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에 성공한 경우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산하 각 예술 관련 기구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후 전주시 등에도 예술노조들이 생겨났다.

2003년을 전후로는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후원자로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본주의를 삶의 원리로까지 신봉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은 아직 자본주의적 경제상품이 되지 못해 화폐로 바로 전환되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주 원인 중 하나였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은 스스로 자본의 재생산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과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이 기댈 곳이 지자체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또 다른 후원자로서 지역 기업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2004년은 전통문화와 생태문화에 대한 주목이 일어난 해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정책이 구체화되었고, 부안 방폐장 사건으로 인해 생태문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크게 주목받게 된 해이기도 하다.

이 시기 국가적으로도 ‘한브랜드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정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고 날개를 단 듯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전주 한옥마을은 물론 전라북도가 보유한 전통문화자원들이 기지

개를 펴고 문화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은 물론 한지, 공예, 한국 음악 등 전주의 강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융성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했고, 전라북도 역시 전통문화자원을 지역의 특화된 산업자원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전통문화자원을 어떻게 현대적인 산업자원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CT산업의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다른 한 차원은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첫 번째 차원은 지역 대학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단을 설립하며 추진해 갔고, 두 번째 차원은 새로운 관광이벤트, 특히 새로운 지역 축제의 개발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코스의 개발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모색하며 추진되었다.

이 시기 또 하나 지역문화의 특징적인 흐름은 국가정책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등장한 참여정부는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 핵심 요소로 문화가 새로운 국정 과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문화정책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논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민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2004년 5월 부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주, 대전, 서울, 춘천, 제주 등을 거치며 각 지역의 문화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법률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지역문화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법률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률안이 완성되어 갔다.¹⁾

지역문화진흥법은 전라북도의 문화 현장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2004년 전주에서 발의된 ‘전주 전통문화도시 정책’의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지역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문화 기초시설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또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 참여의 의무화 등 지역문화정책의 설계 및 추진, 실행 과정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구체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설계의 의무화 등 전라북도 문화정책 및 문화 현장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진행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들을 민간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들을 대거 양성하고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 갔다.

2006년 10월 21일, 제주도에서 전국의 문화정책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참여해 열린 지역문화대토론회 초청 강연에 초대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성경룡 위원장은 ‘창조도시에 입각한 지역 발전과 문화정책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동안 국가 주도의 일극집중형 발전의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급속한 도시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삶의 공간이 황폐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

1)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은 몇 차례 상임위 계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월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에야 시행되었다.

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도시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음악, 영화, 연극, 미술, 공예,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꼽으면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새로운 문화예술적 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젊은이, 창조적 활동 종사자, 일반 시민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이것이 지역경제 부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

창조도시 전략 외에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는 한 차원 발전해 지역문화 분권 논의로 발전하여 진행되었다. 그동안 서울로 집중되는 문화적 역량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데, 문화 생산력은 물론 문화 구매력에도 타격을 주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게 되어 더더욱 문화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화쏠림 현상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문화소의 현상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 과제로 등장한 것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처럼 지역의 문화 정책을 지역이 지역의 조건에 맞추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2006년 제주에서 열린 지역문화대토론회에서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논의한 결과 공동선언문 형태의 「2006 지역문화 제주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경룡, 「지역 발전과 문화 : 창조도시전략」, 『지역문화대토론회 자료집』, 2006 중 일부 요약.

2006 지역문화 제주 선언

지역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돌아간다. 문화는 우리들의 일터이며 놀이터인 지역에서 생성된다. 모든 문화의 근본은 지역 주민의 삶에서 나온 지역문화이다. 지역문화는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깃든 문화이다.

개성 있는 지역문화가 생명력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도 즐겁고 넉넉해지며, 우리 문화의 건강성과 다양성이 실현된다. 그러나 외세의 침탈과 민족의 분단 그리고 산업화의 파괴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생명력은 철저히 훼손되었다. 인적·물적자원도 중앙으로만 집중되었다. 그 결과 지역의 성장과 지역문화의 발전이 저지되었으며, 중앙은 중앙대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이 협력이 아닌 소모적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패권주의적 세계화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소진되고, 민족문화가 분단 현실의 극복과 인류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80년대 초반에 바로 이곳 제주에서 지역문화의 힘찬 북소리가 먼저 울려 퍼진 사실을 기억한다. 그 북소리는 지역이 중앙의 변방이 아닌 삶의 중심이며, 건강한 지역문화를 되살려 병든 문화 현실을 극복하자는 외침이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지역문화의 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지역문화의 복권을 중앙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 주체로 나서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자원과 개성적 문화예술은 지역문화의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달려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야 진정한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지역문화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임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지역문화의 개성과 창조성이 우리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먼저 지역문화의 자생력 회복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지역의 자주적인 문화 실천과 자조적인 문화 협력을 통해 중앙집중적 문화 행태를 교정하고 과잉 집중된 폐해를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 우리는 지역문화의 발전이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문화가 발전의 자원이며 동력이면서 발전의 원리이자 목적이 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괴적 개발 논리와 중앙 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자치에 근거를 둔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지역문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우리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자치적인 문화정책과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자치적인 문화정책, 자율적인 문화행정, 자주적인 문화 실천, 자조적인 문화 협력으로 자생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자랑스러운 문화국가를 이룩하자!

2006년 10월 21일

2006 문화의달 제주 지역문화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

이상과 같은 문화담론의 변화가 이 시기 지역문화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2006년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³⁾은 104,199백만 원으로 전라북도 일반회계 본예산 2,168,782백만 원의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45,751백만 원, 문화영상산업 추진에 6,740백만 원, 관광자원 발굴 육성에 21,698백만 원, 체육진흥과 건전 청소년 육성에 30,010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문화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문화관광국 예산이 99,747백만 원에서 2005년도에는 112,110백만 원으로 12.4% 증가(12,363백만 원)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보다 7,911백만 원(△7%)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관광시설 분야의 균특 개발계정 사업비 11,258백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하였고, 타 분야는 2~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화정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문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의 등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문화정책도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결과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여러 곳에 건립되었다. 또 문화예술 사회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국악교육 활성화 등 주민이 직접 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공연의 대중화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생산적 문화복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단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3) 2006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의 문화정책 설명 자료에서 발췌.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내 문화지형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협동조합이 그것이다. 도내 사회적 기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약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는데,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은 극히 소수였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수익모델이 약한 문화예술 분야의 한계를 지원으로 극복하고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초기의 성과는 기대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여전히 실험 상태이며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무어라 말하기 어렵다.

2010년대에 이르면서 전라북도의 문화계는 전문 예술 분야에서 주민의 생활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문화의 영역은 여가시간의 선용 같은 취향의 만족 차원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와 도시의 재생 같은 커뮤니티 문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 차원까지 확장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전파된 창조도시, 창조계급론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창조경제, 문화융성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모든 정책들이 문화와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신규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문화콘텐츠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경제 영역의 창출 등이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스토리텔링, 브랜드의 개발 등 문화자원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화자원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농촌살리기를 위한 6차 산업, 지역 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운동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6. 글을 나오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50여 년을 지나면서 문화는 그 시대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과 융합하며 그 범위와 영역, 그리고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어 왔다. 한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여가의 일환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문화가 공동체 규범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규범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의 현장이기도 했다. 또 우리 사회가 첨예한 정치적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민주화된 사회로의 진보나 진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며 다 함께 개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선전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또 90년대를 지나면서 문화는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였다. 지역문화는 지역 정체성의 원천인 동시에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열등한 지역문화가 아닌 자긍심과 자부심의 원천으로서 지역문화에 눈뜨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 문화가 자본 축적의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문화는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되었고, 자본주의의 총아로 재평가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에 들어 지역문화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지역을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재창조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역문화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전라북도의 문화지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에 뒤지면서 자본주의적 가치평가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지역이었지만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화자원들이 빛을 발하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전라북도 지역은 잘 보존된 전통문화예술과 깨끗한 생태자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게 지켜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등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재창조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전라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지역 중심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문화거버넌스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되어야 한다.

20세기 전북 공연예술의 흐름과 특징

곽 병 창 | 우석대학교 교수

1. 20세기 전북 공연예술의 범주와 그 뿌리
2. 전통 연희의 계승과 발전 - '소리'를 중심으로
 3. 창극의 흐름과 특징
 4. 연극의 흐름과 특징
5. 나가며 - 전북 공연예술의 특징과 과제

1. 20세기 전북 공연예술의 범주와 그 뿌리

20세기의 전북 공연예술은 19세기 후반 전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공연 활동의 뿌리 위에 있다. 19세기 후반부의 전주는 당대 공연예술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 판소리 광대들은 전주의 청중들에게 인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명창 칭호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전복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풍류객들 또한 전국적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활동이 대체로 관민의 상생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 후기의 전주관아는 전라감영과 함께 당대의 예술이 생성, 성장, 변화, 분화하면서 활성화한 상징적 공간이다. 이 두 관청은 동시에 최대의 문화 소비시장이기도 했다. 특히 전주관아의 아전들은 전주 지역의 전통 연회를 후원하고 통솔하는 주체 세력이었으며 오늘날 전주대사습놀이의 출발이라 할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의 실질적 주관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사습에 참가할 예인들을 모으고 훈련시켰으며, 초창기의 대사습은 전주부의 아전들과 전라감영의 아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시킨 결과물이었다.

이들 아전 계층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19세기 전주 지역의 전통 연회를 담당했던 계층이 곧 무부들이다. 결과적으로 재인청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이 시기 공연문화를 이끌었던 이들은 전주와 전라도의 정서와 생각을 고스란히 체화하고 있던 아전들과, 빼어난 기량으로 당대의 예술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던 전문 예인들이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관민상화의 정신과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존의식,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능력, 예술적 기량의 연마에 투철한 장인정신 등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주의 유력한 관리들이었던 아전 계층과 재인청 소속의 광대들이 만들어낸 최대의 이벤트가 곧 전주대사습놀이이다.

여기에 양반층의 품격 높은 교유 공간이었던 풍류방 문화를 빼 놓을 수 없다. 풍류방은 창우집단, 사당패와 함께 19세기 호남음악문화의 3대 축이

다. 이는 경제적 이득이나 예능에 대한 강제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음악 행위의 중심이며 비평과 창작이 가능한 공간과 단위를 이르는 개념이었다. 이 풍류방은 20세기 이후 기악 중심의 ‘율회(律會)’, 시조창 중심의 ‘시우회(詩友會)’ 등으로 분화하였으며 이른바 무계 출신의 창우 집단들과도 잦은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후대에 접어들수록 창우 집단 출신의 예인들이나 여성 음악가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된 권번문화와 융합,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¹⁾

따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북 공연예술의 뿌리는 19세기 후반의 풍류객과 창우집단, 그리고 관청의 아전들로 엮인 관민상화의 예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가다듬어 후대에 전한 판소리, 산조, 풍류, 풍물굿 등의 유산은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창극, 마당극, 연극 등의 극예술로 확장되어 왔다. 이 글은, 원형을 간직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져 온 전통공연예술과 근대 이후 확립된 극예술로 크게 나누어 그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통 연희의 계승과 발전 - ‘소리’를 중심으로

구한말 이후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공연예술은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창 등의 성악, 시나위와 제례악, 산조 등의 기악, 살풀이, 승무 등의 춤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북은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농경지를 배후에 지니고 왕가의 분향임을 자랑으로 삼아 온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그 반면에 수탈과 압박의

1) 광병창,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 『전주학연구』 제9집, 2015, 249~253쪽.

주체인 권부를 향해 분연히 항거해 온 민중적 저항의식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역사적 기억의 산물이 곧 전복의 소리이다. 그런 점에서 전복의 소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리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본질을 지닌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체성 : 전주소리는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닌다. 풍물, 민요 등 농촌 공동체의 직접적 유산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판소리의 태동과 성장 과정, 풍류, 삼현육각 등의 음악적 유산들에도 경제적 공동체 또는 비경제적 공동체 단위의 전승과 향유의 기억이 두드러지게 발견됨을 알 수 있다. ② 통합성 : 판소리를 비롯하여 풍류, 풍물 등의 소리들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소리는 기존의 모든 음악적 유산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예술 형태로 재창조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융합적 성격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음악적 유산과 양반 계층의 음악적 유산이 서로 교섭하고 있으며 판소리의 경우 그 향유 계층을 달리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층 통합적인 면모를 지닌다. 물론 소수 양반 계층의 자족적 예술이었던 '풍류'의 경우, 이런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③ 창의성 : 민요나 판소리, 풍물장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주의 소리는 익숙한 장단과 선율, 가사를 그대로 수용, 복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생산자와 수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무한한 자기 복제의 기능만이 강조되는 여타의 음악적 유산과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판소리와 산조의 경우, 청중의 요구와 창작자-소리꾼의 감수성에 의해 기존의 유산에 대한 침식 작업이 가능한 소리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특이할 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장르와 세대를 통합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양반층의 '풍류' 소리는 창의적 개변의 흔적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²⁾

1) 판소리, 더늠과 추임새의 미학

전라북도에는 판소리의 성지이다. 판소리가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전북 사람의 심성을 토양으로 여러 곳에서 움이 트고 꽃이 피어났기 때문이다. 조선 말에 판소리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은 고창의 신재효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전주에서 펼쳐진 전주대사습을 통해야만 소리꾼은 명창의 반열에 오르고 입신양명의 길을 닦을 수 있었다. 한때 소멸의 길을 걷던 판소리의 화려한 부활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였다. 전주 사람들은 일제 암흑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전승의 맥이 끊겼던 전주대사습놀이를 1975년에 부활시켜 명창 등용문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열고 있다.

전라도의 소리는 그 자체가 이미 잔치이다. 그 가운데 특히 판소리는 인간의 회로애락을 한판 신명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장치들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몇 개의 장치는, 장단, 이야기, 창법, 더늠, 추임새 등일 것이다. 그뿐인가? 판소리는 그 안에 이미 숭한 다른 소리들을 끌어 담고 있는 소리의 보물창고 같은 존재이다. 대충 헤아려 보아도, 슬픔으로 치면 이별가와 상여소리를, 기쁨으로 치면 돈타령, 눈 뜨는 대목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 밖에도 선비들의 여유와 풍류가 느껴지는 시창이나 가곡, 생산 현장의 투박한 민중성을 드러내는 농부가나 뱃노래 류(類), 더욱 거칠고 현장감 넘치는 각설이타령이나 전라도 특유의 말맛으로 막 빚어낸 육설, 비어 등에 이르기까지, 판소리는 온갖 소리들이 질펀한 시장의 좌판과도 같다.

판소리가 이처럼 소리의 보고가 된 것은 지난 시기의 명창 광대들이 당대

2) 박병창, 『연희, 극, 축제』, 도서출판 월인, 2007, 363~364쪽.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의 미감을 수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덕이다. 그들은 그런 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매우 명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며, 당대 대중들의 예술적 욕망을 잘 움켜 담아서 이를 소리로 재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술한 명창들에 의한 창의적 각편(各片, version)으로서의 ‘더늌’이다. 더늌의 본질적 매력도 바로 그것이다. 판소리는 전해 준 대로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그 한없는 반복으로 지탱해 가는 음악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판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절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해 켜켜이 덧입혀져 가는 게 소리의 참맛이고 그 나이테 하나하나가 결국 더늌이다.

이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우 집단과 선비(아전) 집단의 교류와 접합으로 만들어진 적층적 집단 의식의 발현이기도 하다. 판이 벌어지던 당대의 시공에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해 켜켜이 덧입혀져 온 흔적이 곧 판소리이다. 그 적층의 기억을 표상하는 용어가 곧 더늌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리 광대들은 계층과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당대 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과 미의식을 쓸어 담아서 기존의 틀에 ‘더 넣을’ 줄 알았던 이들이다. 그뿐인가? 이들이 더 넣자고 들고 나온 새 각편(各片, version)들은 다수 청관중의 공평한 선택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정전(正典, canon)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 ‘더늌’의 정신이야말로 개방적 소통 의식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추구해 온, 가장 전주다운 예술적 감성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판소리의 아름다움이 지닌 이 모든 비밀의 열쇠들에 결정적으로 덧붙여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추임새’의 존재이다.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관중들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야기에 개입하고 말대꾸하기도 하며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흔쾌히 끼어들어 함께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판소리 관중은 판소리 광대, 고수에 대하여 상대역을 수행한다. 판소리

관중은 광대, 고수가 공연 공간과 극 공간을 반복, 교체해 나가면서 연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에 조응하는 참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난스런 말로 받거나 추임새를 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³⁾

기실 관객이라는 개념은 서구적인 무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통 연희에서의 관객은 공연 시간 동안 숨 죽여 배우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판소리 광대가 관객을 향해 소리를 하게 된 것도 근대식 극장의 도입과 함께 변한 모습이라 한다.⁴⁾ 판소리 광대는 주로 고수를 바라보고 연행을 하고 그 주변을 두르고 있던 청중들은 광대의 이야기에 추임새로써 화답해 가며 판을 만들어 갔으니, 청중의 존재야말로 판소리 연행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었던 셈이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인 이웃의 기쁘고 속상한 일에 보내는 기쁨으로부터의 연대감, 그리고 몸으로 함께 감응하여 드러내는 완벽한 동질성의 표현이 곧 추임새의 바탕이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남의 일에 끼어들기’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판소리’라는 독특한 전승 연희의 연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객/청중과 연희자 사이의 역동적 교감의 바탕에는 몸짓(춤)보다는 이야기를, ‘감상하기’보다는 ‘끼어들기’를 즐겼던 조상들의 심성이 깔려 있다. 그것은 곧 다른 존재들의 삶에 대한 ‘본능적 궁금함’이다.⁵⁾

3)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 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213쪽.

4) 판소리에서 고수와 광대의 위치는 ‘마주 보는 방식’으로부터 ‘고수가 광대의 왼쪽에서 광대를 보고, 광대는 청중을 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서구식 극장의 도입과 대등한 자격과 권리를 지닌 유료 청중의 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유도되었다. (최정선, 『판소리의 연행예술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0, 157쪽)

5) 광병창,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축제와 연희에 드러난 전라도의 감성」, 『감성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2, 109쪽.

2) 산조의 여유와 포용력 그리고 변방성

산조(散調)는 ‘허튼가락’이라 불리기도 한다. 느린 장단으로부터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 음악이다. 장구 반주가 따르며 무속음악과 시나위의 기교가 확대되어 19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민속음악의 한 갈래이기도 하다. 120여 년이 지났지만 산조라는 음악은 여전히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아낸 명곡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해 산조는 현대사회에서도 가운데 한국적인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산조는 선비 계층, 즉 엘리트층이 아닌 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다. 그 기원은 전라도를 비롯하여 충청도, 경기도 남부의 사람들이 무속음악과 관련해 즐겼던 삼방곡이나 봉장취 같은 기악합주곡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기악합주곡은 다시 독주 악기로 연주되면서 기교가 확대되고 판소리 가락이 도입되면서 산조의 기본 형태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악기별로는 물론이고, 같은 악기 내에서도 유파별의 차이, 또 같은 유파별 사이에서도 연주자에 의해 새로운 선을 변화를 추구하였다. 산조의 등장과 변화 발전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 사람의 작곡자에 의한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며 나타난 수십 명의 연주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주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조는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정서와 감정 그리고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연주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

산조가 탄생하게 된 100여 년 전의 시대상은 중화 중심의 예악관(禮樂觀)을 극복해야 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변방으로서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해야 했으며, 양반 중심의 예악관 또한 극복돼야

6) 조석연, 「현대사회 문화콘텐츠로서 산조의 활용 방안 연구」, 『공연문화연구』 32권 0호, 한국공연문화학회, 2016, 399~400쪽.

했다. 그러면서 천주학을 통해 접하게 되는 서양음악과의 만남과 수용에도 문호가 열려 있어야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시대상은 ‘신악(新樂)’이라는 개념과 미학으로 정립되었다.⁷⁾

그런 의미에서 산조는 판소리와 함께 가장 ‘전라도다운’ 음악이라 할 만하다. 산조가 가진 특성은 판소리의 그것과 유사하다. 대상에 대한 왕성한 포용력,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음악적 완성도 등이 곧 산조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전주산조페스티벌의 주역이었던 한 연구자는 이를 ‘산조성’이라 표현한 바 있다.

첫째, ‘산조성’은 있는 그대로를 일단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모든 존재와 살아 있음을 절대 존중한다. 둘째, ‘산조적 결합’이란 흩어진 각각(散)을 조화롭고 하나 된 무엇으로 엮어내는 짓(調)이다. 셋째, 100여 년 전에 태동할 수 있었던 시대정신, 즉 신악의 핵심이 ‘변방과 민중을 대접하기’였다. 넷째, 산조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자신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만큼 통달하여 ‘놀 수 있는’ 차원에 도달했을 때 자신만의 산조를 짤 수 있고, 즉흥연주가 가능해진다.⁸⁾

판소리와 함께 전북 공연예술의 양대 축과 같은 구실을 해 온 산조는 전주산, 신쾌동 등 이 지역 출신들의 명인들에 의해 정리,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조의 현대적 발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전주산조페스티벌(1999~2004)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몇몇 단체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축제는 산조의 대중화, 현대화를 추구한 소중한 시도였다.

7) 박홍주, 「「전주한옥마을 살리기」 전략으로써의 축제 - 전주산조예술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4집, 2011.11, 203쪽.

8) 박홍주, 위의 글, 227~233쪽.

이 축제를 주도한 이들은 산조를 단순한 음악의 한 장르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만나기 위한 새로운 생각의 뿌리로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의 전통예술과 생활문화(민속)는 시나위성과 산조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과 전문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산조성을 발견 하고 계발하’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산조가 더 이상 음악에만 국한된 미학과 개념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모든 장르와 문화에 신선한 기운과 바람을 일으켜 전반에 걸친 하나의 사조(思潮), 시대의 예술사조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이 후 모든 논의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과 미학을 ‘산조성’으로 설정하면서 ‘산조정신’에 입각하여 그 산조성의 개념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찾아가려는 노력을 실천적으로 시도하였다.⁹⁾

산조페스티벌이 ‘한옥마을 살리기’의 한 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드러냈던 이 축제의 주체들은, 산조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전주가 ‘한옥마을’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표방하고 전파하는 중심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단순한 음악의 한 갈래로서가 아닌 ‘산조’를 통한 새로운 문화운동의 실천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 운동이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 점은 전북의 공연예술사에서 매우 깊은 의의를 지닌다.

‘전주산조페스티벌’을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각각 전개해 왔던 작업이 착근 단계이거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내부적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시기가 도래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민중운동·변혁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을 경험한 한국 사회가 곳의 미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산조예술제의 지향점에 귀

9) 박홍주, 위의 글, 202쪽.

기울일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70~9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와 운동을 겪은 경험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전주는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역사성과 문화적 토양이 내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광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이를 적극 수용하고 키워낸 측면이 크다.¹⁰⁾

전주산조페스티벌은 안타깝게도 안팎의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6회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의 패기 있는 시도는 이른바 ‘산조정신’의 재발견과 현대화라는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앞으로의 작업을 더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조는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자유로움, 여유, 포용성, 전문성과 비전업성, 변방성 등을 특징으로 삼아 온 풍류문화의 소산이라 할 만하다. 굿음악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선비들의 풍류음악과도 섞였고 외래의 음악에도 빗장을 단지 않았다. 판소리, 살풀이춤과 그 정서와 기법을 그대로 주고 받았으니,¹¹⁾ 가히 전라도 공연예술의 네거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풍물굿의 예술성과 공동체성

‘풍물굿’은 좁은 의미로는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할 때 하는 음악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쟁과리, 징, 장고,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행진, 의식, 판놀음 등을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굿, 매구, 풍장, 금고, 취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의 현장을 중요시하는 풍물놀이는 전통적인 놀

10) 박홍주, 위의 글, 199쪽.

11) 한말에는 아재의 춤이 성행했는데, 이를 금지하자 무당들이 기방으로 흘러들어가 기녀가 되었고, 단순한 허튼춤에서 출발한 살풀이춤은 호남 지방의 소리광대들에 의해 판소리와 병행한 기방예술로 승화되었다. (정병호, 『한국춤』, 열화당, 1985, 39쪽)

이로서 삶에 활력을 준다. 풍물놀이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굿이나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며 복을 불러들이는 집들이 의식,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공동 노동을 할 때 신명을 돋우기 위해 치는 풍장, 갖가지 기예를 동원하고 온갖 구색을 맞추어 순서를 짜서 노는 판굿 등을 통해 일상적인 삶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었다.

호남의 풍물은 좌도 농악과 우도 농악으로 나뉘는데 좌도 농악은 주로 전라도 동북 지방인 진안, 무주, 장주, 완주,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등 산간지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남성적이고 가락이 빠르며 거칠다. 또 팽과리잡이와 소고잡이들의 동작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연기를 중시한다. 반면 우도 농악은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정읍, 고창 등 전라도 서남 지방에서 전승되는 풍물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곡창지대에서 성행함으로써 여성적이고 가락이 느리며 유연하여 가락을 맺고 푸는 변주 기교와 개인 놀이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 전주의 풍물은 우도 농악이 발달하여 있지만, 인근의 좌도 농악 또한 점차 호남의 중심인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은 농촌 사회를 기반으로 삼아 발전해 온 지역이다. 농촌 공동체의 대표적 예술행위가 곧 풍물굿이다. 판소리를 향유하던 전주의 청중들과 풍물굿을 즐기던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의미심장한 정서적 차별이 존재한다. 전주 청중이 대상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정서에 익숙한 반면, 주변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상과 주체가 나뉘지 않는 공동체적 예능에 더 심취해 있었다.

공연 과정에서 청·관중은 수동적인 감상자의 자리를 벗어나 곳에 혼연 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변환한다. 이것은 이들 공연자와 청관중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질감을 지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풍물굿은 공연에 참여하는 관중의 존재를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 조직한

다. 다시 말해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관중을, 반복되지만 다양하게 변주되는 리듬, 다소 정형화된 진법 속에서 발산되는 우발적인 몸짓에 의해 축적되는 신명의 굿판에서, 공연자와 한 몸을 이루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나아가 공연자의 역할을 반주자·악사로 축소, 전이시키는 반면, 관중을 공연의 외부가 아닌 공연 내부의 영역에서 일군의 공연자로 조직한다.¹²⁾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관객들이 스스로 공연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창조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세크너가 언급한 대로 ‘존재의 연속적 변환(transportation)’¹³⁾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공연적 연행행위’로 빠르게 탈바꿈한 다른 지역의 농악과 확실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필봉에서 필봉풍물굿을 전수받고 돌아간 이들 중의 상당수가 해마다 대보름굿이나 정기발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굿(행사)의 실질적 주체로 활약하는 모습에서 그런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체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성적 특질은 바로 ‘어울리기’이다. ‘어울리기’란 판소리에서의 ‘끼어들기’와는 또 다른 감성체계이다. ‘끼어들기’는 일차적으로 공연자와 청·관중의 존재가 각자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정황을 전제한다. 이 ‘끼어들기’는 공연자인 대상을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근원적 ‘타자화’로부터 출발하는 감성이다.

12) 이영배, 『교정과 봉합, 혹은 탈주와 저항의 사회극』, 아카넷, 2008, 290쪽.

13)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 즉 공연자 및 청·관중들이 그 공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의식’ 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는 점을 고찰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연을 통해 자기의 사회적 존재와 내면 의식 둘 다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존재만이 변화되고 내면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존재는 변하지 않고 내면 의식만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변화는 ‘연속적 변환(transformation)’과 ‘일시적 변환(transportation)’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Schechner Richard, 김익두 역, 『민족연극학』, 도서출판 신아, 1993, 4~26쪽)

현대화한 필봉굿의 현장에서도 이들은 전수-전승 과정에서의 일체감을 충분히 간직한 채 판에 나선다. 자칭 ‘필봉공동체’라고 부를 만큼 이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남다르다. 소리판에서의 청중과 달리 이들이 지닌 감성의 바탕에는 원초적으로 하나였던 기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공연 과정에 보여 주는 역동적인 반응은 소리판에서의 ‘끼어들기’를 넘어서는 ‘어울리기’의 감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풍물굿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 사이에서 서로를 ‘타자화’하는 과정이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공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차적으로 가락이나 뒃굿의 전수를 위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전수 주체와 객체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다 같이 어우러져 판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한다.

‘필봉 풍물굿’은 그런 점에서 전라도의 감성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풍물굿이다. 이는 이른바 ‘사물놀이’처럼 무대화한 공연예술로서의 농악가락이나, 연예오락적 성격이 강하게 발전해 온 다른 지역의 농악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필봉풍물굿이야말로 풍물이 지닌 단순한 리듬의 무한 반복과 그를 통해 야기되는 집단적 황홀경, 그리고 마침내 공연의 일부가 되어 가는 관객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공연자와 청·관중은 일시적으로나마 공동체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잠재적 욕망을 재현해 내고 스스로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서 전라도 감성의 핵심이라 할 ‘어울리기’의 즐거움을 매순간 만끽하는 것이다.¹⁴⁾

14) 박병창, 「끼어들기와 어울리기- 축제와 연희에 드러난 전라도의 감성」, 『감성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2, 109쪽.

3. 창극의 흐름과 특징

창극은 한국 연극사에서 매우 복잡한 개념을 지닌 장르이다. 창극은 한편으로 전통연극이지만 반면에 현대적인 음악극이며, 고급 공연예술로서의 품격과 스케일을 지녔으면서 동시에 대중적 오락극의 면모도 지니고 있다. 연극 쪽에서는 대체로 정통연극이 아닌 주변 장르로 인식되지만, 전통 연희나 음악 쪽에서도 온전히 전업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장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창극은 여전히 논란의 와중에 있는 장르이며 그런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황성한 창극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전북에서는 5, 60년대의 민간 창극단 시절을 거쳐서 1987년 도립국악원이 출범하면서 마침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창극운동을 펼칠 터전이 마련되었다.

1) 도립국악원의 창극과 민간창극운동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설립된 이후 전주 지역의 창극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그 레퍼토리는 대체로 이전 시기 민간 창극단들의 공연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체로 대표적인 전승 판소리들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에도 새로운 해석으로 그 주제상의 현대적 개편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다. 대신 극장 상황과 연출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이전 시기 창극과의 차별성을 피하여 왔다. 90년대 이후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거의 독점적인 창극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립창극단은 초창기에는 주로 「춘향전」, 「심청전」, 「홍보전」, 「수궁가」 등의 전통적인 창극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견훤, 논개, 전봉준, 권삼득, 매창 등 이 지역의 위인, 명인들이나, 항일 의병운동 등 몇몇 역사적 위인들과 사건을 소재로 한 기념공연류 창극들을 발표해 왔다. 이들 창작 창극에

드러난 주제는, 후백제 또는 조선왕조의 수부이자 발상지였다는 자긍심, 나라를 지킨 의향으로서의 기개, 신분을 뛰어넘어 소리꾼의 길을 가거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 명인들의 생애와 예술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북도립국악원이 출범한 1987년은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극에 대한 모색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1967년 이후 국립창극단은 수년에 걸쳐서 그때까지의 창극 양식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탈피를 모색했다. 이 시기에 도연위원회, 원본정리위원회, 창극정립위원회 등이 활동하면서, 서구적 극 양식으로부터의 과감한 탈피를 선언하고, 과감한 생략에 의한 창본화를 꾀하였으며, 창과 발림의 재생을 강조하고, 고수와 악사를 무대 위에 노출한다든가 도창 자리를 무대 위로 설정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그를 통해서 독창적인 형태를 정립하기 위한 꾸준한 추구하고 실험, 창작창극을 통한 대담한 시도를 선보인 시기이기도 했다.

전북도립국악원 또한 다양한 창작창극 작품¹⁵⁾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 왔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전라북도 지역의 소재를 바탕으로 삼아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무대에 올린 창작창극 「어매 아리랑」은 주목할 만하다. 「어매 아리랑」은 국악원 창극단의 제46회 정기공연으로 2013년 5월 3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의 초연 이후 2014년과 2015년 전북의 시군을 순회한 공연이다.¹⁶⁾ 전북도립국악원의 창극에서 이 작품이 지나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

15) 주요 창작창극 작품은 「심산의 별들」(1989), 「하늘이여 땅이여」(1991), 「호남별의 복소리」(1995), 「비가비 명창 권삼득」(1999), 「그리운 논개」(1999), 「장희빈」(2006), 「삼룡야」(2008), 「견훤」(2008), 「어매 아리랑」(2013), 「꽃불」(2014) 모두 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6) 작품의 기본 줄거리는 한국전쟁으로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봉산댁'과 아들 '진수'가 오랜 세월 동안 겪는 역경과 함께 모자 간의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한국전쟁 중 후처의 삶을 살면서 겪는 역경과 고초를 모두 이겨내는 동안 진수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한편, 아들 '진수'는 '서희도'라는 이름으로 유랑극단생활

다도 이제까지의 창작창극과 달리 계몽적, 기념공연적 성격을 탈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시기에 흩어진 가족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한 어머니를 소재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그려 내면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전통창극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작품이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표현 방식의 확장, 악극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적 양식의 수용으로 장르 간 통섭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 점¹⁷⁾이 눈에 띈다. 관립 창극단이 고답적인 표현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

최근 들어 불특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삼아 팔목할 인기를 끌고 있는 마당창극은 전통적인 판소리와 창극의 어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마당판에 모인 동시대 청·관중과의 역동적 소통을 추구한다. 이 공연은 한동안 서양식 무대 공연물의 엄숙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창극들과 달리 오래된 ‘판’의 정신을 되살리는 개방적인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당대 현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이어 연극적 에피소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실 풍자의 묘미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전주다운 공연예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¹⁸⁾ 마당창극은 전통의 계승과 당대성의 회복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해 온 ‘마당창극’ 작업은 「해 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 메고」(2012)와

을 하는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친다. 주변 줄거리는 1960년대 1980년대까지 변화하는 삶 가운데 농촌 아낙네들이 겪는 이야기와 악극 등을 통하여 재미를 더하였다. 이 작품은 송재영 창극단장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이다. (김정태, 「전라북도립국악원 창작창극 ‘어메 아리랑’의 공연학적 특성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1집, 2015.8, 254쪽)

17) 김정태, 위의 글, 270쪽.

18) 광병창, 「창극의 대중적 공연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전주마당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8집, 판소리학회, 2014.10, 153~239쪽.

「천하 맹인이 눈을 뜬다」(2013)에 이어서 2014년의 세 번째 작품 「아나 였다 배 갈라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에서의 잔치 장면(변학도 생일잔치, 황성 맹인잔치, 용왕의 수궁잔치)을 중심으로 하여 전주의 음식과 놀이, 소리를 동시에 즐기게 하자는 목표로 출발하였고, 그 시도는 대체로 적중하였다. 전주마당창극은 중앙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함께 재원을 마련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의 하나이다. 도내에서는 남원, 임실, 고창 등에서 비슷한 공연들을 이어 오면서 새로운 공연물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마당창극’은 기존의 극장 중심 창극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그리고 그 돌파구의 일환으로 마당극에 주목한다. ‘마당창극’이 마당극의 정신과 형식에서 얻어 온 요소들은, 당대 민중들의 삶에서 찾아낸 현실적 소재와 에피소드들, 반복적이고 개방적인 극 구조, 음악과 춤을 활용하는 장면 전환의 기법 등이다.¹⁹⁾ 전주마당창극의 성과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실적인 주제와 소재를 도입하여 동시대 관객들의 기호와 눈높이에 부합하고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극 구조를 추구한다. 2) 배우 중심 창극을 지향하여 둘 이상의 다양한 각편(各片, version)을 제시하면서, 어려운 한문투와 고어체 사설을 현대적으로 풀어쓴다. 3) 객석을 활용한 등퇴장과 벽 깨기를 통해서, 관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4) 돌출무대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관객의 몰입도와 친근감,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전주마당창극’은 아직 일천한 공연 기록을 지닌 초창기의 면모를 벗어나

19) 마당극이 추구하는 정신은 결국 전통 연희의 민중성, 놀이성, 민중성이며, 그 양식상의 특징은 에피소드식 구성, 반복적 구조와 구어체 대사, 음악과 춤의 활용, 관객과의 열린 구조 등이다.(이미원, 「마당극 : 전통수용의 현대적 양식화」, 『한국예술연구 6집』,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2, 30쪽)

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발표한 세 편의 작품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중적 공연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창극사에 새로운 형식적 제안을 내놓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극의 정형을 창조하려는 목표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²⁰⁾

근대적 관점에서의 연극이란 당대 현실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상호간의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주제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과 그 성과

국립민속국악원은 1992년 국악의 성지라는 칭호를 지닌 남원에 등지를 틀고 개원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그동안 명실상부한 한국 민속예술의 계승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고, 우수한 기획과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기획물들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전통의 수용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대의에 충실히 부응해 왔다. 공연의 품격과 다양성, 시의적절하게 배치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학술 연구와 음반 발행 등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 아카이브화 등 그간 국립민속국악원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남원은 판소리의 발상지로서 그 오랜 이름을 자랑해 온 도시이고 현재 전하는 판소리 가운데 그 유무형의 상관물로서의 유적(광한루 인근)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을 남원에 두기로 한 것은 판소리를 민속음악의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보아도 좋을 사건이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립민속국악원이 표방하고 있는 ‘민속악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개원 목표가 판소리와

20) 광병창, 「창극의 대중적 공연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전주마당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8집, 판소리학회, 2014.10. 200~201쪽.

창극 등 그 주변 유산을 중심으로 삼은 언급으로 여겨져 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공연 연혁을 살펴봐도 판소리와 창극이 중심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창극적 실험을 통해서 이 물음에 충실히 답해 왔다. 지난 이십오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립창극단에서의 다양한 시도와는 또 다른 갈래에서의 실험과 모색이 국립민속국악원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음을 많은 이들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꾼으로부터 출발해서 창극 전문 연출가로 입지를 굳힌 상근 연출이 있다. 그가 주도한 대표적인 공연으로 「신(新) 판놀음」(2011)과 「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2012), 「판에 박은 소리」(2015) 등을 들 수 있다.

「신 판놀음」은 판소리와 창극을 병렬한 듯한 형식이다. 판소리 대가가 출연하여 고수와 함께 정통 방식의 소리 한 대목을 하고 나서 창극 단원들이 극의 형태로 나머지를 완성하는 형태이다. ‘사랑해요’를 주제로 엮은 ‘신 판놀음’에는 흥보의 사랑-우애(友愛), 나라 사랑-충(忠), 심청의 사랑-효(孝), 춘향의 사랑-애(愛)를 작은 주제로 삼아 창극 흥보가 중 ‘놀보 집에 양식 빌러 가는 대목’, 창극 수궁가 중 ‘자라와 토끼 만나는 대목’,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 창극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창극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선보였다. 창극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명창들에게 연출자가 아니라 식의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점만 보아도 ‘신 판놀음’은 ‘애써 극이라는 형식의 압박을 외면하려고 애썼다’²¹⁾는 평을 들었다.

「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는 2012년 동리 신재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을 다룬 문순태 작가의 소설 ‘도리화가’를 판소리극으로 재탄생시

21) 김기, 「남원 민속국악원 창극단의 서울 공연 ‘신 판놀음’을 보고」, 『오마이뉴스』, 2004.04.03.

킨 작품이다. 광대처럼, 바람처럼 한평생을 자유롭게 살고자 했고 광대들과 소리꾼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신재효의 삶과 꿈, 사랑을 그린 이야기가 펼쳐진다. 알려진 이야기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서사 구조도 탁월했고, 판소리로 출발해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무대 활용 역시 유연했다. 소리에 대한 무한한 열정,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판소리가 충분히 ‘발라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한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무대였다.²²⁾

관립창극단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상임 연출을 두고 창작창극 작업을 지속해 온 국립민속국악원은 지속적으로 실험성 짙은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창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개변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현실적 쟁점을 담은 이야기의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실적인 주제의식의 발견과 접목에 좀 더 집중한다면, 관객들의 감성과 미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과 시각적 장치를 동원한 표현 기법의 혁신, 그리고 언어와 연기술 등에서의 새로운 모색을 추구하는 이들의 창극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것이다.

3) 창극의 미래를 위한 제언

창극 양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몇 가지 원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구적 극 양식으로부터의 탈피 또는 적극적 수용을 둘러싼 논란이나, 독창적인 음악극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연기술과 도창의

22) 윤중강, 『“B급 스타일 웃기는 광대도 필요” 광대의 노래 ‘동리, 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 『전북일보』, 2012.09.16.

활용 방법, 전용 극장의 형태, 규모, 기능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창극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발전해 온 장르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를 대표할 음악극 장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첫째, 창극은 더 이상 프로시니엄 극장과 근대적 사실주의 극 양식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 창극은 판소리와 전통 연희의 미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연행 원리를 계승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래 음악극의 장점을 포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극 양식을 창출해 내야 한다.

둘째, 창극의 제작과 유통 전반을 혁신하기 위하여 이른바 민간창극단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민간창극단의 활동을 복돋우기 위한 경연대회, 창극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셋째, 창극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 그리고 충분한 습작과 연수 과정을 거친 극작과 연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창극의 어법을 충실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소리를 비롯하여 전통 연희의 이론과 실기에 능통해야 하며, 현대 연극과 음악극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소양도 풍부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들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단위가 분명해져야 한다. 미땅히 전국의 한국 음악과에 창극과 관련한 전공 필수 수준의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하며, 각급의 관립창극단에서도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창극 제작을 위한 표준 교본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²³⁾

23) 광병창, 「창극, 연극학적 측면에서의 전망」, 『국립민속국악원 학술자료집』, 2009.5.

4. 연극의 흐름과 특징

1920년대 사회운동으로서의 소인극 운동은 전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명실공히 자생적인 지역 연극의 뿌리를 형성함으로써 전북의 신극이 태동하게 된다. 이러한 소인극 운동은 각 지역의 청년운동단체 외에도 학생과 청년종교단체 등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20년대 지역 소인극 운동으로 시작되는 전북 연극의 태동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전북 지역에서 연극이 태동했던 초창기는, 어느 정도 연극을 이해하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국애족하려는 열혈 청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후 10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북 연극사를 개관해 보면 초창기 이후 명멸해 온 극단의 수가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길게는 20여 년이 넘도록 꾸준히 공연을 해 온 극단도 있고 불과 1회의 공연만으로 사라져버린 군소 극단들도 상당수 있다. 실제 공연해 온 연극의 편수에 비해 극단의 수가 많다는 것은 얼핏 활기 넘치는 연극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양적·질적으로 미약했던 연극 주체 세력의 힘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가운데 변증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극의 주제와 형식의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정책 홍보 연극으로부터 저항적 문화운동의 한 축이 되었던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1) 박동화와 극단 〈창작극회〉

전주의 신극운동 세력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24) 이원희 외 공저, 『전북연극사 100년』, 전라북도연극협회, 2008.12. 51쪽.

여러 군소극단들의 명멸로 간신히 그 맥을 이어 왔다. 1960년대 초에 목포 출신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박동화가 전주에 내려오면서 창립한 극단 〈창작극회〉는 그 이후 전주의 연극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 활동은 대부분 순수 창작회극을 바탕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여타의 극단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긴 세월 동안 극단 자체의 고유한 연극적 지향점과 정체성을 지닌 채 성장해 온 경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박동화 이후 고집스럽게 자체 창작회극을 비롯한 국내 창작극만을 공연해 온 〈창작극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이는 술하게 명멸해 간 성인 극단들이 대부분 〈창작극회〉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그 반작용으로 나타났었다는 점과 이 지역 대학 연극반의 태동 또한 거의 〈창작극회〉 초기의 전통과 대부분 섞여 있기에 그렇다. 무엇보다도 자체 창작회극을 통해서 뚜렷한 연극적 지향점을 일관되게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창작극회〉의 작업은 전주 연극 정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 틀림이 없다.

〈창작극회〉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동화의 연극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몇 편의 회극들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연극인들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보면 그가 취했던 소재와 연극적 기법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박동화는 다양한 드라마투르기를 사용하여,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통에의 집념, 화해와 용서, 숭고한 정신주의를 통하여 열린 세계를 지향하였다.²⁵⁾

그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그

25) 이원희, 「박동화 회극의 현실대응 방식」, 『국어국문학』 119집, 국어국문학회, 1997, 460쪽.

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빛의 가치 기준의 변화 등에 대한 꾸준한 경고와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거의 전편에 걸쳐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갈등은 대체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역설함으로써 교훈적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등잔불」(1978)과 「시는 연습」(1977)의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약간 경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산천초목」(1976)과 「여운」(1963)을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극한적인 시대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폭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산천초목」, 「여운」,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 등은 모두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의 개인적인 삶과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은 곧 6, 70년대 전주 연극을 대변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박동화는 ‘연극의 효용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한 관중의식 선도에 있다’는 믿음을 지닌 연극인이었다. 또한 그의 연극들은 연극이 사회의 거울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연극이 보여 준 건전한 사회 비판 정신, 인간성 상실에 대한 풍자와 고발,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와 휴머니즘 옹호 등이 곧 지금에 이르도록 가치를 잃지 않고 있는 전주 연극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창단된 〈시립극단〉에 대부분의 단원이 합류함으로써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창작소극장의 개관과 함께 재창단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 나오고 있다. 재창단 이후로 25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창작극회〉는 박동화의 리얼리즘 정신과 지속적인 창작희곡 작업을 통해 정체성 뚜렷한 극단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에

전국 연극제에서 두 차례의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그 오랜 일관성과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재창단 이후의 창작극회를 대표할 만한 이 두 작품은 모두 민족사의 큰 아픔인 식민지 시기와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중 「꼭두, 꼭두」(1993, 박병창 작, 연출)는 전통인 형극 꼭두각시놀음의 틀을 빌려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틈새에서 희생된 사할린 귀환 동포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상봉」(2003, 최기우 작, 류경호 연출)은 6·25를 전후해 흩어진 가족들의 애환과 상봉 과정을 그려내어,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우리 삶에 끼친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려 했다는 평을 들었다.

〈창작극회〉는 어느 한 사람 소유의 극단이 아니다. 임기제 대표와 운영단원들의 협의로 운영되는 협의체 극단이다. 1990년에 개관한 창작소극장을 주무대로 삼고 있는 〈창작극회〉는, 정통연극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선보이며 ‘연극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2) 전북 지역 마당극운동의 역사적 의의

80년대 초반, 서울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마당극운동은 각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지역문화 운동의 전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80년대 초반의 극단 〈백제마당〉과 놀이패 〈녹두〉의 작업은 이 지역의 보수적이고 척박한 연극 상황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이후의 예술 풍토에도 그 의미심장한 자장(磁場)을 확대시켜 왔다. 〈백제마당〉과 〈녹두〉의 작업이 갖는 의미는 연회·공연 행위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제기했다는 데에 있다.

극단 〈백제마당〉은 몇 가지 불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단명하게 그 활동을 맺고 말았지만 이후의 지역문화운동에 남긴 족적(足跡)은 결코 작지 않다. 워크숍 공연이었던 「1876~1894」에서 「의병한풀이」로 이어지는 그들의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당시의 연극 상황을 뒤집는 것이었다. 마당극이라는 새로운 극형식, 주제가 지닌 강한 역사의식,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우회적 현실 고발 등은 이전의 전복 연극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대담한 발언이었다. 「1876~1894」는 「의병한풀이」의 전 단계 워크숍 정도 공연이었다. 두 작품은 모두 구한말 외세의 강점과 부패한 관리들의 탐학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구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다 꺾여 간 아픈 역사를 공동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 6·70년대를 거치는 동안 근대 들머리의 비극이 악몽처럼 되살아 오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되새기게 했다는 점에서 연극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4년 4월 놀이판 ‘녹두밭’의 개관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놀이패 〈녹두〉는 옛 〈백제마당〉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된 결과였다. 〈녹두〉의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백제마당〉이 공연과 자체 워크숍에 전념했었던 반면 〈녹두〉는 정기공연 및 문화강습, 각종 초청공연 및 기획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녹두〉는 한 차례의 풍자 마당극을 거쳐서 85년 1월 첫 정기공연으로 「땅풀이」를 공연했다.

「땅풀이」는 섬진강댐 건설로 생겨난 수몰지구의 농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간척지인 계화도로 이주해 가서 그곳 지주와 마름, 농조의 간부들에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수탈당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풍자 마당극을 표방하면서, 촌극적인 형태의 극 구성에 소비, 향락, 고급, 외제 선호 풍조의 문화 상황을 고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각 장면들이 따로 떨어져서 제각기 한 상황씩을 보여 주었는데 기발한 착상과 즉흥적인 대사들을 통해서 시원한 풍자마당을 보여 주었다. 〈녹두〉는 전라도 땅의 끈끈한 민중적 잠재력이 민족문화 전체를 건강한 마당으로 회복시키는 근간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²⁶⁾

80년대 전북 지역의 마당극운동은 그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과 표현방법론은 이후의 공연예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90년대 이후 명멸한 극단들 가운데에는 이들의 현실 인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노동자 극단을 표방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마당극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민간극단이나 관립예술단에서 공연예술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전주산조페스티벌도 그 결실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3) 극단 〈황토〉와 다양한 신생 극단들의 활동

‘황토레퍼토리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1982년 2월에 창단된 극단 〈황토〉는 창단 공연이면서 전북예술회관 건립 기념 공연으로 「봄이 오면 산에 들에」(최인훈 작)를 올렸다. 토속적이고 사실주의적 무대에 표현주의와 상징주의적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적 요소가 돋보인 연극 무대를 창출하는 것이 극단 〈황토〉의 큰 특징이었다. 이 결과 〈황토〉는 1회 전북연극제에서 「너덜강 돌무덤」(1984)이 최우수상, 3회 전국지방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 장려상, 희곡상, 미술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4회 전국지방연극제에는 「물보라」(1986)로 대통령상과 연출상(박병도)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이 작품이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문화예술 축전 개막 공연에 초청되는 등 전북 연극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 황토는 1999년도 말까지 총 94회의 공연 실적을 가지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는데, 1986년도 제4회 전국지방연극제의 대통령상과 연출상에 이어 1989년도 제7회 전국연극제에서 「오장군의 발톱」으로 또 한 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6) 박병창, 「80년대 전반기 전북 지역의 연극 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망」, 『南民』 창간호, 지양사, 1985.

〈황토〉는 2000년대 이후 공연의 횟수를 늘리기보다 질적 우수성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특히 이 시기의 〈황토〉는 팝진성 있는 무대를 위해 배우 훈련에 철저했다. 이는 지난 시절의 작업을 꼼꼼히 반추한 결과였고, 미래를 전망한 끝에 얻은 연극적 지평 찾기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00년 전국연극제에 참가한 「자전거」는 ‘성숙한 연기력과 탄탄한 연출력으로 한국적 정서를 충실히 담아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며 금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 공연한 「오브제태」 또한 공연의 질적 우수성을 확인시켜 준 무대였다. 이 작품은 지난 1986년 전국연극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해 이 지역 연극계에 큰 경사를 안겨 준 공연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황토〉만의 분명한 색깔 찾기를 신념으로 삼아 시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롭게 판소리를 접목시킨 연출 문법을 통해 극단이 지향하는 ‘한국적 판타지아 창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작품이라 할 만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전주 지역에서는 다양한 연극적 성향을 지닌 전문 극단들이 출현하였다. 〈문화영토 판〉과 극단 〈데미샘〉, 〈재인촌 우듬지〉, 〈무대지기〉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가세로 전주 지역의 연극 무대는 기존의 〈창작극회〉와 〈황토〉 그리고 〈흥늘〉, 〈명태〉와 함께 더욱 풍성해졌으며 연극의 내용 또한 다양해졌다.

이 가운데 2010년 전국연극제에서 「눈 오는 봄날」(김정숙 작, 안세형 연출)로 최우수작품상과 희곡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전국적 화제를 몰고 온 극단 〈무대지기〉의 작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철거 위기를 맞은 달동네 서민의 애환을 따뜻하게 묘사한 작품으로써,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연륜을 쌓아 온 군산 지역의 극단 〈갯터〉, 〈사람세상〉, 〈동인무대〉, 익산의 〈토지〉, 〈작은 소동〉, 남원의 〈등지〉 등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양분을 풍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전북 연극제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졌고, 소극장 연극제의 명실상부한 자리 매김에도 이들 극단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전통과 저력의 극단들에 이들 신생 극단들이 가세하면서 전북 연극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 깊이와 두께를 더해 가고 있다.

4) 〈전주시립극단〉의 탄생과 기여

1985년 4월 19일 정단원 30명과 연간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창단한 전주 〈시립극단〉은, 전주 시민의 날인 풍납제 때 마당놀이 「대춘향전」을 창단 공연으로 올리며 처음으로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년 정기공연과 임시공연 각각 2편씩을 무대에 올릴 것을 목표로 출발한 〈시립극단〉은 1980년대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극단들이 1, 2편의 공연으로 해체되곤 했던 시절에 창단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창단 시 상임연출이었던 장성식 이후 실질적 상근화를 이끌어낸 정초왕, 안상철, 고금석, 조민철, 류경호 등이 〈시립극단〉의 오늘을 만들어 온 연출가들이다. 〈창작극회〉에서 십여 년간 대표로 활동한 바 있는 홍석찬 상임연출은 2014년 취임 후, 「석관」, 「허삼관 매혈기」, 「어느 계단 이야기」 등 인간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계속 무대화하면서 극단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시립극단〉이 펼쳐 온 연극들은 「셰익스피어」, 「브레히트」, 「몰리에르」, 「체홉」 등 고전 명작들을 소개하는 공연에서부터 이 지역 희곡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다. 그런 만큼 〈시립극단〉의 공연을 두고 그 특징이나 경향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부질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안정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의 바탕에는 물론 역량 있는 배우들의

존재가 있다. 상당수가 상근 단원 이십 년가량의 공력을 자랑할 만큼 시립극단 연기진은 중량감이 있고 능란하다.

재공연 빈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시립극단〉의 대표작들은 「만인보」, 「광대들의 학교」, 「맹진사댁 경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재공연한 「광대들의 학교」는 50회 기념 공연이기도 했다. 관객의 무대 참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 공연은 연극이 배우와 관객과의 상호 소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보여 주었다. 교육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작품의 재미와 오락성에 은근히 숨겨 두고 있는 작품이었다.

〈전주시립극단〉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문화예술 전반에 기여하는 구성원들을 가진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경직된 화술을 해체하고, 작업에 대한 단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다양한 안목으로 작품을 해석할 줄 아는 스펙트럼식 사고 배양 등을 추구한다. 또한 소재 발굴을 통한 공동 창작을 시도하는 등 자체 창작을 통한 레퍼토리 확보에도 주력해 왔다.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고, 소극장 시리즈나 다른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공연, 상설 공연이 가능한 대중적 기획 공연 등을 통해서, 연극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립극단〉은 공연 이외에도 연극교실을 열기도 한다. 2000년에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중견 배우들로부터 신체 훈련과 연기를 중심으로 배우면서 민요와 한국무용 등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2001년에는 지역 예술의 해를 맞아 전북 지역 연극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가져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주와 전북의 연극에서 〈전주시립극단〉이 차지하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연극인들이 비교적 안정감 있게 연극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지역 연극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 예산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전업 극단으로서

의 위상도 소중하다. 하지만 제작 환경에 턱없이 못미치는 제작비의 현실화, 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 연습 및 상설 공연장의 현대화, 전문화 등, 시의 의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동시에 급변하는 공연 환경과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작품의 질적 향상과 관객 개발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 또한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5. 나가며 - 전북 공연예술의 특징과 과제

전북의 공연예술을 주마간산적으로 개괄하였다. 전북의 공연예술은 그 뿌리가 깊고 든든하며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통은 전통대로 잘 유지되어 오고 있고, 당대의 격변하는 요구를 담아내려는 젊은 예술가들의 시도도 치열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를 몇 개의 핵심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와 공존이다. 전통예술 분야로 보면 문화재급 명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다양한 공연, 대시습, 소리축제 등의 전국적 위상을 지닌 이벤트들을 들 수 있다. 최근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적 활동과 함께 전북은 명실상부하게 ‘살아 있는 전통 예술’의 고장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국연극제에서 4차례나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저력, 거의 최초라 할 수 있는 관립극단의 출범과 유지, 익산, 군산, 남원 등 소도시 지역에게까지 번져 있는 극단들의 존재감과 민간 소극장 운동 등 연극 분야의 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왕성한 편이다.

둘째, 양질의 관객, 즉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수용자 계층과 그들의 높은 심미안이다. 19세기 이후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온 적극적 예술 애호가 계층의 존재는 ‘귀명창’이라는 명칭이 실증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의 수

준과 질(quality)을 정확히 감별해 내는 남다른 미감을 지닌 존재들이다. 귀명창의 존재는 전통예술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나 연극, 대중음악 등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수준 높은 공연 이벤트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셋째, 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들 수 있다. 100여 년 전 대시습놀이를 만들어냈던 관민상화의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인류학적 유산이다. 현대에 들어서 거의 모든 공연예술 이벤트가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삼아 펼쳐지고 있으니 전북 지역의 오랜 모델이 결국 전국적 모델로 확산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관은 공연시설을 짓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때에 따라 인력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점은 경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공연 공간의 확장이다.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문을 연 뒤로 전북의 공연장은 다변화, 대형화, 현대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시군 단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공연장이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장르별로 특화된 전문 공연장의 존재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외공연의 수요에 맞게, 제대로 된 상설야외공연장을 갖추는 일도 공연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 지역문화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단지 서울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지역성에 대한 자각의 결과이다. 동시에,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등 관광 거점들을 활용해서 스쳐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체류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여러 형태의 공연 관광 상품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지역의 공연예술 전공자들이 이런 현상을 관광 상품으로서의 공연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외면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일 것이다. 예술이 당대

상황의 요구를 비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공연물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동시에 현실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예술적 응전으로서의 작품을 위한 고민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는 동서고금을 가로지르는 공연예술의 오랜 숙명이기도 하다.

인물로 살펴본 전북 120년

조 상 진 | 前 전북일보 논설위원

1. 선정 기준
 2. 정치·행정 분야
 3. 애국 항쟁 분야
 4. 사회 분야
 5. 경제·산업 분야
 6. 학문·교육 분야
 7. 문화·예술 분야
 8. 종교 및 체육 분야
- [부록] 전북 인물 120년

1. 선정 기준

1896년 전라도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는 후 어느덧 120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돌에 이끼가 끼듯 더께가 앉은 것이다. 한 시대의 획을 그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일제 식민지와 6·25 한국전쟁, 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건너왔다. 이러한 동안 수많은 인물들의 크고 작은 스토리가 쌓였다. 역사는 곧 인물의 발자취가 아니던가.

전북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지역을 맛과 멋의 고장, 예향, 충효 또는 인물의 고장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전주정신을 ‘한국의 꽃섬’이라 정립하고 이의 확산에 나서고 있다. 모두 좋다. 실제로 우리 지역 인물들은 국가의 위기에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정치나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대를 이끈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역사의 뒀안길에서 엉거주춤 처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정치의 지역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물 빈곤에 시달려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정량 평가하듯 인구에 비례해 인물이 배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북은 갈수록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가 줄고 있다. 그에 비례해 이렇다 할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를 자각하면서 극복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인물이라는 가늠자를 통해 120년 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을 훑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인물의 선정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인물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 때문이었다. 우선 뼈대를 이렇게 세웠다. 1896~2015년 120년 동안 △ 전북에서 출생 또는 사망했거나 △ 전북에서 주로 활동했거나 △ 전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을 중심으로 삼았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경제·사회·종교·학문·예술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

졌거나 전북의 현재 및 미래에 감동을 준 인물이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모호했다. 나아가 몇 가지 문제점을 던졌다.

첫째, 이미 작고한 인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여부였다. 즉 생존자의 포함 여부였다. 생존자를 배제할 경우 기술하기는 쉬우나 생동감이 없고 반쪽 역사에 지나지 않을 염려가 있었다. 그렇다고 현존 인물을 넣을 경우 객관성과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었다. 결국 작고한 분을 중심으로 하되 생존자의 경우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었다.

둘째, 전북에 영향을 미쳤으나 허물이 명백한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가령 매국노 이완용의 경우 양부(養父)인 이호준이 전라관찰사를, 아들 이완용 자신은 제2대 전북관찰사를 지냈다. 또 이 지역에 간척의 역사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인사도 문제였다. 김성수·김연수 형제를 비롯해 진의종·이만수·서정주·채만식·김해강 등은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남겼다. 그러나 이들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셋째, 현재 충남으로 바뀐 금산군 출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였다. 금산군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북에서 충남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 대신 전남 위도가 전북으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전북에 속했던 금산 출신 인물의 포함 여부가 모호해졌다. 정치계의 거목 유진산과 임영신, 이현상, 김용중 등이 그러했다. 이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넷째, 근본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출신 지역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은 인간과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넘어가기로 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끝으로 촉박한 시간 관계로, 여기에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인물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혹여 잘못 평가된 분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후일 보완하고자 한다.

2. 정치·행정 분야

전남북이 갈리기 직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든 농민과 도시민, 소상공인, 몰락 양반들이 무장봉기해 전국을 휩쓸었던 것이다. 그 정신은 일제 때 광주학생운동, 5·18광주민중화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적으로 30~4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 희생자의 대부분이 호남인, 특히 전북 사람들이었다. 흔히 전주 출신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알려진 1589년 가축옥사로 호남 선비 1,000여 명이 희생된 것보다 더 큰 인물의 손실을 가져왔다. 정읍 출신 전봉준을 비롯해 혁명에 앞장섰던 인물과 기저 민중들이 대거 제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공간과 건국 과정에서 전북 사람들의 활약상은 눈부셨다.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권은 좌우익의 대립과 미군정의 실시 등 혼미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우익 계열의 주요 정당인 한국민주당 창당에 전북 출신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이후 한민당은 우리나라 야당의 뿌리가 되었다. 창당 구성원으로 수석총무에 송진우(전남 담양), 총무에 백관수(고창), 사무총장 나용균(정읍), 감찰위원장 김병로(순창)가 포진하였다. 1945년 12월 송진우가 테러로 피살되자 김성수(고창)가 당수에 올랐다. 당시 한민당은 전북 출신인 김성수와 김병로 등이 주류를 이루어 흔히 ‘호남그룹’이라고 할 만큼 권위가 대단하였다.¹⁾ 또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는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대구 달성)가,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에는 이주상(전주), 윤석구(군산) 등이 참여했다.

1) 전라북도, 『전북학연구(Ⅰ)』, 1997, 281~282쪽.

이와 함께 좌우 대립 속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반탁운동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분할통치로 굳히려 한 신탁통치안에 대해 민족 진영은 반탁을, 좌익 진영은 찬탁운동을 벌였다. 이때 반탁운동의 선봉에 선 이가 이철승(전주)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제헌의회는 전국 선거구 200개 가운데 전북이 22개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후 4·19혁명에 이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펴며 지역 차별을 심화시켰다. 긴 소외와 낙후의 결과는 인물 빈곤을 낳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인사차별정책으로 다시 침체기에 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김성수와 이철승이며 나용균, 윤제술, 소선규, 조한백, 양일동, 송방용, 김철수 등이 눈에 띄는 인물이다.

- 김성수(1891~1955 고창) : 호남정치그룹의 핵심 리더. 넉넉한 재력을 바탕으로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동아일보 창간. 고려대 설립. 제2대 부통령.
- 나용균(1895~1986 정읍) : 동경 2·8 독립선언 주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전라도 대표의원. 4선 의원. 국회부의장. 후손이 백봉신사상 제정.
- 소선규(1903~1968 익산) : 미군정 서울특별시 부시장. 4선 의원. 참의원 부의장. 투사형 야당인.
- 윤제술(1904~1986 김제) : 남성중고 초대교장. 6선 의원. 국회 부의장. 해학과 포효하는 연설. 한학과 서예에 뛰어남.
- 조한백(1908~1997 김제) : 4선 의원. 민주당에서 체신부장관.
- 신현돈(1903~1965 경북 안동) : 의사 출신으로 무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제헌의회에 진출. 초대 전북지사.
- 양일동(1912~1980 군산) : 상해임시정부에 가담. 5선 의원. 반독재 투쟁.

통일당 당수.

- 송방용(1913~2011 김제) : 4선 의원으로 경제에 밝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 헌정회장.
- 유청(1919~2002 전주) : 전주고 교장. 4선 의원.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 이철승(1922~2016 전주) : 반탁운동의 선봉. 7선 의원. 국회 부의장. '40대 기수론의 만행'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헌정회장.
- 김형민(1907~1998 익산) : 송도고보 영어교사. 석유사업. 초대 서울시장.
- 김철수(1893~1986 부안) : 한국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좌익과 우익의 가교 역할 등 통일정부 수립에 노력.
- 유진산(1905~1974 충남 금산) : 항일운동. 7선 의원. 신민당 총재.
- 임영신(1899~1977 충남 금산) : 전주 3·1운동 주도. 여자국민당 창당. 초대 상공부장관. 중앙대학교 설립.
- 이현상(1906~1953 충남 금산) : 공산주의 운동가. 6·25 당시 남한 빨치산 총책임자.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총 44명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전북 출신은 5명이다. 김상협(고창), 진의중(고창), 황인성(무주), 고건(서울), 한덕수(전주) 등이다. 황인성(1926~2010, 무주)은 조달청장과 전북지사, 교통 및 농림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아시아나항공 창설에 기여했다. 고건(1938~, 서울)은 최연소 전남지사를 거쳐 교통 및 농수산부, 내부부장관을 지냈으며 서울시장 2회, 국무총리 2회를 역임했다. 옥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광수(1925~2013, 무주)는 정치인이자 기업인으로 5선 의원을 지냈다. 대한교과서, 전북도시가스를 세웠으며 목정문화재단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장경순(1922~, 김제)은 광복군에 참여했으며 5·16 쿠데타에 가담하였다. 농림부장관과 5선 의원, 최장수 국회부의장(8년), 헌정회장, 자유

수호국민운동본부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와 함께 전북 출신으로 김원기(정읍)가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정세균(장수)이 현재 국회의장으로 있으며 정동영(순창)이 유일하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다. 경제 관료로 진념(부안)과 강봉균(군산)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전철환(익산)과 박승(김제)이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군 출신으로는 고명승(부안)이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해 국군보안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이무영(전주)이 경찰청장을 지냈다.

3. 애국 항쟁 분야

1) 의병활동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은 동학농민혁명과 더불어 척왜(斥倭)로부터 시작해 항일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항쟁의 대서사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상해임시정부를 적통으로 삼은 것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다.

일제강점기 대일 항쟁은 흔히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또 3·1운동 이전의 의병운동은 3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명성황후 시해와 함께 공포된 단발령에 반발하는 유생들의 척사위정의 이념에 의해 일어난 시기(1895)를 제1기, 망국의 을사조약 시기(1905)를 제2기, 한국군 해산 이후(1907)를 제3기로 잡는다.

3·1운동 이전의 대일 항쟁, 특히 의병활동은 근세 유학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 창의호국(倡義護國)을 중시하면서도 최익현은 행동으로, 전우는 제자를 기르는 양태로 나타났다. 최익현과 임병찬, 전해산, 이석용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 최익현(1833~1906, 경기도 포천)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정읍 태

인과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킴. 대마도에서 단식으로 절명.

- 임병찬(1851~1916, 군산) : 최익현과 의병을 일으키다 체포. 1912년 독립 의군부 육군부장 전라남북도 순무대장. 1913년 순무총장 겸 사령장관. 거문도에서 절명.
- 전해산(수용 1878~1910, 임실) : 전남·영광·함평·나주·장성·광주 등에서 의병활동. 1908년 나주 석문동 전투. 게릴라전에 능숙, 일본군에 치명타.
- 이석용(1878~1914, 임실) : 1907년 호남창의맹소 창립. 고창·진안·남원·전주 등에서 일본군과 접전, 타격을 입힘.

이들 의병장 이외에도 다수의 의병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일투쟁을 벌였다. 국가보훈처 공훈록(독립유공자)에 등록된 전북 출신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가는 750여 명에 이른다. 이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은 다음과 같다. 고광순(1848~1907, 전남 담양), 기삼연(?~1908, 전남 장성), 김동신(1872~1933, 충남 회덕), 문태서(1880~1913, 경남 안의), 문형모(1875~1952, 옥구), 박재홍(1845~1910, 남원), 박춘실(1875~1914, 장수), 백락구, 양한규(1844~1906, 남원), 양연영(1875~1910, 순창), 유병우(1849~정읍), 유지명(1881~1909, 완주), 이규홍(1881~1928, 익산).

2) 순절 및 해외 무장활동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치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국지사들이 줄을 이었다. 김영상(1836~1911, 정읍), 장태수(1841~1910, 김제), 김근배(1847~1910, 익산), 정동식(1850~1910, 익산) 등이 그러했다. 또 설진영(1869~1940, 순창)과 이태현(1910~1944, 남원)은 창씨개명에 항의해 목숨을 끊었다. 조희제(1873~1938, 임실)는 임실경찰서에서 식발을 강요하자 자살했다.

더불어 의열단이나 흑색공포단, 광복군 등의 해외 무장활동을 벌인 애국지사들도 있었다. 백정기를 비롯해 이종희(1890~1940, 김제), 김일두(1891~1955, 순창), 정화암(1896~1981, 김제) 등이 그들이다.

- 백정기(1896~1936, 부안) : 만주에서 홍범도 부대 활동. 1928년 동방 무정부주의자연맹 전라도 대표. 흑색공포단. 여순에서 일본 수송선 폭파. 상해에서 일본 대사 암살하려다 체포됨.

3) 3·1운동 관련 항쟁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전 민족이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이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운동이기도 하다.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민족대표 33인 중 전북 출신은 천도교 대표로 박준승, 불교계 대표로 백용성이 참여했고 임규는 민족대표 48인 중의 하나였다.

한편 전북 지역의 3·1운동은 초기에 3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천도교 조직망, 둘째는 기독교 교회망, 셋째는 함태영이 임영신에게 전한 독립선언서를 기전학교와 신흥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한 것이다.²⁾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박준승(1866~1921, 임실) : 천도교 장성 대교구장과 전라도 순유(巡諭)위원장. 1916년 전라도 도사(道師). 3·1운동 민족대표 33인. 2년 동안 옥고 끝에 별세.
- 백용성(1864~1940, 장수) :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일본의 한국 불교

2) 앞의 책.

왜색화 작업에 불교정화운동으로 대항. 불교 대중화를 위해 대각사 창건.
'삼장역회'를 조직해 불경 한글화에 앞장.

- 임꺽(1863~1948, 익산) :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3·1 독립선언서를 일본 동경에서 수상과 의회에 운송하고 옥고를 치렀음.
- 김인전(1876~1923, 충남 서천) : 1914년 전주 서문교회 목사. 전주 지역 3·1운동을 주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전북대표위원. 국무원 학무총장. 의정원 의장 역임.
- 배은희(1888~1966, 대구 달성) : 전주 서문교회 목사. 호남 지방 최초의 유치원 설립. 신간회 전주지부장. 신사참배 반대. 예수장로교회 남부 총회장. 이승만을 '국부'로 칭하고 초대 고시위원장 역임.

4. 사회 분야

1) 법조계

전북 출신들은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었으나 법조계와 언론계에 출중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경제력 취약으로 이들 분야 인재도 예전만 못한 편이다.

어쨌든 건국 이후 법조계는 전북 출신들이 정초(定礎)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 양측에서 '사법의 화신'이라는 김병로와 사도법관 김홍섭, 대쪽 검사 최대교 등 '법조 3성(法曹三聖)'의 역할은 별처럼 빛났다. 우리나라 법조의 여명기에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법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다. 최근 법원과 검찰 출신들이 권력의 시녀로,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 법조 선배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었으면 한다.

- 김병로(1888~1964, 순창) : 순창에서 최익현의 의병에 가담. 일제 때 항

일사건 100여 건을 변론. 1924년 조선변호사협 이사장. 신간회 중앙집행 위원장으로 활동. 1946년 미군정하에서 사법부장, 초대 대법원장 역임. 사법부의 독립.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 김홍섭(1915~1965, 김제) :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역임. 사도법관으로 지극히 인간애를 지닌 서민의 법관으로 추앙받음.
- 최대교(1901~1992, 익산) : 전주지검 검사장, 서울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역임. 검찰위원회 검찰위원. 대쪽검사, 누룽지 검사장으로 소신과 깨끗함의 대명사.
- 이우식(1901~1985, 경북 칠곡) : 해방을 맞아 초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추대됨. 전주향교재단 이사장. 전주 명륜대 설립을 주도.
- 황면주(1920~1976, 순창) :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읍지원장 역임. 향토사와 문화 분야에 기여. 전북도립박물관설립추진위원장.

이들 이외에도 한승헌(진안) 전 감사원장, 이강국(임실) 전 헌법재판소장, 이흥훈(고창) 전 대법관, 이석연(정읍) 전 법제처장 등이 눈에 띄는 인물이다.

2) 의료계

초창기 의료계는 모두 전북 출신 이외의 외부 인물에 의해 인술이 펼쳐졌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농촌 의료 봉사활동에 뛰어든 인사들의 활약상이 선명하다.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가난의 질곡에서 허덕이던 농촌에 들어가 한평생 농촌보건의료 향상에 몸 바쳤던 것이다. 이영춘과 김성환이 대표적이다. 또 외국인으로서 선교와 함께 지역 의료의 질을 월등히 높인 설대위의 업적도 길이 남을 만하다. 또 전북의사회의 기틀을 다진 명대혁, 아낌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황의섭도 전북 사람에게 따뜻한 인술을 펼 인물들이다.

- 이영춘(1903~1980, 평남 용강) : 1935년 조선의 가난한 소작농을 위해 군산 개정의 구마모토 농장에 내려와 정착. 자혜진료소를 열고 평생을 이곳에서 활동. 개정농촌위생연구소, 개정병원을 세움.
- 설대위(1925~2004, 미국 플로리다) : 1954년 미국 남장로교 의료선교사로 예수병원에 파송된 후 30여 년간 봉사활동 펼침. 18년 동안 예수병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최초로 암환자등록사업을 실시해 국내 암 치료 분야의 토대를 구축.
- 명대혁(1905~1970, 평남 대동군) : 1936년 전주에 삼세의원 개업, 30년간 인술을 펼침.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장과 전라북도 초대 의사회장을 역임.
- 황의섭(1914~2009, 평남 광동군) : 1937년 도립 전주병원에 부임해 의술 펼침. 1942년 전주 다가동에 회산병원(황외과)을 차리고 한 자리에서 48년 동안 50여만 명의 환자를 돌봄. 무료 진료 등 따뜻한 사회봉사 실천.

전북 출신으로 활동하는 의료계 현존 인물은 이길여 길의료재단 이사장(군산)이 단연 돋보인다.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원장(김제), 임정기 서울대 연구부총장(김제), 정남식 연세대 의무부총장(전주), 송호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고규영 KAIST 특훈교수 등도 두드러진다.

3) 언론계

앞에서 언급했듯 언론계 역시 전북 출신이 많이 진출했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다.

고창 출신 김성수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아들 김상만이 이어받아 우리나라 대표 언론으로 키웠다. 이후 동아사태 등을 겪으며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언론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북 출신이 중심이 돼 만든 관훈클럽

이다. 관훈클럽은 영향력이 큰 중견 언론인 모임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언론단체다. 1957년 박권상, 조세형, 임방현 등 18명의 기자들이 주축이 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창립했다.

- 박권상(1929~2014, 부안) : 1952년 합동통신 기자로 첫발을 디딘 이래 세계통신 정치부장,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장, 영국특파원, 논설주간 역임. KBS 사장. 관훈클럽 창립의 주역으로 권력으로 부터 언론 독립을 주장. 신군부에 의해 해직. 강직함.
- 이규태(1933~2006, 장수) : 1959년 조선일보 입사. 문화부장, 논설위원, 주필 역임. 23년 동안 이규태 코너를 연재, 국내 언론사상 최장기 칼럼을 기록. 한국학의 대가로 깔끔한 문체가 특징.
- 조세형(1931~2009, 김제) :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역임. 4선 의원.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 박용상(1910~1981, 부안) : 1936년 신문기자로 출발해 중군기자, 편집국장, 사장 역임.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했으며 역강부약을 강조.

이들 이외에도 임방현(전주), 김진배(부안), 최일남(전주)과 진기풍(고창), 이치백(정읍), 김남곤(전주) 등이 활발한 언론활동을 펼쳤다.

5. 경제·산업 분야

전북 출신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경제·산업 분야다. 흔히 ‘2% 경제’가 말해 주듯 전북 출신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병철 삼성그룹(대구 경북), 정주영 현대그룹(강원), 신격호 롯데그룹(부산 경남), 구인회 LG그룹(부산 경남), 박인천 금호그룹(광주 전남)처럼 전국을

호령하고 세계 경제에 명함을 내민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었다. 이는 좋게 보면 호남평야의 풍요 덕분에 배춧지 않았기 때문이요, 좋지 않게 보면 경제에 대한 약착 같은 의지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삼양사, 미원(대상) 등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하림 등이 선전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한때 백화양조, 한국합관, 쌍방울 등이 잘나가는 대표 기업이었다.

- 김연수(1896~1979, 고창) : 1924년 삼양사를 설립, 한국 근대 기업사의 문을 열. 형인 김성수가 정치와 교육에 힘을 쏟은 반면 김연수는 기업에 전념. 섬유, 인공 감미료, 사료,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 한국 경제협회의(현 전경련) 초대 회장. 김상하(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 그의 아들.
- 임대홍(1920~2016, 정읍) : 1956년 부산에서 조미료를 생산하는 동아화성을 설립. 이곳에서 생산한 ‘미원’은 조미료의 대명사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 일본의 아지노모토, 미국의 ADM과 더불어 세계 발효시장의 3대 메이커로 부상. 1997년 대상그룹으로 명칭을 변경.
- 신용욱(1901~1962, 고창) : 우리나라 민간항공의 개척자. 1936년 조선항공사업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945년 대한민국항공사(KNA)를 창립.
- 이만수(1891~?, 군산) : 1924년 군산에 경성고무 설립해 ‘만월표’ 고무신을 생산. 짚신보다 오래 신을 수 있어 날개 돋친 듯 팔렸으며 고무신은 부와 근대화의 상징. 친일에 앞장섬.
- 이봉녕(1924~2010, 완주) : 쌍방울 창립.
- 고관남(1912~1998, 군산) : 한국합관 설립. 세풍그룹.
- 강정준(1915~2001, 김제) : 백화양조. 군산 호원대 설립.
- 지태순(1902~1979, 익산) : 한국벼짚필프주식회사. 한성증권. 익성학원.
- 김형주(1924~2012, 부안) : 삼안코퍼레이션 회장. 수문학의 거두.
- 유기정(1922~2010, 전주) : 삼화인쇄 회장. 세계중소기업연맹 총재. 3선

의원.

- 문병량(1933~1996, 군산) : 익산에서 보배소주 창업.
- 최주호(1914~2003, 임실) : 우성건설. 계성제지.

재계의 생존 인물로는 모나미를 창업한 송삼석(군산),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일진의 허진규(부안)가 활동하고 있으며, 닭고기 기업에서 쇼핑몰 해운업까지 진출한 하림의 김홍국(익산)이 주목받고 있다. 또 중국 북경에서 음식점 ‘대장금’을 운영하는 온대성(전주), 게임 분야에서 한국소프트 김영만(원주), 웹젠이사회 김병관(정읍) 등이 활동하고 있다.

6. 학문 · 교육 분야

120년 동안 전북 지역의 학문과 교육 분야는 세 갈래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리학 등 구학문을 바탕으로 동양적 전통에서 활동한 인물, 둘째는 개화기 이후 서양의 신학문에 기초해 학문 연구를 한 인물, 셋째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제자 양성에 뜻을 둔 인물들이다.

이들 부류 중 첫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전북 유학은 한말의 거유(巨儒) 간재를 정점으로 한다. 간재 전우는 영남학파에 대응하는 기호학파의 정통을 이은 학자로 호남과 충청 일대에 간재학파를 형성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북 지역 유학자들은 대부분 그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 뜨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최병심·송기면·이병은 등 ‘3재(三齋)’가 그의 제자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이정직과 이기 역시 학문과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 전우(1841~1922, 전주) :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어받은 호남의 대표적 선

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청참오적(請斬五賊)의 상소를 올림. 1909년 이후 고군산군도와 계화도에 들어가 15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기름. 성사심제(性師心弟, 본성은 스승이고 마음은 제자) 등을 주장.

- 최병심(1874~1957, 전주) : 최 학자라 불림.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제자를 기르고 지조를 지키며 일제에 항거.
- 송기면(1882~1956, 김제) : 성리학뿐 아니라 서예로 이름을 날림. 송성용 이 아들.
- 이정직(1841~1910, 김제) : 매천 황현, 해학 이기와 함께 호남의 3걸(三傑)로 일컬어짐. 성리학과 실학은 물론 시서화에 높은 경지를 이룸.
- 이기(1848~1909, 김제) : 실학 연구와 항일운동 및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섬.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귀양을 다녀왔으며 서울에서 ‘호남 학보’를 발행.

둘째, 서양 학문에 발을 딛은 학자들은 위에 언급한 구학문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이에 속한다. 이들은 신학문이 우리나라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착근에 큰 역할을 했다. 백남운, 정인승, 김상기, 하경덕, 고형곤, 김선기, 최민순, 김상협, 이강오, 송준호, 박춘호, 허세욱 등을 꼽을 수 있다.

- 백남운(1894~1979, 고창) : 좌파 경제학의 대부. 북조선 막스레닌주의방 송대학 총장,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
- 정인승(1897~1986, 장수) : 국어학자.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름. 전북대 총장.
- 김상기(1901~1977, 김제) : 국사학자. 서울대 문리대학장. 진단학회 · 백 산학회 · 한국고고학회 회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하경덕(1904~1989, 익산) : 사회학자이자 언론인. 연희전문학교 교수. 코 리아타임즈 창간. 서울신문 및 합동통신 사장.

- 고흥곤(1906~2004, 군산) : 철학자.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선의 세계』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 김선기(1907~1992, 군산) : 언어학자. 서울대, 연세대 교수. 한국언어학회 창립.
- 최민순(1912~1975, 진안) : 영성신학자. 해성학교 교장. 가톨릭대 교수. 대구매일신문 사장.
- 이강오(1920~1996, 익산) : 철학. 신흥종교 연구의 대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창립.
- 송준호(1922~2003, 완주) : 사학. 조선 시대 사회사. 양반 연구에 독보적.
- 김상협(1920~1995, 부안) : 정치학. 국무총리. 고려대 총장.
- 박춘호(1930~2008, 남원) : 해양법학. 고려대 교수. 국제해양재판소 초대 재판관.
- 허세욱(1934~2010, 임실) : 중문학. 고려대 교수. 문장가.

생존 학자로는 칸트 연구의 권위자인 한단석(군산) 전 전북대 교수, 중민 이론의 한상진(임실) 전 서울대 교수, 물리학의 이영희(김제) 성균관대 교수, 실명비판의 강준만(전남 목포) 전북대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셋째, 교육입국(教育立國)에 뜻을 뒤 학교를 설립하거나 제자 양성에 앞장선 인물을 들 수 있다. 교육사업은 일제강점기와 정부 수립 초기에 국가 발전의 기초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 사학을 세운 이들은 선구자나 다름없었다. 유직양, 이윤성, 정만채, 김영무, 김가진, 전영창, 백남규, 백남혁, 강홍모, 서정상, 인튼, 방애인 등이 그러했다.

- 유직양(1881~1958, 전주) : 전주의 유지로 전주향교 전교와 이사장을 지냄. 전북대의 전신인 명륜대 설립을 주도.
- 이윤성(1884~1956, 전주) : 익산에 남성학교(화성학원) 설립.

- 정만채(1884~, 군산) : 군산 동산학원 설립. 군산여상.
- 김영무(1891~1953, 순창) : 순창공립농림학교 설립.
- 김가전(1892~1951, 충남 서천) : 신흥학교 교목. 전주 북중 교장. 전라북도 지사.
- 전영창(1917~1976, 무주) : 거창고 설립.
- 백남규(1891~1956, 고창) : 동경의거 참여. 휘문고·중앙고 교유. 이리남성중 교장.
- 백남혁(1905~1982, 고창) : 미군정청 작물과장. 전라북도 농무국장. 이리농대 설립.
- 박길진(1915~1986, 전남 영광) : 불교학. 원광대 총장. 초대 대학교육협의회장.
- 강홍모(1921~2002, 완주) : 목사. 영생학원(전주대 전신) 설립.
- 서정상(1928~2001, 완주) : 우석대 이사장. 전북일보 사장.
- 인톤(1891~1960, 미국) : 신흥학교 교장 당시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됨. 한남대 설립.
- 방애인(1909~1933, 황해도 황주) : 기전학교 교사. 전주고아원 설립 등 헌신적 삶.

생존 인물로는 장명수(전주) 전 전북대와 우석대 총장, 정갑영(김제) 전 연세대 총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7. 문화·예술 분야

전북은 예부터 풍요의 땅이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호남평야를 품고 있어, 그야말로 나라의 곡창(穀倉)이었다. 조정래는

‘아리랑’ 첫 권에서 “여기서 나는 곡식으로 이 땅의 목숨 7할이 먹고 살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고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오히려 서러운 찢박과 착취를 가져왔다.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침탈이 그러했고, 조선 시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 또한 그러했다. 일제강점기에 군산항을 통한 쌀의 수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희생을 치른 이 땅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항상 비주류 또는 야지(野地)로 남았다. 더욱이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이 같은 소외와 찢박은 때론 혁명의 불길로, 때론 감수성 예민한 문화예술로 승화되었다. 문학과 판소리, 서예 등에서 그 재능이 드러났다.

1) 문학 부문

풍광 좋은 자연환경과 이에서 비롯된 풍류, 그리고 저항은 작가정신을 베푸는 데 큰 가르침이 되었다. 뛰어난 작가들도 많이 배출했다. 전북 지역은 시 부문에 이병기·신석정·서정주·고은을, 소설에 채만식·최명희를, 평론에 김환태를 낳았다.

- 이병기(1891~1968, 익산) : 국문학자이면서 현대시조의 아버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름. 고고한 선비정신으로 많은 제자를 배출. 시조와 고전문학에 크게 기여.
- 신석정(1907~1974, 부안) : 목가적인 서정시에 독보적. 평생 전주와 부안 등 전북에 터 잡아 살며 문단 안팎에 많은 제자를 길렀음.
- 서정주(1915~2000, 고창) : 언어의 연금술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 고은(1933~, 군산) : 20세기 세계문학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 끊임없이 감동의 문학을 선사하는 시인.
- 채만식(1902~1950, 군산) : 탁류로 대표되는 풍자소설가, 극작가.

- 최명희(1947~1998, 전주) : ‘혼불’로 대표되는 소설가.
- 김환태(1909~1944, 무주) : 1930년대 문학평론가로 뚜렷한 자취.

이와 함께 시인으로 김대준(해강, 1903~1987, 전주)과 신근(백양촌, 1916~2003, 부안) 등이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고, 일제 때 좌익 계열의 프로 문학가로 김창술(1903~?, 전주)과 이익상(1895~1935, 전주)이 활약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소설 부문에 홍석영(익산) · 유현종(익산) · 윤홍길(정읍) · 양귀자(전주) · 이병천(완주) · 은희경(고창) · 신경숙(정읍) 등이, 시 부문에 김용택(임실) · 안도현(경북 예천)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드라마 부문에서는 노경식(남원) · 이강백(전주) · 이금림(남원) 등이 활약하고 있다.

2) 국악 부문

국악, 그 중에서도 판소리는 전북이 텃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편제 · 서편제가 모두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대사습 등을 통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시조 신재효가 판소리를 집대성했음은 물론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배출했다. 학계에서는 판소리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19세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이중 전기 8명창 시대의 전북 출신은 권삼득, 송홍록, 송광록, 모흥갑, 신만엽, 주덕기 등이 있다. 이어 전북 도제(道制)가 도입된 19세기 후반은 후기 8명창 시대라 일컫는다. 전북 출신은 박유전, 박만순, 김세종, 장자백, 김찬업 등이 있다. 이들 전기와 후기 8명창 시대를 지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을 5명창 시대라 부른다. 이때 유성준, 전도성, 정정렬 등이 활약했다. 해방 이후에는 이기권, 김여란, 박초월, 김소희, 강도근, 이화중선, 오정숙, 홍정택 등이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였다.

- 박유전(1834~?, 순창) : 서편제 판소리 시조.
- 진채선(1847~?, 고창) : 최초의 여류 명창.

- 김세종(19세기, 순창) : 동편제에 독보적, 전주대사습.
- 정정렬(1896~1938, 익산) : 5명창 시대, 창극으로 크게 성공.
- 이기권(1905~1951, 군산) : 전북 판소리를 대표.
- 박초월(1913~1987, 전남 순천) : 수궁가, 여성창극의 1인자.
- 김소희(1917~1995, 고창) : 20세기 최고의 여류명창.
- 강도근(1917~1996, 남원) : 동편제 판소리.
- 홍정택(1921~2012, 부안) : 전주 판소리의 대부.
- 오정숙(1935~2008, 경남 진주) : 동초제 판소리.
- 정노식(1891~1965, 김제) : '조선창극사'의 저자, 독립운동가.
- 신쾌동(1910~1977, 익산) : 거문고의 명인.

3) 미술 · 서예 부문 등

19세기 회화와 서예는 대부분 성리학 등 학문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전북만이 독특한 위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서예는 나름대로 사승관계에 의해 맥을 형성하였다. 우선 회화와 서예 모두 호남 3걸 중 하나인 이정직(김제)을 정점으로 뻗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문인화와 글씨는 조주승-조기석, 이광렬-나갑순, 송기면-송성용, 김희순, 유영환, 최규상 등으로 이어졌다. 산수화 부문에서는 배석린·서병갑·이상길·조중태·임신 등이 있고, 나상목·김종현이 뒤를 이었다. 이들과 달리 채용신은 독특한 위치에서 주목받는 화가였다. 부산진 수군절제사 등 벼슬을 하면서도 인물화를 비롯해 산수 풍속 화조 등 다방면에 빼어난 작품을 남겼다. 특히 그의 초상화는 독보적 수준이다.

- 조주승(1854~1903, 김제) : 시서화 3절(三絶). 송일중-이삼만으로 이어지는 전북 서단의 정통. 아들이 조기석.
- 이광렬(1885~1966, 전주) : 시서화에 뛰어날 뿐 아니라 전주 지역 향토사

와 교육·문화 예술에 기여.

- 최규상(1891~1956, 김제) : 전서에 일가를 이룸. 전북 서단에 큰 영향.
- 채용신(1848~1941, 서울) : 근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화가.
- 정창모(1931~2010, 전주) : 북한 공훈예술가. 이광렬의 외손.
- 허산옥(1926~1993, 김제) : 권번 출신 화가. 예술인의 대모.
- 박래현(1920~1976, 평남 진남포) : 군산에서 활동. 국전 초대 작가.
- 황욱(1898~1993, 고창) : 약필로 독특한 경지.
- 송성용(1913~1999, 김제) : 서예에 출중하고 많은 제자를 기름, 죽란.
- 허반영(1918~2015, 경북 김천) : 군산과 전주서 활동, 조선미술전람회 최
고상, 프랑스 르살롱전 금상.

생존 작가로 박남재(순창) 전 원광대 교수, 전수천(정읍) 한국예술종합학
교 교수, 김병중(남원) 서울대 교수 등 다수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극에 박동화(19011~1977, 전남 영암), 영화에 탁광(탁형연
1923~1999, 전주), 전통무용에 김조균(1940~1998, 전주) 등이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생존 인물로는 무용에 육완순(전주), 텔런트에 박근형(정읍)·최
선자·김수미(군산), 개그맨에 이경실·김병만·박명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로는 송대관(정읍)·현숙(김제)·김민기(익산), 영화감독으로 유
하(고창)·최동훈(전주)·허진호(전주)·김의석(군산) 등이 활약하고 있다.

8. 종교 및 체육 분야

전북은 오래전부터 불교의 전통이 깊었고 천주교 기독교의 전래도 비교
적 빨랐다. 풍요 속에서도 핍박을 받은 탓인지 미래에 희망을 찾는 미륵불과
관음사상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전통과 염원은 조선조 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증산교와 원불교 등 신흥종교의 터전이 되었다.

- 강일순(1871~1909, 정읍) : 증산교 창시.
- 박중빈(1891~1943, 전남 영광) : 원불교 창시.
- 박한영(1870~1948, 완주) : 조선불교 중앙총무원회의 교정.
- 차경석(1880~1936, 고창) : 보천교.
- 박연세(1883~1944, 김제) : 민족 구원. 항일운동.
- 탄허(1913~1983, 김제) : 조계종 초대 역경원장.
- 강희남(1920~2009, 김제) : 목사. 민주화운동.

이와 함께 불교에 송월주(정읍) · 도법(제주도), 원불교에 박청수(남원), 천주교에 문규현(익산)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한편 체육 분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김영구(1897~)가 한국 축구의 대부로, 오수철(1917~, 군산)이 농구로, 김영조(1923~1981, 진안)가 야구 부문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냈다.

바둑 분야에선 조남철이 현대 한국 바둑의 대부였고, 이창호(전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채금석(1904~1995, 군산) : 경평축구대회.
- 조남철(1923~2006, 부안) : 최초의 프로기사, 한국 바둑의 대부, 한국기원 설립.

생존하는 스포츠 스타로 야구에 김봉연(전주), 배드민턴에 박주봉(전주)이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레슬링에 유인탁(김제), 역도에 전병관(진안), 탁구에 양영자(익산), 양궁에 박성현(군산) 등이 있고, 임오경(정읍)이 핸드볼에서 감동의 우생순 신화를 기록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명엽,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 목산 이기경의 삶』, 전북대학교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소, 2012.
- 김재영 외, 『한국역사인물 뒤집어 읽기』, 인물과 사상사, 2001.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1999.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 2000.
- 박종홍 외, 『한국인물사』, 양우당, 1983.
- 신동아편집실, 『한국근대인물백인전』, 동아일보사, 1979.
- 월간조선, 『2001년의 한국, 59인의 초상』, 조선일보사, 1998.
- 이선근 외,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인물탐사기6』, 오늘, 1996.
- 이용엽,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 이이화,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1993.
- 전라북도, 『내 고장 전북의 뿌리』, 1983.
- 전라북도, 『전라북도지(全羅北道誌) 3』, 1991.
- 전라북도, 『전북학연구 1-3』, 1997.
- 전라북도, 『전북의 판소리』, 2003.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1990.
- 전북문화지도 간행위원회, 『전북문화지도 1-3』, 동방미디어·두인·소울, 2004~2006.
- 전북사학회,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인물지 上·中·下』, 1983.
- 전북애향운동본부, 『거룩한 분노는 햇불이 되어』, 1986.
- 전북애향운동본부, 『나라와 더불어 겨레와 더불어』, 1987.
- 전북애향운동본부, 『나라를 위하여 전북을 위하여』, 1990.
-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인물지』, 1991.
- 전북일보사, 『남긴 뜻 천년 흘러 - 20세기 전북인물 50인』, 2000.
- 전북체육사편찬위원회, 『전북체육사』, 2002.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주의 인물』, 2015.
- 전주문화재단,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1907~2006)』, 2007~2008.
- 황미연, 『전북국악사』,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8.
- 한겨레신문사, 『발굴한국현대사인물1·3』, 1991.

2. 연구논문 및 발표 자료 등

- 간재학회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간재학의 심층조명과 간재학파의 사상특징』, 2014.
- 김제시 외,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세계』, 2016.
- 전북대학교 BK21+ 한중 문화 「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한국성리학의 도입 - 신전개 - 현대적 계승과 전북과의 관계에 대한 ‘화이부동’ 시각』, 2014.
- 전북대학교 BK21+ 한중 문화 「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양성사업단, 『부안 3현 김구, 유형원, 전우의 현실인식과 그 사상의 혁신성』, 2015.
-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도 천년, 내일을 준비하자!』, 2015.
- 김성중 외, 「대한민국 이끄는 전북 사람들」, 『전북일보』 2010.01.01.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 연구』 제4집, 신이출판사, 2010.
-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학추진위원회,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 2011.

[부록] 전북 인물 120년

순서	분야	이름	생몰	출생지	내용	비고
1	정치 · 행정	김광수	1925~2013	무주	5선의원, 목정문화재단, 대한교과서, 전북도시가스	
2		김성수	1891~1955	고창	2대 부통령, 동아일보 창간, 고려대 인수	친일
3		김용중	1898~1975	(충남)금산	해외한국연합위원회 외교위원장(미국), 3선개헌 반대, 중립화통일론	
4		김철수	1893~1986	김제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민족사회운동
5		김형민	1907~1998	완주	초대 서울시장	
6		나용균	1895~1986	정읍	제헌 등 4선의원, 국회부의장, 임시의정원 의원	
7		박정근	1898~1980	전주	2선의원, 전라북도지사	딸 박병선 박사(프랑스 국립도서관)
8		백관수	1889~1950	고창	동경 2·8독립선언, 신간회, 한민당, 제헌의원	친일
9		소선규	1903~1968	익산	한민당, 민주당, 4선의원, 참의원 초대 부의장	
10		송방용	1913~2011	김제	4선의원,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 헌정회장	
11		신현돈	1903~1965	경북 안동	제헌의원(무주), 초대 전라북도지사, 내무부장관, 무주의 슈바이처	
12		양일동	1912~1980	군산	5선의원, 통일당 당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3		유진산	1905~1974	(충남)금산	7선의원, 신민당 총재	
14		유청	1919~2002	전주	4선의원, 전주고교장	류직양의 아들
15		윤석구	1881~1950	충남 서천	제헌의원(군산), 초대 체신부장관	

16		윤제술	1904~1986	김제	6선의원, 국회부의장, 남성 중고교장	
17		이주상	1908~1994	전주	민선 전주시장, 백범 보좌, 반독재운동	
18		이철승	1922~1996	서울	7선의원(전주), 국회부의장, 신민당 대표최고의원, 반탁 운동	
19		이현상	1906~1953	(충남)금산	빨치산 대장	
20		임영신	1899~1977	(충남)금산	중앙대 설립, 초대 상공부 장관	
21		조한백	1908~1997	김제	4선의원, 체신부장관	
22		진의중	1921~1995	고창	국무총리, 4선의원	친일
23		함태영	1873~1964	김제, 함북 무산?	3대 부통령,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출신지 논란
24		황인성	1926~2010	무주	국무총리, 전북지사, 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선 의원	
25		고광순	1848~1907	전남 담양	의병장, 전북 의병의 선구자	
26		기삼연	~1908	전남 장성	의병장	
27		김근배	1847~1910	익산	한일합방에 순절	
28		김동신	1872~1933	충남 회덕	지리산 의병장	
29		김영상	1836~1911	정읍	정읍 사창이 나무에서 순절	
30		김인전	1876~1923	충남 서천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전주 서문교회 목사	
31	애국	김일두	1891~1955	순창	대한유생독립단, 신흥무관 학교, 3.1동지회	
32	항쟁	문태서	1880~1913	경남 안의	덕유산 의병장	
33		문형모	1875~1952	군산	의병장	
34		박재홍	1845~1910	남원	남원 의병장	
35		박준승	1866~1921	임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전라도 도사	
36		박춘실	1875~1914	장수	덕유산 의병장	
37		배은희	1888~1966	대구 달성	서문교회 목사, 신사참배 반 대, 예수장로교회 남부총회 장, 초대 고시위원장	

38		백용성	1864~1940	장수	3.1운동 민족대표 33인, 대각사, 삼장역회	
39		백정기	1896~1936	부안	흑색공포단, 동경 무정부주의자연맹 한국 대표, 상해 홍구공원 습격	
40		양연영	1875~1910	순창	회문산 의병장	
41		양한규	1844~1906	남원	남원 의병장	
42		유지명	1881~1909	완주	용담 의병 대장	
43		이규홍	1881~1929	익산	익산 의병장	
44		이보한	1873~?	전주	3.1운동 등 항일, 기인, 결인의 대부	
45		이석용	1878~1914	임실	호남창의맹소 대장	
46		이종희	1890~1940	김제	조선의열단, 조선의용대, 광복군, 임시정부 의정원 전라도 대표	
47		임규	1863~1948	익산	3.1운동 민족대표 48인	
48		임병찬	1851~1916	군산	무성서원에서 최익현과 봉기, 독립의군부 전라남북도 순무총장 겸 사령장관	김개남?
49		전수용 (해산)	1878~1910	임실	의병장, 나주 석문동전투	
50		정화암	1896~1981	김제	동방자유혁명자연맹, 흑색 공포단, 상해해방연맹, 중한 청년연합회, 광복군	
51		조희제	1873~1938	임실	염재야록	
52		최익현	1833~1906	경기도 포천	순창, 태인 봉기	
53	법조	김병로	1888~1964	순창	초대 대법원장, 항일투사 변론	
54		김홍섭	1915~1965	김제	서울고등법원장, 사도법관	
55		이우식	1901~1985	경북 칠곡	대법관, 전주지방법원장, 전주향교재단 이사장, 전주명륜대 건립 주도	
56		최대교	1901~1992	익산	서울고검 검사장	

57		황면주	1920~1976	순창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읍지 원장, 전북도립박물관설립 추진위원장	
58		김성환	1915~	경기도 광주	농촌위생연구소에서 25년간 농촌의료활동, 화호병원, 화 호여중 교장, 민의원	
59	의료	명대혁	1905~1970	평남 대동군	전북의사회 초대회장, 전북도립병원장, 삼세의원	
60		설대위	1925~2004	미국 플로리다주	전주예수병원장	
61		이영춘	1903~1980	평남 용강	개정병원, 농촌의료운동	
62		황의섭	1914~2009	평남 광동군	전주 회산병원, 황외과, 인 술 50년	
63	언론	김상만	1910~1994	부안	동아일보 사주	동아사태
64		박권상	1929~2014	부안	동아일보 편집국장, KBS 사장	
65		박용상	1910~1981	부안	전북일보 중군기자, 편집 국장, 사장	박권상의 형
66		이규태	1933~2006	장수	조선일보 주필, 논설고문	
67		조세형	1931~2009	김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관훈클럽 총무, 4선의원, 국민회의 총재권 한대행	
68	경제 · 산업	강정준	1915~2001	김제	백화양조, 군산 호원대 설립	
69		고판남	1912~1998	군산	한국합관 설립, 세풍그룹	
70		김연수	1896~1979	고창	삼양사 설립, 전경련 초대 회장	친일, 김상홍, 상하
71		김형주	1924~2012	부안	삼안코퍼레이션 회장, 수문 학 거두	
72		문병량	1933~1996	군산	보배소주 창립	
73		신용욱	1901~1962	고창	민간항공 개척	
74		유기정	1922~2010	전주	삼화인쇄 회장, 세계중소기 업연맹 총재, 3선의원	
75		이만수	1891~?	군산	경성고무 '만월표'	친일

76		이봉녕	1924~2010	완주	쌍방울 창립	
77		임대홍	1920~2016	정읍	미원그룹 창업	
78		지태순	1902~1979	익산	한국버죤필프주식회사, 한성증권, 익성학원, 호남은행 설립 좌절	
79		최주호	1914~2003	임실	우성건설, 계성제지	
80		강홍모	1921~2002	완주	목사, 영생학원 설립	
81		고형곤	1906~2004	군산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선의 세계』	고건 부친
82		김가전	1892~1951	충남 서천	신흥학교 교목, 전주북중 교장, 전라북도지사	
83		김상기	1901~1977	김제	서울대 문리대학장, 진단학회 · 백산학회 · 한국고고학회 회장, 문화재위원장	
84		김상협	1920~1995	부안	정치학, 국무총리, 고려대 총장	김연수 아들
85		김선기	1907~1992	군산	언어학자	
86		김영무	1891~1953	순창	순창공립농림학교 설립	
87	학문	김준영	1920~2015	익산	고전문학	
88	교육	박길진	1915~1986	전남 영광	불교학, 원광대 총장, 초대 대학교육협의회회장	
89		박춘호	1930~2008	남원	해양법학, 국제해양재판소 초대 재판관	
90		방애인	1909~1933	황해도 황주	기전여학교 교사, 전주 고아원 설립 등 헌신적 삶	거리의 성자
91		백남규	1891~1956	고창	휘문고 · 중앙고 교유, 이리 남성중 교장, 동경 의거 참여, 에스페란토 보급	
92		백남운	1894~1979	고창	좌파 경제학 대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의장	
93		백남혁	1905~1982	고창	미군정청 작물과장, 전라북도 농무국장, 이리농대 설립	
94		서정상	1928~2001	완주	우석대 이사장, 전북일보 사장	

95	문학	송기면	1882~1956	김제	간재 문하, 『유재집』, 서예	
96		송준호	1922~2003	완주	조선 시대 사회사, 양반 연구, 보학	
97		유직양	1881~1958	전주	전주향교 진교, 이사장, 명륜대 설립 주도	
98		이강오	1920~1996	익산	신흥종교,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창립	
99		이기	1848~1909	김제	실학 연구, 대한자강회, 호남학보	
100		이윤성	1884~1956	전주	화성학원, 남성학교 설립	
101		이정직	1841~1910	김제	유학자, 호남의 삼절, 시서화	
102		인톤	1891~1960	미국	신흥학교 교장, 신사참배 거부로 1937년 폐교, 한남대 설립	
103		전영창	1917~1976	무주	거창고 설립	
104		전우	1841~1922	전주	조선말의 거유(巨儒), 간재(艮齋), 성리학	
105		정만채	1884~?	군산	동산학원 설립, 군산여상	
106		정인승	1897~1986	장수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 국어학, 전북대 총장	
107		최민순	1912~1975	진안	영성신학, 해성학교 교장, 가톨릭대 교수, 대구매일신문사장	
108		최병심	1874~1957	전주	간재 문하, 최학자	
109		하경덕	1904~1989	익산	사회학, 코리아타임즈 창간, 서울신문·합동통신 사장	
110	문학	김대준 (해강)	1903~1987	전주	시인, 교육자	
111		김창술	1903~?	전주	시인, 카프 맹원	
112		김환태	1909~1944	무주	문학평론	
113		서정주	1915~2000	고창	언어의 연금술사, 한국의 대표 시인	친일
114		신근 (백양촌)	1916~2003	부안	시인, 교육자	

115		신석정	1907~1974	부안	목가적 서정시에 독보적, 교육자	
116		이병기	1891~1968	익산	국문학자, 현대시조의 아버지	
117		이익상	1895~1935	전주	프로문학, 언론인	
118		이철균	1927~1987	전주	시인, 교육자	
119		조병희	1910~2002	충남 강경	시조시인, 향토사학자, 서예가	
120		채만식	1902~1950	군산	소설가, 탁류	친일
121		최명희	1947~1998	전주	소설가, 혼불	
122		강도근	1917~1996	남원	동편제 판소리	
123		김세종	19세기	순창	후기 8명창, 동편제 독보적	
124		김소희	1917~1995	고창	20세기 최고의 여류 명창	
125		김여란	1907~1983	고창	정정렬 바디 춘향가	
126		김정문	1887~1935	남원	홍보가	
127		김찬업	19~20세기	고창	후기 8명창	
128		김창록	19~20세기	고창	후기 8명창	
129		박만순	1830?~1898?	고창	후기 8명창	
130		박유전	1835~1906	순창	서편제 시조	
131		박초월	1917~1983	전남 순천	수궁가, 여성 창극 1인자	
132	국악	신쾌동	1910~1977	익산	거문고	
133		오정숙	1935~2008	경남 진주	판소리, 동초제	
134		유성준	1874~1949	남원(구례)	5명창 시대	
135		이기권	1905~1954	군산	전북 판소리를 대표	
136		이화중선	1898~1943	부산	춘향가	
137		장자백	~1907	순창	후기 8명창	
138		장판개	1885~1937	순창	판소리	
139		전도성	1864~?	임실	5명창 시대	
140		정노식	1891~1965	김제	판소리 연구가 『조선창극사』 (최초의 본격적인 판소리 저술), 3.1운동 48인	
141		정정렬	1896~1938	익산	5명창 시대, 창극	

142		진채선	1847~?	고창	최초의 여성 명창	
143		홍정택	1921~2012	부안	전주 판소리의 대부, 수궁가	부인이 김유앵
144		김영창	1910~1988	전주	동광미술연구소	
145		김조균	1940~1998	전주	전통무용, 금파	
146		김희순	1886~1968	전주	조선미술전람회, 한목회	
147		나상목	1924~1999	김제	서양화, 원광대 교수	
148		박내현	1920~1976	평남 진남포	6살에 군산으로 이거, 국전 초대작가	윤보 김기창
149		박동화	1911~1977	전남 영암	연극인, 창작극회	
150		송성용	1913~1999	김제	서예에 뛰어남. 죽란	
151		송수남	1938~2013	전주	동양화, 홍익대 교수	
152		이광렬	1885~1966	전주	시서화에 뛰어날 뿐 아니라 전주 지역 향토사와 교육 문화예술에 기여	
153		이용우	1904~1952	서울	근대 10대 화가	
154		이웅로	1904~1989	충남 홍성	개척사, 프랑스	
155	미술 등	정창모	1931~2010	전주	공훈예술가(북한), 평양미 술대학교 교수	이광렬의 외손
156		조갑녀	1923~2015	남원	한국무용 명인, 민살풀이춤	
157		조기석	1876~1935	김제	서예, 해서, 사군자	
158		조주승	1854~1903	김제	시·서·화삼절, 송일중- 이삼만-조주승	
159		채용신	1848~1941	정읍	근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화가, 초상화 독 보적	
160		최규상	1891~1956	김제	전서에 일가를 이루고 전북 서예에 큰 영향	
161		탁광 (탁형연)	1923~1999	전주	영화인	
162		허반영 (김구풍)	1918~2015	경북 김천	서양화가, 조선미술전람회 최 고상, 프랑스 르살롱전 금상	
163		허산옥	1926~1993	김제	권번 출신 화가, 예술인 대모	
164		황옥	1898~1993	고창	악필로 독특한 경지	

165	종교	강일순	1871~1909	정읍	증산교 창시	
166		강희남	1920~2009	김제	목사, 민주화운동	
167		박연세	1883~1944	김제	민족 구원, 항일	
168		박중빈	1891~1943	전남 영광	원불교 창시	
169		박한영	1870~1948	완주	조선 불교 중앙총무원회의 교정	
170		차경석	1880~1936	고창	보천교	
171		탄허	1913~1983	김제	조계종역경원 초대 원장, 석학	
172	체육	김영구	1897~		농구, 한국 농구의 대부	
173		김영조	1923~1981	진안	야구, 조선 대표	
174		오수철	1917~?	군산	농구	
175		이창호	1975~	전주	세계 바둑 1인자	
176		정남식	1917~2005	김제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국가대표팀 감독	
177		조남철	1923~2006	부안	한국 바둑의 대부	
178		채금석	1904~1995	군산	경평축구대회	